

III. 기준점으로서의 피구금자처우규칙과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비교

1.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과 현행 행형법 령과의 비교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과 우리나라 현행의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교도관 직무규칙, 수용자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수형자 등 교육규칙, 수형자 분류규칙,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가석방관리규정, 교도작업 관용법, 교도작업 관용시행령, 귀휴시행규칙, 귀휴심사위원회규칙,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외국인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규칙,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1) 피구금자의 수용의 기본원칙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6조 제1항: 이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2항: 한편 구금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1조의 3: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형관련법령 |
|------------------|---------------------------|---------------------------|
| 피구금자 수용의 기본원칙 | 제6조 | 행형법 제1조의3 (기본인권의 존중 등) |

2) 피구금자의 분리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8조: 상이한 종류의 피구금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및 처우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분리된 시설 또는 시설내의 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a.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자용으로 할당된 설비의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b.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용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c. 채무로 인하여 수용된 자 및 그 밖의 민사피구금자는 형사피구금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d. 소년은 성년과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2조(구분수용): ①교도소에는 만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②소년교도소에는 만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③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④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행형법 제3조 (구분수용의 예외): ①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②구치소에 취사 기타 작업에 필요한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교도소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년과 소년을 분리수용 한다.

행형법 제4조 (이성의 격리<개정 1995.1.5>): 남자와 여자는 격리수용 한다.

행형법시행령 제51조 (이송시의 남녀 구분 등): 수용자를 이송할 때에는 여자수용자는 남자수용자와, 20세 미만의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정관련법령 |
|----------|---------------------------|--|
| 피구금자의 분리 | 제8조 | 행 형 법 제2조(구분수용), 제3조(구분수용의 예외), 제4조(이성의 격리). 행 형 법 시 행 령 제51조(이송시의 남여 구분) |

3) 거주설비

(1)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9조: ①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인원 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성격이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10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에는

a.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b. 인공 조명은 피구금자가 시력을 해치지 아니라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

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12조: 위생설비는 모든 피구금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제13조: 적당한 목욕 및 샤워설비를 마련하여 모든 피구금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되, 단 온대기후의 경우 그 횟수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피구금자가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모든 부분은 항상 적절히 관리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11조 (독거수용): ①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12.28>

②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개정 1995.1.5>

③작업장의 취업에 있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0.12.22>

행형법시행령 제33조 (혼거수용의 기준): 혼거실에는 3인 이상의 자를 수용한다. 다만,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행형법시행령 제34조 (수용자의 자리지정): 소장은 혼거실·교실·교회당·작업장 기타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용자의 자리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2000.3.28>

행형법시행령 제35조 (혼거실의 대용금지): 혼거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0.3.28>

행형법시행령 제36조 (거실앞의 이름표): 거실의 앞에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 상부에는 수용자의 성명·연령·죄명·형명 및 형기를, 그 하부에는 수용자 번호 및 입소연월일을 각각 기재하되 상부의 난은 이를 가려두어야 한다. <개정

1995.8.26>

행정법시행령 제37조 (혼거실의 정원등의 표시): 혼거실에는 그 면적·정원 및 현재 인원을 기재한 수용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5.8.26>

행정법시행령 제77조 (생활용구의 비치): ①소장은 거실 또는 작업장에 수용 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2000.3.28>

②거실·작업장에 비치하는 기구의 품목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개정 1995.8.26, 2000.3.28>

③거실과 작업장에는 비치된 기구의 품목, 수량을 기재한 품목표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5.8.26, 2000.3.28>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2조 (물품급여의 원칙): 수형자에 대한 물품 급여는 누진제급에 상응하도록 한다. 다만, 식량·음료 기타 건강을 유지함에 필요한 물품은 계급에 의하여 구별하지 아니한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3조 (거실장식): 수형자의 거실에는 책상·서화·화분·거울·시계·달력 및 텔레비전 등의 비품을 둘 수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4조 (차입물품의 사용):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형자 자신의 필요에 의한 차입물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5조 (공동물품의 대여):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사용할 식기 기타 생활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형관련법령 |
|------|--------------------------------------|---|
| 거주설비 |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행형법 제11조(독거수용), 행형법 시행령 제33조(혼거수용의 기준), 제34조(수용자의 자리지정), 제35조(혼거실 의 대용금지), 제36조(거실앞의 이름표), 제 37조(혼거실의 정원등의 표시), 제77조(생활 용구의 비치)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2조(물품급여의 원 칙), 제53조(거실장식), 제54조(차입물품의 사용), 제55조(공동물품의 대여) |

4) 개인위생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15조: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피구금자가 그들의 자존심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발 및 수염을 조발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남자는 규칙적으로 면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23조 (이발과 면도<개정 1995·1·5>):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여자수형자와 3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5>

행형법시행령 제18조 (목욕): 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여자인 신입자가 목욕하는 경우에 그의 계호를 위한 참여는 여자교도관이 하여야한다. <개정 2000.3.28>

③제2항의 규정은 수용중인 여자의 목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76조 (식기 등의 정결):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식기는 특히 정결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타인이 사용한 의류·침구·식기 기타 물품은 세탁 또는 소독한 후가 아니면 이를 다른 수용자에게 급여하지 못한다.

행형법시행령 제92조 (거실의 청결 등): 수용자는 그가 수용된 거실의 청소 및 정돈에 필요한 용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93조 (수형자의 이발 등): ①수형자의 두발은 1월에 1회 이상, 수염은 10일에 1회 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 그러나 소장이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두발은 기르게 할 수 있다.

②삭제 <1995.8.26> [전문개정 1979.8.29]

행형법시행령 제94조 (화장품의 사용): 소장은 수용자에게 화장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5.8.26, 2000.3.28>

행형법시행령 제95조 (목욕의 횟수): 수용자의 목욕횟수는 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소장이 정한다. 다만, 6월부터 9월까지는 5일에 1회 이상, 10월부터 5월까지 7일에 1회 이상의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교도관 직무규칙 제41조 (수용자의 건강관리<개정 1995.9.11>): ①정북교도관은 수용자의 이발·목욕·운동·기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교도관 직무규칙 제106조 (위생검사): ①의무관은 매일 1회 이상 병사의 청

결·온도·환기·기타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②의무관은 교도소등의 부지·건물·기타 모든 설비와 수용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급식 등에 관하여 주 1회 이상 전반적으로 그 위생에 관계된 사항을 시찰하여야 하고, 그 결과 특히 중요한 사항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형관련법령 |
|------|---------------------------|--|
| 개인위생 | 제15조, 제16조 | 행형법 제23조(이발과 면도) 행형법시행령 제18조(목욕), 제76조(식기 등의 청결), 제92조(거실의 청결등), 제93 조(수형자의 이발 등), 제94조(화장품의 사용), 제95조(목욕의 횟수) 교도관직무규칙 제41조(수용자의 건강관 리), 제106조(위생검사) |

5) 의류 및 침구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17조: ① 자기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류는 결코 저급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 모든 의류는 청결하여야 하며 적합한 상태로 간수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③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구금자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너무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18조: 피구금자에게 자기 의류를 입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수용할 때에 그 의류가 청결하고 사용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 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를 급여하여야 하며, 침구는 지급될 때 청결하고 항상 잘 정돈되어야 하고 또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22조 (의류 등의 자비부담<개정 1995.1.5>): ①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②미결수용자가 법률이 정하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의류 및 신발의 자비부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자비부담의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행형법시행령 제73조 (급여의류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는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급여의류와 침구의 품목·색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74조 (식기 등의 급여): ①수용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류와 침구 외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식기 기타 물품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②식기 등의 품목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개정 1995.8.26>

③소장은 수용자에게 화장지·치솔·치약·비누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75조 (의류 등의 급여수량): ①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 및 침구의 수는 1인에 대하여 1매로 한다. 다만, 공동사용 품목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②소장은 날씨·수용자의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류 또는 침구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1995.8.26>

③식기와 생활용품의 수량은 당해 소장이 정한다. <개정 1995.8.26>

④삭제 <1995.8.26>

⑤삭제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85조 (자비부담 의류 등의 허가): ①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입한 의류(수용자의 겉옷을 제외한다)·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39조 (수용자의 의류·침구등의 관리<개정 1995.9.11>): ①정북교도관은 수용자가 지급받은 의류·침구 등의 급여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낭비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②정북교도관은 수용자에게 지급된 급여품이 오염 또는 파손된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교환·수리·세탁 또는 소독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95.9.11>

수용자 의류 및 침구급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형법 제4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심사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수형자의 반성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스스로 개선하고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용자 의류 및 침구급여에 관한 규칙 제2조 (의류의 품목<개정 1995.8.18>):

①재소자의 의류의 품목은 실내복·작업복·특수복·보조의 및 의복의 부속물과 모자 및 신발로 한다.<개정 1995.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류의 품목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9.2, 1995.8.18, 1996.12.28>

1. 실내복 및 작업복: 겨울옷·여름옷 및 봄·가을옷
2. 특수복: 우량수형자복·외부통근자복·호송복·교육훈련복·환자복·보이스카우트복·운동복 및 겨울잠바. 이 경우 우량수형자복·외부통근자복·호송복은 겨울옷·여름옷 및 봄가을옷 3종으로 구분하며, 환자복 및 보이스카우트복은 겨울옷과 여름옷 2종으로 구분한다.
3. 보조의: 위생복·보호복·조끼 및 비옷
4. 의복의 부속물: 내의(런닝셔츠·팬츠 및 겨울내의)·장갑·양말 및 허리띠
5. 모자: 작업모·외부통근자모·우량수형자모·교육훈련모·보이스카우트모 및 방한모. 이 경우 보이스카우트모는 겨울모 및 여름모 2종으로 구분한다.
6. 신발: 고무신·운동화·방한화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형관련법령 |
|------------|---------------------------|---|
| 의류 및 침구 | 제17조, 제18조, 제19조 | 행형법 제22조(의류 등의 자비부담) 행형법시행령 제73조(급여의류등), 제74조 (식기등의 급여), 제75조(의류등의 급여수 량), 제85조(자비부담의류 등의 허가) 교도관직무규칙 제39조(수용자의 의류,침구 등의 관리) 수용자의류및침구급여에관한규칙 제1조(목 적), 제2조(의류의 품목) |

6) 급식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20조: ① 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급여하여야 한다.

② 모든 피구금자는 필요할 때 언제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21조 (급여<개정 1995·1·5>): ①수용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 <개정 1995·1·5>

②식량급여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행형법시행령 제78조 (주식·부식 등의 급여)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음식물은

주식·부식·음료 기타영양물로 하되 필요한 영양을 보급할 수 있는 정도의 것 이어야 한다.<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79조 (주식의 혼합): ①주식은 쌀과 보리의 혼합으로 한다.<개정 1995.8.26>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곡류를 변경하거나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

행형법시행령 제82조 (특식의 급여): 소장은 국경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84조 (환자의 음식물): 환자의 주식·부식 기타 영양물은 소장이 정한다.<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88조 (자비부담음식물의 종류 등): 자비부담 음식물의 종류 및 분량은 당해 소장이 정한다. <개정 1995.8.26>

교도관 직무규칙 제53조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수용자에 대한 조치<개정 1995.9.11>): ①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부당성을 깨우쳐 식사를 하게 하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②소장은 수용자가 식사를 계속하지 아니하여 그의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영양주사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의료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교도관 직무규칙 제105조 (부식물의 검사): ①의무관은 부식물수령에 참여하여 그 신선도등 품질을 확인하여 당해 물품검사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검사 공무원은 의무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②의무관은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주·부식 등 음식물의 검사에 참여하여 식중독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수용자 주·부식급여규칙 제1조 (적용범위):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와 보호감호소(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이하 "수용자"라 한

다)에 대한 주·부식의 급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2.26, 2001.8.31>

수용자주·부식급여규칙 제2조 (주·부식의 총열량): 주·부식의 총열량은 1인당 1일 2,500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재소자 주·부식급여규칙 제1조 (적용범위): 교도소·소년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외국인(이하 "외국인재소자"라 한다)에 대한 주·부식의 급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외국인재소자 주·부식급여규칙 제2조 (주·부식의 총열량): 외국인재소자에 급여하는 주·부식의 총열량은 1인당 1일 3천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형관련법령 |
|----|------------------------|--|
| 급식 | 제20조 | <p>행형법 제21조(급여)</p> <p>행형법 시행령 제78조(주식,부식등의 급여), 제79조(주식의 혼합), 제82조(특식의 급여), 제84조(환자의 음식물), 제88조(자비 부담음식물의 종류 등)</p> <p>교도관직무규칙 제53조(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수용자에 대한 조치), 제105조(부식물의 검사)</p> <p>수용자부식급여규칙 제1조(적용범위), 제2조(주부식의 총열량)</p> <p>외국인재소자주부식급여규칙 제1조(적용범위), 제2조(주부식의 총열량)</p> |

7) 운동 및 경기

(1)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21조: ①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피구금자 및 적당한 연령 및 체격을 가진 그 밖의 피구금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24조 (운동 및 목욕): 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행형법시행령 제96조 (수용자의 운동등): ①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이 내의 실외운동을 시행한다. 다만, 작업의 종류에 따라 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8.26>

②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9조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의 개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횟수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정관련법령 |
|------------|---------------------------|---|
| 운동 및 경기 | 제21조 | 행형법 제24조(운동 및 목욕) 행형법시행령 제96조(수용자의 운동등)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9조(경기 또는 오락회의 개최) |

8) 의료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22조: ① 모든 시설에서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업무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 보건행정과의 긴밀한 관계 하에 조직되어야 한다. 의료업무에는 정신이상의 진찰과 적절한 경우 그 치료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 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① 여자시설에서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난 경우 이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된다.

②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자격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하여 모친이 보살필 수 없는 경우 유아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 의사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 후 필요에 따라 면접하고 진찰하여,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환의 의심이 있는 피구금자를 격리하고, 사회복귀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기록하고 작업에 대한 피구금자의 신체적 능력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25조: ①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특히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계속된 구금으로 인하여 또는 구금에 수반된 상황 어느 것에 의해서든 손상되었거나 또는 손상되리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의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고 다음 각호에 대하여 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 a. 식량의 분량, 질, 조리 및 배식
- b. 시설 및 피구금자의 위생과 청결
- c. 시설의 위생관리, 난방, 조명, 및 통풍
- d. 피구금자의 의류 및 침구의 적합 및 청결
- e. 체육 및 경기를 담당하는 기술요원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규칙의 준수

② 소장은 의사가 제25조 제②항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한 보고 및 조언을 참작하여야 하며, 의사의 권고에 찬동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실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안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장은 자기의 보고와 의사의 조언을 즉시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25조 (전염병예방): 소장은 수용자에게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행형법 제26조 (병실수용):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행형법 제27조 (격리수용): 소장은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다른 수용자와 격리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행형법 제28조 (자비치료): 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5>

행형법 제29조 (병원이송<개정 1999.12.28>):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등의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소를 포함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개정 1999.12.28>

행형법 제29조의2 (의료조치):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등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

행형법 제30조 (임산부 등): 임산부와 노쇠자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행형법시행령 제12조 (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교도소 등의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5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 소장은 교도소 등에 전염병에 걸린 자를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격리병실 기타 전염병에 걸린 자를 수용할 적당한 시설에 격리수용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6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거절): 소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수용을 지휘한 기관과 당해 교도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1979.8.29,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7조 (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절차):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50조 (타소 이송시의 건강진단): ①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교도소 등 소속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진찰을 하게 하고 이송이 건강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송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송받을 교도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97조 (수용자의 건강진단): ①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 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 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98조 (전염병의 예방조치): 소장은 전염병의 유행지를 출발 또는 통과한 수용자에 대하여는 수용한 날부터 1주 이상 격리시키고 그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99조 (전염병의 예방접종 등): 소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00조 (자비부담 음식물의 공급금지): 소장은 전염병이 유행

할 때에는 자비부담 음식물의 공급을 금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01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엄중히 소독한 후 그 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9.8.29>

행형법시행령 제103조 (치료상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은 여자수용자의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부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04조 (중환자의 통지): 소장은 수용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05조 (일반병원이송의 조치): ①소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외부의 병원에 이송하였을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병원에 이송된 자가 입원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소시키고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46조 (징벌집행중의 건강진단): 금치의 집행 중에 있는 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그 건강상황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1.5.20,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48조 (징벌집행종료와 진단): 소장은 금치를 받은 자가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으로 하여금 그의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1.5.20, 1995.8.26>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96조 (환자의 진료): 의무관은 환자를 진료한 때에는 수용자 진찰부 및 당해 수용자의 병력부에 그 병명·증세·과거병력·처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용자 진찰부는 매일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9.11, 2000.10.14>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07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①의무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1. 작업 및 운동의 종류 또는 그 방법·급식 등에 수용자의 보건을 위하여 부적당한 것이 있는 때

2. 신입자 또는 수용자중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자,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 또는 폐질 및 위독한 상태에 빠진 자가 있는 때

3. 신입자 또는 수용자의 체질·병증·기타 건강상태로 인하여 구금·작업·급식 기타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4. 질병으로 인하여 징벌의 집행 또는 석방에 지장이 있는 때

5. 질병을 숨기거나 꺾병하는 자가 있는 때

6. 환자를 병사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때

7. 환자를 일반병원에 이송하거나 교도소의 의무관이 아닌 의사로 하여금 직접 또는 보조치료를 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

8. 기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②약무담당 공무원 및 간호사는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정관련법령 |
|----|---------------------------------|---|
| 의료 |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 <p>행정법 제25조(전염병예방), 제26조(병실수용), 제27조(격리수용), 제28조(자비치료), 제29조(병원이송), 제29조의2(의료조치), 제30조(임산부 등)</p> <p>행정법시행령 제12조(신입자의 건강진단), 제16조(전염병에 걸린자의 수용거절), 제17조(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 제50조(타소 이송시의 조치), 제97조(수용자의 건강진단), 제98조(전염병의 예방조치), 제99조(전염병의 예방접종등), 제100조(자비 부담음식물의 공급금지), 제101조(전염병에 걸린자의 조치), 제103조(치료상의 조치), 제104조(중환자의 조치), 제105조(일반병원 이송의 조치), 제146조(징벌집행중의 건강진단), 제148조(징벌집행종료와 진단)</p> <p>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96조(환자의 진료), 제10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p> |

9) 규율 및 징벌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27조: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28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라도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② 그러나 이 규칙은 특정한 사고, 교육 또는 스포츠 활동이나 책임을 직원의 감독 하에 처우목적을 위하여 그룹으로 분류된 피구금자들에게 맡기는 자치에 기초한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29조: 다음 각호의 각항은 항상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a.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 b. 부과할 징벌의 종류 및 그 기간
- c. 징벌권을 갖는 기관

제30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도 이와 같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되며 동일한 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받지 아니한다.

②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하여 주장되는 위반을 통고 받고 이에 대해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징벌받지 아니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사건의 철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③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수용자는 통역자를 통해 자신의 항변을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31조: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제32조: ① 금지 또는 감식의 징벌은 의사가 그 피구금자를 진찰하고 서면으로 그가 그러한 징벌에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해서는 안된다.

② 위 항은 피구금자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을 침해하는 어떠한 징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징벌은 제31조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거나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③ 의사는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는 피구금자를 매일 방문하여야 하며, 신

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징벌의 정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에게 그 취지를 조언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45조 (규율 등): ①수용자는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행형법 제46조 (징벌): ①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1. 형법·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2. 자해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흉기·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소지·사용·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12.22, 1995.1.5, 1999.12.28>

1. 경 고
2.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3.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 이내의 금치

③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신설 1999.12.28>

④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12.28>

행형법 제47조 (징벌위원회): ①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②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 등의 부소장과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5.1.5, 1999.12.28>

행형법 제48조 (징벌집행의 정지, 면제<개정 1999.12.28>): ①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행형법 제48조의2 (징벌집행의 유예): ①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행형성적, 뉘우치는 빛 등 그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2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 당해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유예한 징벌을 즉시 집행한다.

③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규율위반행위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행형법시행령 제143조 (징벌혐의자의 수용): 소장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 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사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징벌의 집행): ①징벌은 징벌의 선고가 있는 후 지체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②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

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③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1.5.20, 1995.8.26>

④소장은 수용자가 금치의 처분을 받아 접견 및 서신수발이 금지된 경우에는 당해 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0.3.28>

행형법시행령 제147조 (징벌집행의 정지 등): ①소장은 금치의 집행 중에 있는 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하는 당일에 징벌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금치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법원 또는 검사의 소환에 의하여 법정 또는 검찰청에 출석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징벌의 집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징벌양정시 참작사항):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벌을 양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징벌혐의자의 연령·성향·지능·환경 및 건강상태
2. 행위의 동기·수단 및 결과
3. 규율위반 후의 정황
4. 행형성적 및 수용생활태도

[본조신설 2001.1.18]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처우): 소장은 금치 집행중인 자에 대하여 교정위원과의 교화상 면담, 종교서적의 열람, 세면도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8]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형관련법령 |
|------------|--------------------------------------|---|
| 규율 및 징벌 |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 행형법 제45조(규율 등), 제46조(징벌), 제 47조(징벌위원회), 제48조(징벌집행의 정 지, 면제), 제48조의2(징벌집행의 유예) 행형법시행령 제143조(징벌혐의자의 수용), 제145조(징벌의 집행), 제147조(징벌집행의 정지 등)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4조의2(징 벌양정시 참작사항), 제10조의2(처우) |

10) 계구

(1)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33조: 수감, 연쇄, 차꼬 및 구속복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연쇄나 차꼬는 계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 밖의 계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a. 호송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b. 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사를 지시받는 경우

c.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 이 경우 소

장은 지체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계구의 제식 및 그 사용방법은 중앙행정당국이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구는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14조 (계구): ①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 보호구

③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12.28>

④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12.28>

행형법 제14조의2 (강제력의 행사):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자해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도주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기타 교도관 및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력의 행사에 있어서는 수용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교도봉·가스분사기·최루탄 등 보안장비를 사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수용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행형법 제15조 (무기의 사용):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1.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
4. 도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교도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를 하고자 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인명·신체·건물 기타 시설과 기기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교도소등의 밖에서 작업 또는 호송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자 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80.12.22, 1995.1.5, 1999.12.28>

③제14조의2 제1항 후단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관의 무기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12.28>

제45조 (계구의 사용):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46조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①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개정 1995.8.26>

②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5.8.26>

③제1항의 안면보호구는 6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사용 할 수 있다.<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47조 (강제력의 행사 등): ①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은 소장의 명령 없이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행사한 후 즉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교도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교도관 직무규칙 제42조 (수용자의 계호원칙<개정 1995.9.11>): 정복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그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외에 두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9.11>

교도관 직무규칙 제45조 (무기 등의 휴대·점검 및 사용<개정 2000.10.14>):

①교도관이 행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및 그 휴대방법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0.10.14>

②소장은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무기·계구·교도봉·자물쇠(열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보안장비를 매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4>

③소장은 정복교도관에게 무기·계구·교도봉 기타 보안장비의 사용법을 훈련시켜 긴급한 경우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4>

④정복교도관이 행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에는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의 지시를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무기 사용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4>

⑥소장은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계구·교도봉·자물쇠·기타 보안장비를 지급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4>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형관련법령 |
|----|------------------------|--|
| 계구 | 제33조, 제34조 | 행형법 제14조(계구), 제14조의2(강제력의 행사), 제15조(무기의 사용) 행형법시행령 제46조(계구의 분류별 사용 요건), 제47조(강제력의 행사 등)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수용자의 계호원칙), 제45조(무기등의 휴대 점검 및 사용) |

11) 정보 및 불복신청

(1)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35조: ①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규칙,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

당한 수단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피구금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의 정보는 구술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①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평일에 소장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직원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②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한 조사중에 조사관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에게는 소장 또는 기타 직원의 참여 없이 담당조사관 또는 다른 조사관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않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중앙교정당국, 사법관청 또는 기타 관청에 청원하거나 불복신청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④ 모든 요구 또는 불복은 그것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거나 근거 없는 것이 아닌 한 즉시 처리되고 지체없이 회답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6조 (청원): ①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12.28>

②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③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④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신설 1995.1.5>

⑤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12.28>

⑥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행형법 제8조의2 (고지사항):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3. 규율·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본조신설 1999.12.28]

행형법시행령 제6조 (순회점검공무원에의 청원): ①소장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을 하고자 하는 수용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구술청원을 받은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7조 (순회점검공무원의 직책 등): ①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②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한 때에는 소장은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8>

행형법시행령 제9조 (소장과의 면담): ①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0.3.28>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신청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담을 하여야 하며 당해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교도관 직무규칙 제40조 (수용자의 청원등 처리<개정 1995.9.11>): ①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행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서의 제출 등의 방법으로 청원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2000.10.14>

②수용자가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형관련법령 |
|--------------|---------------------------|---|
| 정보 및 불복신청 | 제35조, 제36조 | 행형법 제6조(청원), 제8조의2(고지사항) 행형법시행령 제6조(순회점검고무원에의 청원), 제7조(순회점검공무원의 직책등), 제9조(소장과의 면담) 교도관직무규칙 제40조(수용자의 청원등 처리) |

12) 외부와의 교통

(1)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37조: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38조: ① 외국인인 피구금자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교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② 외교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피구금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게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이러한 자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관과 교통할 수 있는, 전향과 동일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제39조: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열독하고 방송을 청취하며 강연을 듣거나 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18조 (접견):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④접견의 횟수·시간·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행형법 제18조의2 (서신):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④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행형법 제18조의 3 (전화통화): ①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통화요금의 부담 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행형법 제19조 (서신등의 영치): 수용자에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람한 후 이를 영치한다. 다만,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12.28>

행형법 제33조 (신문·도서의 열람<개정 1995.1.5>): ①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그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행형법 제33조의 2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시청): 소장은 수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본조신설 1995.1.5]

행형법시행령 제54조 (접견시간):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55조 (접견의 허가):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56조 (접견의 횟수): ①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3.28>

②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57조 (접견의 예외):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접견시의 기록 등): ①소장은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접견을 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접견시의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 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1.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행형성적이 우수한자

2. 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소장은 수용자 또는 접견자가 접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접견을 종료시킬 수 있다. <신설 2000.3.28>

1. 범죄를 선동·조장하는 때
2. 증거인멸, 도주의 기도 등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때

4. 기타 법 및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

행형법시행령 제59조 (접견의 장소): 수용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60조 (접견시의 외국어 사용금지): 수용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61조 (서신발송의 횟수):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견"은 "서신발송"으로, "회"는 "통"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서신의 검열): ①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법 제6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을 제외한다)을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은 이를 검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3.28>

②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합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등에 제출하게 하며, 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 등에서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95.8.26>

③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신설 2000.3.28>

1.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2. 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4.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법시행령 제64조 (공무소로부터의 서신): 소장은 법원 기타 공무소로부터 수용자에게 송부되어 온 문서는 이를 개봉한 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행정법시행령 제68조 (서신 등의 대서): 수용자가 서신·소송서류 기타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이 대서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9조 (접견장소): ①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실외 적당한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2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실에 한하여 접견을 허가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급 및 제3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접견실외 적당한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0조 (접견시 교도관 불참여):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의 접견에 있어서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1조 (전화사용): ①교도소장 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5회, 제2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3회의 범위 안에서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

도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교도소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전화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교도소장 등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화를 차단할 수 있다.

④전화사용료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한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0조 (신문열람): ①교도소장등은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형자에게 매일 신문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열람은 교도소장 등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고, 열람시간은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에 한한다.

③수형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는 신문의 종류와 수량은 교도소장 등이 정한다.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형관련법령 |
|------------|---------------------------|---|
| 외부와의 교통 | 제37조, 제38조, 제39조 | <p>행형법 제18조(접견), 제18조의2(서신), 제18조의3(전화통화), 제19조(서신등의 영치), 제33조(신문도서의 열람), 제33조의2(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시청)</p> <p>행형법시행령 제54조(접견시간), 제55조(접견의 허가), 제56조(접견의 횟수), 제57조(접견의 예외), 제58조(접견시의 기록), 제59조(접견의 장소), 제60조(접견시의 외국어사용금지), 제61조(서신발송의 횟수), 제62조(서신의 검열), 제64조(공무소로부터의 서신), 제68조(서신등의 대서)</p> <p>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9조(접견장소), 제50조(접견시의 교도관불참여), 제51조(전화사용), 제60조(신문열람)</p> |

13) 도서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40조: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33조 (신문·도서의 열람<개정 1995.1.5>): ①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그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형관련법령 |
|----|---------------------------|---------------------|
| 도서 | 제40조 | 행형법 제33조(신문도서등의 열람) |

14) 종교

(1)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41조: ① 시설 내에 동일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피구금자가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 있는 대표자가 임명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원수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그 조치는 상근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된 유자격 대표자는 정기적 의식을 행하고 수시로 직접 그 종교 소속의 피구금자를 심방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③ 종교적 유자격 대표자에 대한 접근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피구금자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피구금자가 교역자의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그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42조: 실제로 가능한 한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행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정법 제31조 (교회) :① 삭제<1980.12.22>

②수형자가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특별교회를 청원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

행정법시행령 제107조 (교회의 일시): 교회는 휴업일에 한다. 다만, 당해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8.26>

행정법시행령 제108조 (특별교회): 병실 또는 독거실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한 교회는 그의 거실에서 한다. <개정 1995.8.26>

교도관 직무규칙 제75조 (종교교회): 교회직은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종교교회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교도관 직무규칙 제76조 (개인교회): ①교회직은 환자·독거수용자 및 징벌자에 대하여는 매월 2회 이상 개인교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그 시기 및 회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개정 1995.9.11, 2000.10.14>

②교회직은 신입수형자 등(다른 교도소에서 이송되어 온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입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석방예정자에 대하여는 석방 3일전에 개인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교회직은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시 개인교회를 하여 정신적 위안을 베풀어야 한다.

④교회직을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용자에 대하여도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개인교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⑤교회직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교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수용자의 죄질·범죄경력·교육정도·직업·연령·환경 기타 수용자의 신상을 파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6조 (외부의 종교행사 참석): ①교도소장 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수형자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에서 실시하는 교도소 등의 밖에서의 종교행사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②외부의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현행 행형관련법령 |
|----|---------------------------|--|
| 종교 | 제41조, 제42조 | 행형법 제31조(교회) 행형법시행령 제107조(교회의 일시), 제108조(특별교회) 교도관직무규칙 제75조(종교교회), 제76조(개인교회)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6조(외부의 종교행사 참석) |

15)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43조: ① 시설의 규칙에 의하여 피구금자가 소지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금전, 유가물, 의류 및 기타의 물건은 입소할 당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물에 관하여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구금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관물을 양호한 상태에 두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모든 보관금품은 피구금자를 석방할 때 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석방전에 피구금자가 금전을 사용하거나 보관물품을 시설 밖으로 송부하는 것이 허가된 경우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의류를 폐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구금자는 반환받은 금품에 관하여 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에 수용되거나 다른 시설로 이송될 때 이를 자기 가족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41조 (휴대금품의 영치): 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등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5, 1999.12.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행형법 제42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개정 1995.1.5>): ①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개정 1995.1.5>

③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

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1999.12.28>

행형법 제43조 (영치금품의 환부) ①영치금품은 석방할 때에는 본인에게 환부한다.

②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사망후 1년을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개정 1999.12.28>

③도주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교부한다. 다만, 도주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개정 1999.12.28>

행형법시행령 제126조 (영치물품의 조치): 소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의 휴대품을 영치하는 때에는 그 품목·수량·규격 및 평가가격을 영치품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27조 (영치물품의 보관): 소장은 영치물중 금·은·보석·유가증권·인장 기타 귀중품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28조 (영치물품의 매각 등): ①소장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영치물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②영치금은 그 금액을 영치금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행형법시행령 제129조 (영치금 사용의 허가): 소장은 수용자가 그 부모·조부모·배우자·자녀·형제 또는 자매의 부조 기타 정당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치금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30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문구·인지·우표·우편엽서 또는 수용중이나 석방시에 필요한 한도내의 금전과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31조 (영치금품의 사용 등): ①소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가 허가된 금품을 교도소 등에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영치금의 출납·예탁·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1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교부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7.12.31>[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32조 (금품교부의 절차): 소장은 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 기타 수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33조 (차입물품 등의 검사): ①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하여 온 물품과 교부를 허가한 물건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은 의무관으로 하여금 음식물 및 약품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35조 (비밀소지물품의 처리): ①소장은 수용자가 비밀히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영치하여야 하며 영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물품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피석방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36조 (영치물품 폐기처분의 조치):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품목·수량과 처분의 이유 및 연월일을 수거·폐기부에 기재하고 소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37조 (유류품의 교부): ①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의 교부를 받을 자가 원격지에 있을 때에는 그의 청구에 의하여 유류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송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우송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행정법시행령 제138조 (귀속된 금품의 사용범위): 소장은 법 제42조 제3항, 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금품을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피석방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관련법령 |
|--------------|------------------------|---|
| 피구금자의 소유물 처분 | 제43조 | <p>행정법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 제42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제43조(영치금품의 환부)</p> <p>행정법시행령 제126조(영치물품의 조치), 제127조(영치물품의 보관), 제128조(영치물품의 매각등), 제129조(영치금사용의 허가), 제130조(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 제131조(영치금품의 사용), 제132조(금품교부의 절차), 제133조(차입물품의 검사), 제135조(비밀소지품의 처리), 제136조(영치물품 폐기처분의 조치), 제137조(유류품의 교부), 제138조(귀속된 물품의 사용범위)</p> |

16) 피구금자의 이송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45조: ①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환기나 조명이 불충분한 교통수단에 의하거나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피구금자를 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③ 피구금자의 이송은 행정청의 비용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12조 (수용자의 이송<개정 1995.1.5>):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12.28>

교도관 직무규칙 제50조 (수용자의 호송<개정 1995.9.11>): ①정북교도관이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미리 호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②정북교도관은 수용자의 호송중 도주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용자의 동태파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수형자등호송규칙 제7조 (호송시간)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행할 수 없다. 다만, 기차·기선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수형자등호송규칙 제13조 (예비·호송비용의 부담): ①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다만, 피호송자를 교도소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도소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②제11조와 제12조에 의한 비용은 각각 그 교부를 받은 관서가 부담한다.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관련법령 |
|-------------|---------------------------|--|
| 피구금자의 이송 | 제45조 | 행정법 제12조(수용자의 이송) 교도관직무규칙 제50조(수용자의 호송), 수형자등호송규칙 제7조(호송시간), 제13조 (여비 호송비용의 부담) |

17) 시설직원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46조 ① 시설의 적절한 운영관리는 직원의 성실성, 인간성, 업무능력 및 직무에 대한 개인적인 적합성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교정당국은 모든 계급의 직원을 선임할 때 신중히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교정당국은 이 임무가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인식을 직원 및 일반공중 모두에게 끊임없이 일깨우고 유지시키기 위한 적당한 모든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③ 위 목적을 위하여 직원은 전문 교정공무원으로서 상근제를 기초로 임용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직원의 봉급은 적합한 남녀를 채용하여 계속 머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고용상의 복리 및 근무조건은 직무의 고된 성격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 ① 직원은 충분한 수준의 교육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부여받기 전에 일반적 임무 및 특수 임무에 관하여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론과 실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임무를 부여받은 이후 재직중 적당한 기간마다 행하여지는 직무

교육과정에 참가함으로써 자기의 지식 및 직무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제48조: 모든 직원은 항상 모범을 보여 피구금자를 감화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 ① 가능한 한 직원 중에는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50조: ① 소장은 성격, 행정능력, 적절한 훈련과 경험에 의하여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녀야 한다.

② 소장은 자기의 전시간을 그 공적 임무에 바쳐야 하며 비상근적으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③ 소장은 시설의 구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④ 2개소 이상의 시설이 한 사람 소장 소관하에 있는 경우 소장은 각 시설을 자주 순시하여야 한다. 각 시설마다 한 사람의 거주직원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

제51조: ① 소장, 그 대리자 및 기타의 직원 대다수는 최다수의 피구금자의 언어 또는 최다수의 피구금자가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통역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52조: ① 1명 이상의 상근의무관의 근무를 요할 만큼 규모가 큰 시설에서는 적어도 상근의무관 1명은 시설의 구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② 기타의 시설에서는 의무관이 매일 시설을 방문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지체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인접한 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53조: ① 남녀 피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여자구역은 그 구역의 모든 열쇠를 보관하는 담당 여자직원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

② 남자직원은 여자직원의 동반 없이는 여자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여자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게 의하여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직원, 특히 의사 및 교사가 여자시설 또는 여자구역에서 전문적인 직무를 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54조: ① 시설의 직원은 정당방위의 경우 또는 피구금자의 도주기도나 법령에 의한 명령에 대한 적극적·소극적·신체적 저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구금자의 관계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직원이 물리력에 의지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즉시 소장에게 사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정직원은 공격적인 피구금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육체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직무상 피구금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더구나 무기의 사용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17조: ③여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행형법시행령 제18조: ②여자인 신입자가 목욕하는 경우에 그의 계호를 위한 참여는 여자교도관이 하여야한다. <개정 2000.3.28>

③제2항의 규정은 수용중인 여자의 목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8.2
행형법시행령 제28조 (여자수용자의 시찰):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교도관은 야간에 거실 안에 있는 여자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0.3.28]

교도관 직무규칙 제4조 (기본강령): 교도관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근무

하여야 한다.

1. 교도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2. 교도관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상관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를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

3. 교도관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과학적 교정기법을 개발하고 교정행정의 능률을 향상한다.

4. 교도관은 청렴결백하고 근면성실한 복무자세를 지니고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교도관은 풍부한 식견과 고매한 인격이 교정행정발전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인격도야에 부단한 노력을 다한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5조 (근무의 구분): ①교도관의 근무는 그 내용에 따라 보안근무와 사무근무로 구분하고, 보안근무는 근무방법에 따라 주간근무와 주·야간 교대제근무(이하 "교대제근무"라 한다)로 구분한다.<개정 1995.9.11>

②보안근무는 계호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고, 사무근무는 사무처리를 주된 직무로 한다.<개정 1995.9.11>

③보안근무와 사무근무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당해 교도소등의 사정·근무내용등을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1995.9.11>

교도관 직무규칙 제6조 (직무의 우선순위):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자살등 구금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조치는 다른 모든 근무에 우선한다.<개정 1995.9.11>

교도관 직무규칙 제7조 (직무의 처리): 직무는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는 지체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중간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8조 (근무장소 이탈금지): 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

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9조 (교도관의 공동근무): 소장은 2인 이상의 교도관을 공동으로 근무하게 하는 때에는 직무를 분담시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10조 (다른 교도관의 지휘 감독): 정복교도관은 담당직무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의 수행에 참여하는 하위계급의 사복교도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사복교도관의 정복교도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33조 (정복교도관의 담당직무): ①남자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의 지도·처우 및 계호, 교도소등의 경계, 경비 교도대의 운영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1995.9.11>

②여자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여자수용자의 지도·처우 및 계호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1995.9.11>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도소등의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사복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29조 (교도관회의의 설치): 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행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집행방법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 소속하에 교도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30조 (회의의 구성과 소집): ①회의는 소장·부소장 및 각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개정 1995.9.11>

②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63조 (정복교도관에 대한 교육훈련 등 실시): 당직간부는 정복교도관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알리고, 포승술, 폭동진압훈련, 보안장비의 사용·조작훈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4>

교도관 직무규칙 제95조 (의료직공무원의 직무): ①의무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질병치료 등 의료에 관한 사무와 교도소등의 위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1995.9.11>

②약무담당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무관의 처방에 따른 약의 조제와 약품 기타 의료품의 보관 및 수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교도소등의 위생에 관하여 의무관을 보조한다.<개정 1995.9.11>

③간호사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질병에 걸린 수용자(이하 "환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상의 간호 또는 의무관의 진료보조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1995.9.11>

교도관 직무규칙 제103조 (정복교도관등에 대한 의료교육): ①의무관은 의무과 및 병사등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에 대하여 전염병의 예방·소독 기타 의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②의무관은 간병수용자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간호요령·구급요법 등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개정 1995.9.11>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현행 행형관련법령 |
|------|--|--|
| 시설직원 |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 행형법 제17조(신체검사등) 행형법시행령 제18조(목욕), 제28조(여성수용자의시찰) 교도관직무규칙 제4조(기본강령), 제5조(근무의 구분), 제6조(직무의 우선순위), 제7조(직무의 처리), 제8조(근무장소 이탈금지), 제9조(교도관의 공동근무), 제10조(다른 교도관의 지휘감독), 제29조(교도관회의 설치), 제30조(회의구성과 소집), 제33조(정북교도관의 담당직무), 제63조(정북교도관에 대한 교육훈련등 실시), 제95조(의료직 공무원의 직무), 제103조(정북교도관등에 대한 의료교육) |

18) 감독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55조: 행형시설과 업무는 권한 있는 관청에 의하여 임명되고 자격과 경험을 갖춘 감독관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임무는 특히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령에 준거하여 형벌집행 및 행형과 교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관리운영 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교도관 직무규칙 제29조 (교도관회의의 설치): 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행

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집행방법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 소속하에 교도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현행 행형관련법령 |
|----|---------------------------|----------------------------|
| 감독 | 제55조 | 교도관직무규칙 제29조(교도관회의의 설치) |

19) 수형자 분류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67조: 분류의 목적은 아래의 것이어야 한다.

a. 범죄경력이나 나쁜 성격으로 인하여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로부터 격리하는 것.

b.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처우를 용이하게 하고자 수형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

제68조: 가능한 한 상이한 그룹의 수형자의 처우에는 별개의 시설 또는 시설내의 별개의 구역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69조: 적당한 형기에 놓인 수형자에 대하여는 수용 및 인성검사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형자의 개인적 필요와 성격에 관하여 얻어진 정보를 참작하여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11조: ②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삭,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개정 1995.1.5>

행형법시행령 제44조 (분류·처우 및 귀휴): ①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혼거수용):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수용이 당해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혼거수용이 사회성의 함양 등 당해 수용자에게 교화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당해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다른 수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5.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독거실의 부족 등 교도소등의 사정에 비추어 혼거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0.3.28]

행형법시행령 제32조 (혼거수용의 금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거수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0.3.28]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심사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수형자의 반성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스스로 개선하고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1조 (분류조사): ①교도소장 등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에 대하여 분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교도소장 등은 분류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여 수형자의 가정환경 및 보호관계 등을 조사하거나 검찰청·경찰서 기타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교도소장등은 효과적인 분류조사를 위하여 교육학·교정학·범죄학·사회학·심리학 및 정신의학 등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고충상담·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2조 (분류조사 사항) 분류조사시에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7.18>

1. 성장과정
2. 학력 및 직업경력
3. 생활환경
4.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5. 보호관계
6.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 6의2. 상담관찰사항
7. 자력개선의지 및 석방후의 생활계획
8.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3조 (분류검사): ①교도소장 등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심리검사·지능검사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8>

②교정심리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7.18>

1.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인 자
2. 기타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자

③지능검사 및 적성검사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년 이상이고, 연령이 35세미만인 수형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2.7.18>

④교도소장 등은 분류검사 결과를 분류처우심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4조 (분류급의 구분등) 수형자의 분류급은 수용급·개선급·관리급 및 처우급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용급 : 수용하여야 할 시설 및 시설안의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분류급

2. 개선급 :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에 따라 수용하여야 할 시설 및 책임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분류급

3. 관리급 :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분류급

4. 처우급 : 처우의 중요지침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분류급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9조 (시설별 분류수용등): 수형자는 수용급·개선급·관리급 및 처우급등 각 분류급별로 엄중경비시설·중간경비시설·완화경비시설 또는 개방시설에 분류수용하고, 시설별로 단계처우를 실시한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0조 (급별 분류수용과 처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급별·범수·죄명·연령·형기 및 죄질 등을 참작하여 거실지정·작업지정·교육생 선발 또는 훈련생 선발 등을 하여야 한다.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급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현행 행형관련법령 |
|-------|------------------------|--|
| 수형자분류 | 제67조, 제68조, 제69조 | 행형법 제11조(독거수용) 행형법시행령 제44조(분류처우 및 귀휴), 제32조(혼거수용의 금지)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조(목적), 제11조(분류조사), 제12조(분류조사 사항), 제13조(분류검사), 제14조(분류급의 구분등), 제19조(시설별 분류수용), 제20조(급류분류수용과 처우) |

20) 수형자에 대한 특전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70조:수형자의 그룹과 처우방법에 따라 각각 적합한 특전제도를 두어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형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44조: ③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중 1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9.12.28>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휴허가요건 및 귀휴기간에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⑤분류·처우 및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행형법 제51조 (가석방심사<개정 1995.1.5>) ①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가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②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행형성적, 가석방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③심사위원회가 가석방적격결정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12]

행형법시행령 제139조 (귀휴자에 대한 조치): ①소장은 법 제44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1)

행형법시행령 제153조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 등):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여 가석방의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형성적 심사결과 누진계급이 최상급에 속하는 자
2. 제1호 외의 수형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심사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수형자의 반성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스스로 개선하고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규칙은 수형자를 단계별로 분류심사하여 각 단계마다 처우를 달리함과 동시에 특전을 부여하고 있음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6조 (대표자의 선정): ①전체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애로 및 희망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급 수형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제1급 수형자의 호선에 의하여 교도소장 등이 지명한다.

1) 기타 귀휴의 세부시행과 관련된 법률로는 귀휴시행규칙, 귀휴심사위원회규칙 등이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7조 (자치활동): ①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자치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자치활동의 범위는 인원점검·취미활동 및 거실안의 생활 등으로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자치활동 대상 수형자들은 교회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매주 1회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자치활동을 허가받은 수형자가 신체·의류·거실 등에 대한 검사·청소 및 정리정돈 등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도소장 등은 동일 거실안의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자치활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현행 행형관련법령 |
|---------------|---------------------------|--|
| 수형자에 대한 특전 | 제70조 | 행형법 제44조(분류 처우 및 귀휴), 제51조 (가석방심사) 행형법시행령 제139조(귀휴자에 대한 조 치), 제153조(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조(목적), 제46조 (대표자의 선정), 제47조(자치활동) |

21) 수형자 교도작업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71조: ① 교도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 모든 수형자는 작업의 의무를 지되, 의무관이 판정한 신체적, 정신적 적성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③ 통상의 작업일에 수형자로 하여금 활동적으로 작업하게 하기 위하여 유용하고 충분한 작업량이 주어져야 한다.

④ 가능한 한 작업은 석방 후 정직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수형자의 능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⑤ 실용적인 직종의 직업훈련은 그 직종으로 소득을 얻을 능력이 있는 수형자와 특히 소년수를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⑥ 수형자는 적당한 직업선택에 부합하고 시설관리와 규율의 필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제72조: ① 교도작업이 조직 및 방법은 가능한 한 시설 밖의 동종 작업과 유사하게 하여 수형자를 정상적인 직업생활 환경에 준비시켜야 한다.

② 그러나 수형자 및 이들의 직업훈련의 이익은 시설내 사업에서 오는 재정적 이익의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제73조: ① 시설의 공장 및 농장은 되도록 당국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어야 하고 개인 계약자에 의하여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② 수형자는 당국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항상 시설 직원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작업이 정부의 다른 부서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작업에 대한 통상의 충분한 임금이 작업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정당국에 지급되어야 하며, 수형자들의 생산고가 참작되어야 한다.

제74조: ① 자유로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75조: ①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과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복지 원조의 일부로서 요구되는 교육과 그 밖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어야 한다.

제76조: ①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한다.

② 이 제도하에서 수형자는 적어도 수입의 일부를 자신의 용도를 위하여 허가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를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이 제도는 아울러 시설이 수입의 일부를 떼어 저축기금을 마련하여 석방때 수형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35조 (작업): ①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②수형자의 사회복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작업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5.1.5>

행형법 제36조 (휴일의 작업): ①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 청소, 간호, 경리 기타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9.12.28>

②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행형법 제37조 (작업의 면제): 수형자중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행형법 제38조 (신청에 의한 작업):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행형법 제39조 (작업수입 등): ①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형성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제2항의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1999.12.28>

행형법 제40조 (위로금, 조위금): ①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각각 지급한다.

행형법시행령 제115조 (소년수형자의 작업 등):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특히 교양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16조 (작업의 종류와 직업훈련): ①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에게 장래의 생계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17조 (작업의 고지):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 작업과정을 정하여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18조 (작업과정의 표준): 수형자의 작업과정은 당해 수형자의 작업성과 작업상여금의 계산비율 및 작업시간을 참작하여 부과한다. 그

러나 작업과정을 결정하기 어려운 작업은 당일의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19조 (소년수형자 등의 작업과정):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노쇠자·병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20조 (신청에 의한 작업): 신청에 의하여 취업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21조 (도급작업의 인가):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도급작업에 취업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22조 (작업성적의 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23조 (작업의 휴업):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서 "기타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12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1995.8.26> [전문개정 1979.8.29]

행형법시행령 제124조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소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25조 (위로금등의 지급): 소장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 등을 대조·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8조 (작업지정): 교도소장 등은 수형자에게 작업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류처우심사표를 참조하여 작업지정을 하여야 한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72조 (개인작업): ①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작업시간외의 시간에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작업 시간은 1일 2시간이내로 한다. 2)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형관련법령 |
|-------------|---------------------------------------|--|
| 수형자교 도작업 |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 행형법 제35조(작업), 제36조(휴일의 작업), 제37조(작업의 면제), 제38조(신청에 의한 작업), 제39조(작업수입등), 제40조(위로금, 조위금) 행형법시행령 제115조(소년수형자의 작업 등), 제116조(작업의 종류와 직업훈련), 제 117조(작업의 고지), 제118조(작업과정의 표준), 제119조(소년수형자등의 작업과정), 제120조(신청에 의한 작업), 제121조(도급 작업의 인가), 제122조(작업성적의 검사), 제123조(작업의 휴업), 제124조(위로금등의 지급절차), 제125조(위로금등의 지급)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8조(작업지정), 제 72조(개인작업) |

22)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 2) 기타 교도작업과 관련된 법률로는 교도작업관용법, 교도작업관용법 시행령, 교도작업관용
시행법 시행규칙, 교도작업특별회계법,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 교도작업특별회계규칙
등이 있다.

제77조: ① 성인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형자에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는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교육이 포함된다. 문맹자 및 소년수형자의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하고 당국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② 가능한 한 수형자 교육은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하여 수형자가 석방 후 어려움 없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78조: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은 수형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32조 (교육): ①무교육자 또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신미약자 또는 노쇠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9.12.28>

②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촉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1999.12.28>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통근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행형법 제34조 (교육규정 등): 교육의 과목·시간과 신문·도서의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행형법시행령 제112조 (피교육자의 문구 대여): 소장은 교육을 받는 수형자에게는 거실에서 교육에 필요한 문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13조 (정서교육):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동회·연극 또는 영화관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1995.8.26>

수형자등교육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형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형자등"이라 한다)의 학과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9조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의 개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횟수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7조 (영화등 관람): ①교도소장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 자신의 경비부담으로 교도소등의 밖에서의 영화 등의 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②영화 등을 관람하는 때에는 자비부담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형관련법령 |
|--------------------|---------------------------|--|
|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 | 제77조, 제78조 | 행형법 제32조(교육), 제34조(교육규정 등) 행형법시행령 제112조(피교육자의 문구대여), 제113조(정서교육) 수형자등교육규칙 제1조(목적)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9조(경기 또는 오락회개최), 제67조(영화등 관람) |

23) 수형자의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79조: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쌍방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80조: 수형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미리 석방 이후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원조하여 수형자 가족의 최상의 이익과 수형자 자신의 사회복귀를 촉진해야 한다.

제81조: ① 석방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의 또는 그 밖의 부서와 기관은 가능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석방자가 적절한 문서 및 신분증명서를 지급 받고, 돌아갈 적절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며, 기후와 계절을 고려하여 적당하고 충분한 의복을 입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석방 직후의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들 기관의 승인된 대표자는 시설 및 수형자와 필요한 모든 접촉을 가져야 하며 또 수형자의 장래에 대하여 형기 시초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

③ 이 기관들의 활동은 그 노력을 최대한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중앙에 집중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44조: ②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도주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인 수용설비 또는 조치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신설 1995.1.5>

행형법시행령 제114조 (라디오 청취 등): ①소장은 수용자가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 등의 시설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송설비에 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디오의 청취와 텔레비전의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행형법시행령 제159조 (석방예정자 상담 등): 소장은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방 전 3일 동안 석방예정자 거실에 수용하고 그의 장래에 대하여 상담·지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행형법시행령 제161조 (석방자의 행형성적 등 통보):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석방할 자의 성격 및 행형성적 또는 보호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그를 인수하여 보호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행형법시행령 제162조 (석방자의 보호조치):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의 보호를 한국갱생보호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79.8.29, 1995.8.26>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4조 (사회견학): ①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사회견학을 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5조 (사회봉사활동): ①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봉사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80조 (수형자등의 복지담당): ①교회직은 수형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출소후의 생활대책 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형관련법령 |
|------------------------|---------------------------|---|
| 수형자의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 제79조, 제80조, 제81조 | 행형법 제44조(분류처우 및 귀휴) 행형법시행령 제114조(라디오 청취), 제159 조(석방예정자 상담등), 제161조(석방자의 행형성적 등 통보), 제162조(석방자의 보호 조치)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4조(사회견학), 제 65조(사회봉사활동), 제80조(수형자등의 복 지담당) |

24)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82조: ①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교도소에 구금해두어서는 안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기타의 정신장애 또는 정신이상의 수형자는 의료 관리를 받는 전문 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③ 이들 수형자가 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는 동안은 의무관의 특별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④ 행형시설의 의무부서 또는 정신의무 부서는 정신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3조: 필요한 경우 석방후 정신치료를 계속하고 사회 정신학적 사후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해당하는 규정 사항이 없다.

25) 미결수용자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제84조: ① 범죄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유치중인 채 아직 사실심리와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에서 이하 ‘미결수용자’라고 한다.

②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무죄인 자로서 처우되어야 한다.

③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미결수용자에 관하여 준수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결구금자는 이하의 규칙에서 핵심사항에 관하여서만 기술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제85조: ①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분리수용 되어야 한다.

② 소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원칙적으로 별개의 시설에 구금되어야 한다.

제86조: 미결수용자는 기후에 따라 상이한 지역적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침실에서 혼자 자야 한다.

제87조: 시설의 질서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미결수용자는 희망하는 경우 자기의 비용으로 교정당국, 가족 또는 친구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얻어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교정당국이 이들의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8조: ① 미결수용자에게는 청결하고 적당한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가 죄수복을 입는 경우 그 죄수복은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제89조: 미결수용자에게는 항상 작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작업의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결수용자가 작업하기로 선택한 경우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제90조: 미결수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비용으로 재판 및 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해하지 않는 서적, 신문, 필기용구 및 기타 소일거리를 구입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91조: 미결수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92조: 미결피구금자는 구금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가족 및 친구와 통신하고 이들의 방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가 전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한과 감시는 오직 재판과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93조: 미결구금자는 방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변호인의 방문을 받으며 비밀의 지시문서를 준비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결구금자의 희망이 있으면 필요한 필기용구가 주어져야 한다. 미결구금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경찰관 또는 사설직원은 감시 하에 둘 수는 있지만, 담화의 청취가 가능해서는 안 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제22조: ②미결수용자가 법률이 정하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의류 및 신발의 자비부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

가를 하여야 한다.

제63조 (참관금지): 미결수용자와 사형이 확정된 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개정 1995.1.5, 1999.12.28>

제64조 (미결수용자의 분리수용):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고 상호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제65조 (미결수용자의 이발<개정 1995.1.5>): 미결수용자의 두발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개정 1995.1.5, 1999.12.28>

제66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①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②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도소등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주, 증거인멸, 교도소등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1999.12.28]

제67조 (작업과 교회): ①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제31조·제35조 제1항·제36조·제37조·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작업과 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5>

행형법시행령 제171조 (미결수용자중 공범자의 분리수용): ①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에게는 공범부호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미결수용자를 다른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송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 상호관련된 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미결수용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수형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행형법시행령 제172조 (미결수용자의 도주에 대한 조치): ①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행형법시행령 제173조 (미결수용자의 사망 등의 통보): 미결수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한 때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당해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74조 (미결수용자의 작업 등): 소장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교도소등의 밖에서 하는 작업에 취업시킬 수 없다.

[전문개정 1995.8.26]

행형법시행령 제176조 (외부의사의 진찰 등): 형사소송법 제34조·제89조·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3) 비교표

| 구분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우리나라의 행형관련법령 |
|-------|---|--|
| 미결수용자 |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 행형법 제22조(의류등의 자비부담), 제63조 (참관금지), 제64조(미결수용자의 분리수 용), 제65조(미결수용자의 이발), 제66조(변 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제67조(작업과 교 회) 행형법시행령 제171조(미결수용자 중 공범 자의 분리수용), 제172조(미결수용자의 도 주에 대한 조치), 제173조(미결수용자의 사 망 등의 통보), 제174조(미결수용자의 작업 등), 제176조(외부의사의 진찰) |

2. 현행 행형법령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수용자의 인권 보장 및 제한규정

(1) 형행법상의 인간의 존엄존중의 기본원칙

범죄자를 시설에 수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인권의 존중이다. 인권이라 함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천부적 권리 또는 자연권을 말한다. 행형법 제1조의 3 전단에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존중을 선언한 것은 헌법 제10조 2문에서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명시한 것과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7월 10일부터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10조 제1항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인도적이고 인

간의 고유한 존엄을 존중받으면서 처우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행형법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1조에 의하면 “자유 의 박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는 물질적 및 정신적 조건하에서 이하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여 피구금자의 처우에 있어서 인권 존중이 기본원칙이 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존중의 대상으로서 수용자는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위를, 사회국가원칙으로부터 사회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지위를, 그리고 재사회화목적과 관련해서 자발적 협력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얻고 있다. 법치국가 원칙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위는 수용자의 기본권과 문제가 되며, 사회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지위는 다시 재사회화목적에 대한 자발적 협력자로서의 지위와 관련을 맺는다. 수용자의 법적 지위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위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자유시민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에게도 보장되며, 법률에 의해 수형자의 권리를 제한할 때에도 헌법의 가치질서에 부합하는 행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칠 것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1999년 12월 28일 신설된 조문으로 형법 제1조의 3의 규정에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수형자의 인권 제한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법률유보와 그 한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행형법에서 수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도 수형자를 교도행정의 객체로만 취급한다는 실무상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형법은 주로 교정업무의 지침을 규정하고 있고, 수형자의 구체적인 생활조건에 관한 사항은 행형법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행형법이 수형자의 권리장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적 관리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독일의 행형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수형자는 이 법률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유의 제한을 받는다.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유지와 안전을 위해 또는 수용시설 내 질서의 유지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때에만 자유의 제한이 허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81조 제2항에서 “교도소의 안전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해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권리제한은 그것이 그 목적과 상당한 비례관계에 있어야 하고 필요이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형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불이익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를 위해 투입되는 수단이 비례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행형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배종대, 정승환, 93쪽).

(2)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

수형자의 인권제한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본권의 성격상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은 물론이고 신앙의 자유(헌법 제20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등은 인간의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도 제한될 수 없다. 수형자는 종교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일정한 사상을 선택하거나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둘째, 영조물의 존립목적으로 위해 법률로써 제한 가능한 기본권이 있다. 예를 들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은 대대 수형자의 외부접촉을 전제로 하거나 업무의 제한을 수반하므로 상대적인 제한을 받는 경우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수형자의 접견시간 제한, 접견의 횟수, 접견장소, 면담조건, 서신의 횟수 등의 자유의 제한은 교정시설 내의 보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보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그 제한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며, 법률 규정이 아닌 시행령에 의해서 규제되며, 특히 교도소장의 재량에 의해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보안행형에 집착하여 법치국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구금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 자유로써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은 구금의 본질상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자유에 속한다.

2) 여성수용자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점

(1) 공식통계상의 여성범죄자 및 여성수용자의 특성

① 여성수용자의 죄명별 인원

2002년도 『범죄백서』에서 집계된 공식통계상의 여성수형자의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공식통계상으로 분석한 인원은 2001년 여성수용자의 경우 516명으로 여성범죄자만을 수용하여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처우가 이루어진다는 청주여자교도소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교도소에 분계 수용된 여성수용자를 제외한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여성수용자의 죄명별 분류를 하면 2001년 516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형이 선고된 죄명이 살인죄인 경우가 34.7%이며, 향정신성사범의 경우가 22.3%이다. 살인죄의 죄명의 여성수용자의 비율은 1992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35-40%의 비율을 이루어 있어 여성수용자의 경우 상당히 중죄인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향정신성사범인 마약범의 경우 1995년 이전까지 5% 이하의 비율이었다가 1996년 이후부터 10%의 비율로 증가하였다가 1999년, 2001년에는 20%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재산범죄인 사기 횡령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20%의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가 1999년, 2000년에는 13%대의 비율에서 2001년에는 증가하여 1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 여성 수용자의 죄명 별 인원 (1992년-2001년)

단위: 명(%)

|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계 | 342 (100) | 401 (100) | 409 (100) | 454 (100) | 461 (100) | 441 (100) | 500 (100) | 443 (100) | 414 (100) | 516 (100) |
| 절도 | 60 (17.5) | 55 (13.7) | 54 (13.2) | 75 (16.5) | 57 (12.4) | 55 (12.5) | 61 (12.2) | 48 (10.8) | 52 (12.6) | 48 (9.3) |
| 사기/ 횡령 | 58 (17.0) | 102 (25.4) | 111 (27.1) | 97 (21.4) | 124 (26.9) | 94 (21.3) | 93 (18.6) | 61 (13.8) | 56 (13.5) | 90 (17.4) |
| 폭력/ 상해 | 25 (7.3) | 28 (7.0) | 30 (7.3) | 23 (5.1) | 23 (5.0) | 19 (4.3) | 25 (5.0) | 14 (3.2) | 14 (3.4) | 16 (3.1) |
| 강도 등 | 12 (3.5) | 8 (2.0) | 8 (2.0) | 10 (2.2) | 6 (1.3) | 7 (1.6) | 11 (2.2) | 26 (5.9) | 21 (5.1) | 24 (4.7) |
| 살인 | 140 (40.9) | 146 (36.4) | 144 (35.2) | 161 (35.5) | 168 (36.4) | 197 (44.7) | 198 (39.6) | 179 (40.4) | 162 (39.1) | 179 (34.7) |
| 약취 유인 | 15 (4.4) | 13 (3.2) | 12 (2.9) | 9 (2.0) | 5 (1.1) | 8 (1.8) | 9 (1.8) | | | |
| 향정 신 사범 | 16 (4.7) | 31 (6.8) | 30 (7.3) | 26 (5.7) | 46 (10.0) | 51 (11.6) | 84 (16.8) | 94 (21.2) | 76 (18.3) | 115 (22.3) |
| 간통 | | 11 (2.7) | 9 (2.2) | 31 (6.8) | 14 (3.0) | 1 (0.2) | 5 (1.0) | | | |
| 기타 | 16 (4.7) | 7 (1.8) | 11 (2.7) | 22 (4.8) | 18 (3.9) | 9 (2.0) | 14 (2.8) | 21 (4.7) | 33 (8.0) | 44 (8.5) |

② 여성수용자의 형명 및 형기별 인원

여성범죄자의 특성으로 강력범의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가 60.6%이었으며, 전과 1범인 경우가 16.2%로 그 다음이었다. 2범이 8.0%이었으며, 전과가 4범

이상인 경우가 7.8%로 나타났다. 과실범을 제외하고는 강력범의 경우가 전과가 없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여성범죄자의 전과

| 2000년 | 전과 없음 | 전과 | | | | | | | | | | 미상 | 계 |
|----------------|-------------------|-----------------|----------------|----------------|----------------|----------------|----------------|----------------|----------------|----------------|------------------|------------------|--------------------|
| | | 1범 | 2범 | 3범 | 4범 | 5범 | 6범 | 7범 | 8범 | 9범이 상 | 소계 | | |
| 형법범 | 58,785 (48.0) | | 9,346 (7.6) | 5,175 (4.2) | 3,069 (2.5) | 1,913 (1.6) | 1,166 (1.0) | 825 (0.7) | 519 (0.4) | 1,456 (1.2) | | 21,558 (17.6) | 122,459 (100.0) |
| 재산 범죄 | 34,059 (43.7) | | 5,966 (7.6) | 3,306 (4.2) | 2,001 (2.6) | 1,286 (1.6) | 741 (0.9) | 561 (0.7) | 343 (0.4) | 1,014 (1.3) | | 17,114 (21.9) | 78,027 (100.0) |
| 강력 범죄 | 8,448 (60.6) | 2,261 (16.2) | 1,112 (8.0) | 632 (4.5) | 358 (2.6) | 211 (1.5) | 141 (1.0) | 111 (0.8) | 68 (0.5) | 196 (1.4) | 5,090 (36.5) | 412 (3.0) | 13,950 (100.0) |
| 위조 범죄 | 2,021 (50.3) | 493 (12.3) | 220 (5.5) | 124 (3.1) | 70 (1.7) | 36 (0.9) | 40 (1.0) | 29 (0.7) | 9 (0.2) | 44 (1.1) | 1,065 (26.5) | 935 (23.3) | 4,021 (100.0) |
| 공무원 범죄 | 81 (47.4) | 13 (7.6) | 7 (4.1) | 4 (2.3) | - | 2 (1.2) | 1 (0.6) | 2 (1.2) | - | 3 (1.8) | 32 (18.7) | 58 (33.9) | 171 (100.0) |
| 풍속 범죄 | 7,535 (50.8) | 2,759 (18.6) | 1,367 (9.2) | 779 (5.3) | 428 (2.9) | 247 (1.7) | 163 (1.1) | 71 (0.5) | 54 (0.4) | 95 (0.6) | 5,963 (40.2) | 1,329 (9.0) | 14,827 (100.0) |
| 과실 범죄 | 611 (77.9) | 87 (11.1) | 22 (2.8) | 13 (1.7) | 8 (1.0) | 4 (0.5) | 3 (0.4) | 5 (0.6) | - | 3 (0.4) | 145 (18.5) | 28 (3.6) | 784 (100.0) |
| 기타 형법 범죄 | 6,030 (56.5) | 1,398 (13.1) | 652 (6.1) | 317 (3.0) | 204 (1.9) | 127 (1.2) | 77 (0.7) | 46 (0.4) | 45 (0.4) | 101 (0.9) | 2,967 (27.8) | 1,682 (15.8) | 10,679 (100.0) |
| 특별 법범 | 124,507 (60.5) | | | 7,468 (3.6) | 4,304 (2.1) | 2,571 (1.3) | 1,607 (0.8) | 993 (0.5) | 668 (0.3) | 1,835 (0.9) | 66,133 (32.2) | 15,027 (7.3) | 205,667 (100.0) |
| 계 | 183,292 (55.9) | | | | 7,373 (2.2) | 4,484 (1.4) | 2,773 (0.8) | 1,818 (0.6) | 1,187 (0.4) | 3,291 (1.0) | | 36,585 (11.1) | 328,126 (100.0) |

여성수용자의 경우 선고된 형명을 보면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형기를 살펴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가 수형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1년 미만의 형기를 선고받은 경

우로 15.9%를 차지하고 있다(2001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9.3%이며,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10.3%,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징역형인 경우가 10.8%,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의 경우가 13.6%로 나타났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41.0%로 상당수의 여성수형자의 형기가 장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수형자의 형기가 장기인 것은 조사통계 대상으로 5년 이상의 중장기 수형자가 많은 여성전용 구금시설을 중심으로 여성수형자의 특성을 분석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3> 여성수용자의 형명 및 형기별 인원

| |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刑名 | 計 | 342 (100) | 401 (100) | 409 (100) | 454 (100) | 461 (100) | 441 (100) | 500 (100) | 443 (100) | 414 (100) | 516 (100) |
| 懲 役 刑 | 무기 | 40 (11.7) | 48 (12.0) | 50 (12.2) | 53 (11.7) | 53 (11.5) | 63 (14.3) | 46 (9.2) | 52 (11.7) | 48 (11.6) | 48 (9.3) |
| | 15년 이상 | 25 (7.3) | 29 (7.2) | 27 (6.6) | 25 (5.5) | 26 (5.6) | 37 (8.4) | 52 (10.4) | 11 (2.5) | 17 (4.1) | 53 (10.3) |
| | 15년 미만 | 29 (8.5) | 30 (7.5) | 29 (7.1) | 36 (7.9) | 38 (8.2) | 48 (10.9) | 45 (9.0) | 88 (19.9) | 85 (20.5) | 56 (10.8) |
| | 10년 미만 | 51 (14.9) | 54 (13.5) | 52 (12.7) | 63 (13.9) | 65 (14.1) | 72 (16.3) | 72 (14.4) | 70 (15.8) | 63 (15.2) | 70 (13.6) |
| | 5년 미만 | 54 (15.8) | 47 (11.7) | 51 (12.5) | 59 (13.0) | 64 (13.9) | 49 (11.1) | 47 (9.4) | 52 (11.7) | 32 (7.7) | 35 (6.8) |
| | 3년 미만 | 114 (33.3) | 147 (36.6) | 146 (35.7) | 145 (31.9) | 158 (34.3) | 133 (30.2) | 167 (33.4) | 116 (26.2) | 119 (28.7) | 169 (32.7) |
| | 1년 미만 | 29 (8.5) | 46 (11.5) | 54 (13.2) | 73 (16.1) | 57 (12.4) | 39 (8.8) | 71 (14.2) | 48 (10.8) | 48 (11.6) | 82 (15.9) |
| | 6월 미만 | | | | | | | | 6 (1.4) | 2 (0.5) | 3 (0.6) |

③ 여성수용자의 범수별 인원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의 범수별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초범이 6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2년에서 2001년까지도 60%이상의 비율로 초범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재범인 경우로서 2001년에 22.1%이며, 4범 이상은 7.7%를 차지하고 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2범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4범 이상인 경우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4> 여성 수용자의 범수별 인원 (1992년-2001년)

|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計 | 342 (100) | 401 (100) | 409 (100) | 454 (100) | 461 (100) | 441 (100) | 500 (100) | 443 (100) | 414 (100) | 516 (100) |
| 初犯 | 223 (65.2) | 260 (64.8) | 269 (65.8) | 307 (67.6) | 319 (69.2) | 283 (64.2) | 302 (60.4) | 292 (65.9) | 258 (62.3) | 324 (62.8) |
| 2犯 | 43 (12.6) | 62 (15.5) | 60 (14.7) | 61 (13.4) | 76 (16.5) | 73 (16.5) | 102 (20.4) | 85 (19.2) | 86 (20.8) | 114 (22.1) |
| 3犯 | 24 (7.0) | 32 (8.0) | 34 (8.3) | 31 (6.8) | 18 (3.9) | 30 (6.8) | 31 (6.2) | 29 (6.5) | 28 (6.8) | 38 (7.4) |
| 4犯 以上 | 52 (15.2) | 47 (11.7) | 46 (11.2) | 55 (12.1) | 48 (10.4) | 55 (12.5) | 65 (13.0) | 37 (8.4) | 42 (10.1) | 40 (7.7) |

④ 여성수용자의 학과교육 실적

실형선고를 받는 예가 많은 강력범죄를 범한 여성범죄자의 경우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여성범죄자는 35.8%, 대학의 경우가 9.3%, 대학원의 경우가 0.5%이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은 45.6%로 거의 절반 이상의 여성범죄자가 고학력임을 알 수 있다.

<표 3-5> 여성범죄자의 교육정도

| 2000년 | 불취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대학원 | 기타 | 미상 | 계 |
|------------|-----------------|------------------|------------------|-------------------|------------------|----------------|----------------|------------------|--------------------|
| 형법범 | 4,806 (3.9) | 18,125 (14.8) | 18,885 (15.4) | 40,864 (33.3) | 9,557 (7.9) | 465 (0.4) | 1,725 (1.4) | 28,032 (22.9) | 122,459 (100.0) |
| 재산범죄 | 1,900 (2.4) | 8,930 (11.4) | 11,478 (14.7) | 26,107 (33.4) | 5,611 (7.2) | 232 (0.3) | 1,333 (1.7) | 22,436 (28.8) | 78,027 (100.0) |
| 강력범죄 | 1,202 (8.6) | 3,184 (22.9) | 2,481 (17.8) | 4,995 (35.8) | 1,301 (9.3) | 72 (0.5) | 116 (0.8) | 599 (4.3) | 13,950 (100.0) |
| 위조범죄 | 93 (2.3) | 463 (11.5) | 555 (13.8) | 1,521 (37.8) | 426 (10.4) | 21 (0.5) | 48 (1.2) | 894 (22.2) | 4,021 (100.0) |
| 공무원 범죄 | 3 (1.8) | 13 (7.6) | 15 (8.8) | 69 (40.4) | 43 (25.1) | 4 (2.3) | - | 24 (14.0) | 171 (100.0) |
| 풍속범죄 | 788 (5.3) | 3,574 (24.1) | 2,876 (19.3) | 4,623 (31.2) | 581 (3.9) | 24 (0.2) | 124 (0.8) | 2,237 (15.1) | 14,827 (100.0) |
| 과실범죄 | 56 (7.1) | 128 (16.3) | 91 (11.7) | 239 (30.5) | 185 (23.7) | 29 (3.7) | 4 (0.5) | 52 (6.6) | 784 (100.0) |
| 기타형법 범죄 | 764 (7.2) | 1,833 (17.2) | 1,389 (13.0) | 3,310 (31.1) | 1,410 (13.3) | 83 (0.8) | 100 (0.9) | 1,790 (16.8) | 10,679 (100.0) |
| 특별법범 | 7,429 (3.6) | 29,135 (14.1) | 36,242 (17.7) | 89,368 (43.5) | 23,607 (11.5) | 968 (0.5) | 1,651 (0.8) | 17,267 (8.4) | 205,667 (100.0) |
| 계 | 12,235 (3.7) | 47,260 (14.3) | 55,127 (16.8) | 130,232 (39.6) | 33,164 (10.1) | 1,433 (0.4) | 3,376 (1.0) | 45,299 (13.8) | 328,126 (100.0) |

여성수용자 중 살인범죄의 비율이 높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과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초등기초반,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의 학과교육을
하고 있는 여성수용자는 전체 30명으로 전체 516명 중에서 5.8%의 인원이 학
과교육을 받았고, 검정고시 합격인원은 11명이었다.

<표 3-6> 여성 수형자의 학과교육실적 (1992년-2001년)

| | 학과 교육 | | | | | 검정고시합격 | | | |
|------|-------|-----------|-----|-----|-----|--------|----|----|----|
| | 계 | 초등 기초반 | 초등과 | 중등과 | 고등과 | 계 | 중입 | 고입 | 고졸 |
| 2000 | 31 | 10 | 5 | 6 | 10 | 14 | | 6 | 8 |
| 2001 | 30 | 5 | 10 | 5 | 10 | 11 | - | 6 | 5 |

주: 청주여자교도소 통계

⑤ 여성수용자의 직업훈련 실적

여성범죄자의 직업을 강력범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타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영업자인 경우가 28.0%로 가장 많으며, 피고용자인 경우가 19.3%이었다. 전문직의 경우가 1.5%, 공무원인 경우가 0.2%이었다. 기타의 직업 중에는 가정주부도 포함하고 있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다른 범죄유형과 달리 강력범죄의 경우 여성범죄자의 49.8%가 자영자, 피고용자, 전문가 등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어 과실범죄를 제외하고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7> 여성범죄자의 직업

| 2000년 | 자영자 | 피고용자 | 전문직 | 공무원 | 기타 | 계 |
|------------|------------------|------------------|----------------|--------------|-------------------|--------------------|
| 형법범 | 18,393 (15.0) | 22,440 (18.3) | 1,715 (1.4) | 185 (0.2) | 79,726 (65.1) | 122,459 (100.0) |
| 재산 범죄 | 9,053 (11.6) | 15,028 (19.3) | 983 (1.3) | 50 (0.1) | 52,913 (67.8) | 78,027 (100.0) |
| 강력 범죄 | 3,902 (28.0) | 2,667 (19.1) | 213 (1.5) | 23 (0.2) | 7,145 (51.2) | 13,950 (100.0) |
| 위조 범죄 | 542 (13.5) | 805 (20.0) | 68 (1.7) | 42 (1.00) | 2,564 (63.8) | 4,021 (100.0) |
| 공무원 범죄 | 34 (19.9) | 18 (10.5) | 2 (1.2) | 25 (14.6) | 92 (53.8) | 171 (100.0) |
| 풍속 범죄 | 2,225 (15.0) | 2,067 (13.9) | 94 (0.6) | 16 (0.1) | 10,425 (70.3) | 14,827 (100.0) |
| 과실 범죄 | 270 (34.4) | 146 (18.6) | 102 (13.0) | 8 (1.0) | 258 (32.9) | 784 (100.0) |
| 기타형법 범죄 | 2,367 (22.2) | 1,709 (16.0) | 253 (2.4) | 21 (0.2) | 6,329 (59.3) | 10,679 (100.0) |
| 특별법범 | 76,918 (37.4) | 41,102 (20.0) | 3,698 (1.8) | 567 (0.3) | 83,382 (40.5) | 205,667 (100.0) |
| 계 | 95,311 (29.0) | 63,542 (19.4) | 5,413 (1.6) | 752 (0.2) | 163,108 (49.7) | 328,126 (100.0) |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업훈련을 실시하는데 청주여자교도소는 양장, 한복, 미용, 조리, 기계자수 등의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직업훈련을 실시한 수용자의 경우 154명이었고, 기능자격취득이 116명으로 합격율이 75.3%로 나타났다.

<표 3-8> 여성 수형자의 직업훈련실적 (1992년-2001년)

|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훈련인원 | 140 | 127 | 131 | 133 | 132 | 128 | 113 | 118 | 113 | 154 |
| 기능자격 취득 | 88 | 85 | 97 | 120 | 124 | 110 | 104 | 109 | 104 | 116 |

주 : 청주여자교도소 통계

⑥ 여성수용자의 석방사유별 인원

청주여자교도소의 여자수용자의 석방사유를 살펴보면 2001년의 경우 형기종료로 석방되는 비율이 48.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가석방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37.8%이었다. 벌금완납 및 노역종료가 7.5%이었으며, 형집행정지가 1.2%이었다.

<표 3-9> 여성 수형자의 석방사유별 인원 (1992년-2001년)

| | 계 | 형기종료 | 가석방 | 사면 | 형집행 정지 | 벌금완납 노역종료 | 기타 |
|------|--------------|---------------|---------------|----|------------|--------------|-------------|
| 1992 | 20 (100) | 10 (50.0) | 8 (40.0) | | 1 (5.0) | | 1 (5.0) |
| 1993 | 25 (100) | 18 (72.0) | 5 (20.0) | | | 1 (4.0) | 1 (4.0) |
| 1994 | 37 (100) | 18 (48.6) | 17 (46.0) | | | | 2 (5.4) |
| 1995 | 52 (100) | 28 (53.8) | 24 (46.2) | | | | |
| 1996 | 38 (100) | 17 (44.7) | 14 (36.8) | | 1 (2.6) | 3 (7.9) | 3 (7.9) |
| 1997 | 37 (100) | 27 (73.0) | 6 (16.2) | | 1 (2.7) | 3 (8.1) | |
| 1998 | 39 (100) | 19 (48.7) | 11 (28.2) | | | 7 (17.9) | 2 (5.1) |
| 1999 | 70 (100) | 14 (20.0) | 49 (70.0) | | 2 (2.9) | 5 (7.1) | |
| 2000 | 59 (100) | 13 (22.0) | 35 (59.3) | | | 2 (3.4) | 9 (15.3) |
| 2001 | 424 (100) | 206 (48.6) | 158 (37.8) | | 5 (1.2) | 32 (7.5) | 23 (5.4) |

⑦ 여성범죄자의 혼인관계 및 생활정도

여성범죄자 중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61.3%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범죄의 경우와는 달리 오히려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유배우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지만 실제 실형선고를 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가족관계가 해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성수용자의 경우 가족과의 접견 및 유대관계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표 3-10> 여성범죄자의 혼인관계별 분포

| 2000년 | 혼 인 관 계 | | | | | | 계 |
|------------|-------------------|----------------|------------------|-----------------|------------------|------------------|--------------------|
| | 유배우자 | 동거 | 이혼 | 사별 | 미상 | 미혼 | |
| 형법범 | 56,038 (45.8) | 1,802 (1.5) | 13,265 (10.8) | 6,801 (5.6) | 24,230 (19.8) | 20,323 (16.6) | 122,459 (100.0) |
| 재산범죄 | 30,287 (38.8) | 1,129 (1.4) | 8,120 (10.4) | 3,441 (4.4) | 19,784 (25.4) | 15,266 (19.6) | 78,027 (100.0) |
| 강력범죄 | 8,550 (61.3) | 358 (2.4) | 1,491 (10.7) | 1,205 (8.6) | 407 (2.9) | 1,969 (14.1) | 13,950 (100.0) |
| 위조범죄 | 1,750 (43.5) | 45 (1.1) | 452 (11.2) | 200 (5.0) | 919 (22.9) | 655 (16.3) | 4,021 (100.0) |
| 공무원범죄 | 90 (52.6) | - | 9 (5.3) | 5 (2.9) | 52 (30.4) | 15 (8.8) | 171 (100.0) |
| 풍속범죄 | 8,723 (58.8) | 185 (1.2) | 2,286 (15.4) | 971 (6.5) | 1,392 (9.4) | 1,270 (8.6) | 14,827 (100.0) |
| 과실범죄 | 473 (60.3) | 9 (1.1) | 38 (4.8) | 81 (10.3) | 30 (3.8) | 153 (19.5) | 784 (100.0) |
| 기타형법 범죄 | 6,165 (57.7) | 106 (1.0) | 869 (8.1) | 898 (8.4) | 1,646 (15.4) | 995 (9.3) | 10,679 (100.0) |
| 특별법범 | 114,192 (55.5) | 2,659 (1.3) | 17,089 (8.3) | 9,824 (4.8) | 14,677 (7.1) | 47,226 (23.0) | 205,667 (100.0) |
| 계 | 170,230 (51.9) | 4,461 (1.4) | 30,354 (9.3) | 16,625 (5.1) | 38,907 (11.9) | 67,549 (20.6) | 328,126 (100.0) |

여성범죄자의 생활정도를 살펴보면 강력범죄의 경우 형법범의 평균치보다는 훨씬 높은 정도로 생활정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류의 생활정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65.6%로 상당수의 여성범죄자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 형집행 출소 후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을 구해야 할 형편임을 알 수 있다. 여성수용자의 경우에도 재사회 복귀를 위해 시설에서 사회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 3-11> 여성범죄자의 생활정도

| 2000년 | 생 활 정 도 | | | | 계 |
|------------|-------------------|------------------|----------------|------------------|--------------------|
| | 하 류 | 중 류 | 상 류 | 미 상 | |
| 형법범 | 73,915 (60.4) | 23,338 (19.1) | 1,118 (0.9) | 24,088 (19.7) | 122,459 (100.0) |
| 재산범죄 | 46,119 (59.1) | 11,715 (15.0) | 520 (0.7) | 19,673 (25.2) | 78,027 (100.0) |
| 강력범죄 | 9,153 (65.6) | 4,182 (30.0) | 215 (1.5) | 400 (2.9) | 13,950 (100.0) |
| 위조범죄 | 2,238 (55.7) | 810 (20.1) | 43 (1.1) | 930 (23.1) | 4,021 (100.0) |
| 공무원 범죄 | 63 (36.8) | 56 (32.7) | 5 (2.9) | 47 (27.5) | 171 (100.0) |
| 풍속범죄 | 10,005 (67.5) | 3,336 (22.5) | 102 (0.7) | 1,384 (9.3) | 14,827 (100.0) |
| 과실범죄 | 449 (57.3) | 273 (34.8) | 32 (4.1) | 30 (3.8) | 784 (100.0) |
| 기타형법 범죄 | 5,888 (55.1) | 2,966 (27.8) | 201 (1.9) | 1,624 (15.2) | 10,679 (100.0) |
| 특별법범 | 123,272 (59.9) | 65,875 (32.0) | 2,155 (1.0) | 14,365 (7.0) | 205,667 (100.0) |
| 계 | 197,187 (60.1) | 89,213 (27.2) | 3,273 (1.0) | 38,453 (11.7) | 328,126 (100.0) |

(2) 여성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규정검토

① 여성전용 수용시설 및 설비 필요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8조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하며,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자용으로 할당된 설비의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저규칙 제23조에서는 여자시설에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형법에서는 제4조에 남자와 여자는 격리 수용한다는 규정만을 두

고 있다. 현재 행형 실정으로도 여성만을 위한 처우시설은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에 불과하다. 단순히 이성간의 격리수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적합한 행형시설이 필요하다. 계속 증가하는 여성수용자의 수를 고려하면 여성수용자 전용의 시설이 필요하고 그 시설은 여성의 생리적 특성 특히 산전, 산후 간호를 위해 필요한 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전용시설이어야 한다. 현재 여성전용수용시설이 청주여자교도소의 1개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수용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

② 직업훈련의 선택 가능성 및 전문성 제고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71조에 의하면 교도작업은 가능한 한 석방 후 정직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수형자의 능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실용적인 직업훈련은 적당한 직업선택에 부합하고 시설관리와 규율에 필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형법 제35조에 의하면 수용자의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에게 장래의 생계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행형법 시행령 제116조에 의해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 규칙이 수용자에게 원하는 종류의 작업의 선택권을 인정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행형법의 규정은 전적으로 소장이 정하는 규정상의 작업만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선택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실제 여성수용자의 작업현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내용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위한 양장, 자수, 미용, 요리 등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출소 후 많은 여성들에게는 가정주부로서 돌아갈 가정을 이미 상실했거나 경제적인 여건의 어려움으

로 인해 가장으로서의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위해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할 형편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기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직업훈련은 출소 후에 여성수용자에게 독립된 생활의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더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여성수용자에게도 사회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하고,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제시된다는 전제하에 시설관리와 규율의 필요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종류의 직업훈련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③ 가족 접견 등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지37조에 의하면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하에 일정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행형법 제18조는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접견권은 기본권으로 필요한 감독을 전제로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행형법은 필요할 때에는 소장의 재량에 의해서 제한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형법 시행령의 규정형식으로 30분내로 접견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접견횟수를 매월 4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약칭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 1988년 12월 9일 채택)의 부속문서 원칙 제19조에 의하면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를 둔 여성수용자의 경우 그들의 원만한 수형생활과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처우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을 위한 방문접견의 확대 실시로 부모역할 훈련이

나 상담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행은 현행
행형법의 규정에 따른 소장의 재량에 의해 시혜처분이 아닌 여성수용자의 기
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 것이다.

IV. 여성수용자의 처우방향과 실태조사와의 비교

1. 여성수용자 처우규정과 실태조사 결과 비교

1) 피구금자의 수용의 기본원칙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은 이 규칙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제6조 제1항). 그리고 구금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우리나라의 행형법 제1조의 3에 의하면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실태조사상에서 나타난 여성수용자의 차별적 취급 여부

① 성별에 의한 차별

수용생활에서 남자수용자에 비해 여성수용자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 적

인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0.6%이며, ‘있다’는 응답이 19.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5.1%로 나타났다. 여성수용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생활환경의 문제 특히 시설, 교육여건, 운동시간 등에서 남성수용자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다는 응답이 69.3%이다. 또한 대우 내지 처우에서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호소의 출소율에서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0%로 나타났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행형법에서도 인간의 존엄 존중과 평등한 취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2조에서도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을 천명하면서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요인으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출생, 재산 또는 기타 지위를 들고 있다. 행형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요인으로 국적,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만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여성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불평등성은 처우프로그램 자체가 남성수용자에 비해 양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열세에 있으며, 여성수용자의 특수한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여성수용자가 남성수용자에 비해 마약이나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여성수용자는 여성들만의 건강이나 의료문제가 야기되는 데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자수용자에 비해 여성수용자가 생활환경, 대우 내지 처우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제법 많았다. 성별에 의한 차별이 있다고 여기는 원인에는 여성교도소의 시설이 청주여자교도소를 제외하고는 전용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시설의 열악함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대우 내지 처우 부분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의견 전국의

교도소에 5-50명씩 분계수용하고 있는 여성수용자의 현황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전국의 시설에 분산되어 있는 소수의 여성수용자에게는 체계적인 교정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공평한 처우라 함은 여성수용자의 처우를 남자수용자와 동등하게 처우해야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생리적 특성과 사회적 정신적 특성에 따른 적절한 교우처우의 환경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말한다.

2) 피구금자의 분리

(1)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상이한 종류의 피구금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및 처우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분리된 시설 또는 시설내의 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특히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자용으로 할당된 설비의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4조는 남자와 여자는 격리수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형법 제3조에서 구분수용의 예외로서 구치소에 취사 기타 작업에 필요한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수용자를 이송할 때에는 여자수용자는 남자수용자와, 20세 미만의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실태조사상의 여성수용자의 분리 환경

① 여성수용자의 전용수용시설 채우 및 일반교도소 채우

2001년의 법무부 교정국 통계자료상으로 여성수용자의 구성비는 수형자의 경우 1992년에 여성비율이 2.8%인 것이 2001년에는 1,359명으로 여성비율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1992년 여성비율이 6.2%인 것이 2001년에는 여성비율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수용자는 일반교도소의 분계된 장소에 수용하여 식당의 취사부 등으로 작업지정을 하여 채우하는 경우와 여성전용교도소에 수용하여 채우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기결여성수용자의 대부분은 전국의 교정시설에 흩어져서 수용되고 있으며, 유일하게 청주여자교도소만이 500여명의 수형자를 집금하여 채우고 있다. 각 지방교정청의 교도소에 있는 여성수용자는 식당 취사부나 청소원 등의 관용부 요원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각종의 교정채우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채 출소하게 된다.

② 입소시의 분류심사

입소할 때 분류심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응답자의 32.6%가 분류심사를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67.4%는 분류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분류심사시 검사를 받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아무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5.2%이었으며, 적성검사를 받았다는 경우가 29.1%, 인성검사를 받았다는 응답이 28.4%이었다.

수형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된 교정심리검사는 모든 신입 수용자에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수용자의 경우 그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남성의 기준으로 여성수용자를 평가하고 있다. 여성수용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범죄성향 등이 남성수용자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동일한 분류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여성수용자의 적극적 처우를 받을 권리

남성수용자에 비해 적은 수의 여성수용자를 위해서 독립된 교정시설을 설치하고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비용과 편익의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수용자에 대한 방치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성수용자의 수적 열세는 시설의 수를 제한하게 되고 시설의 수가 적다는 것은 시설의 다양성이 무시되고 획일화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양질의 전문적 처우를 제공하기 어렵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식당취사부에 작업을 지정하고자 전국 교정시설에 흩어져서 여성수용자를 처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수용자의 처우를 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수형자의 처우를 받을 권리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처우가 비자발적 강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규정되지도 않았으며, 특히 대다수의 처우가 재소자에 대한 일종의 보상 또는 특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권리라고 인식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만약 교정시설이 범죄자를 개선·교화시키지 못하고 획일화된 처우라는 것이 수용자를 더 오래 구금시키는 장치에 불과한 때에는 여성수용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을 권리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적극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와 아울러 비자발적인 원치 않는 처우를 거부할 권리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일반교도소의 분계된 장소에 수용하여 식당의 취사부 등으로 작업지정을 하여 처우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성수용자 일부에서 비자발적인 강제적인 처우인 것으로 인식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또 다른 적극적인 처우를 주장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② 분류심사상의 문제점

분류심사는 수형자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처우의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적절한 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형자 개인의 범

죄경력, 생활환경, 교육정도, 지능지수, 입소전 직업, 소질, 적성, 가정사항, 교우관계, 특기, 건강 및 정신상태의 이상유무를 조사평가 하는 작업이다. 수용자는 입소시 신입검사를 거침으로써 각자의 분류급이 결정된다. 이 결과에 따라서 수용자는 개별처우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되고, 수용된 시설에서는 거실 및 작업의 지정 등 세부사항에 걸쳐 다시 분류가 이루어진다. 행형법에서는 성별, 연령 등의 전통적인 부류기준에 따라 분류수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여성수용자의 형 및 형기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2001년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32.7%, 6월 이상 1년 미만이 15.9%,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3.6%,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0.8%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단기수형자의 증가가 상당수 있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수용자의 67.4%가 분류심사를 받지 않았는데, 여성수용자의 경우 남성적 분류심사기준이 아닌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분류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며, 6월 이상 1년 미만의 수형자 뿐 아니라 5년 이상의 장기수가 혼재하여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분류조사가 필요하다. 수형자의 분류를 소극적인 악풍감염의 방지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형자의 개별처우를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류에 보다 그 의의를 두어야 한다. 아무리 과학적인 장비를 확보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분류에 만전을 기하더라도 그에 따라 수형자의 적성에 맞는 처우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또한 처우계획 및 분류에 상응한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분류는 분류를 위한 분류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처우계획에 따라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교정시설을 단계적 전문적 시설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서는 4내지 6단계의 중구금시설, 중간구금시설, 경구금시설로 단계적으로 구분, 설치하여 극히 완화된 개방처우에서부터 엄중 폐쇄시설까지 차별화하고 있으며, 1개의 교정시설 내에서도 사동별로 시설구조, 설비 등을 다르게 하여 처우를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3) 거주설비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인원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 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성격이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제9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제10조).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에는 a.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b. 인공 조명은 피구금자가 시력을 해치지 아니라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제11조).

위생설비는 모든 피구금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제12조).

적당한 목욕 및 샤워설비를 마련하여 모든 피구금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되, 단 온대기후의 경우 그 횟수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제13조).

피구금자가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모든 부분은 항상 적절히 관리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제14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11조에 의하면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작업장의 취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행형법시행령 제33조에서는 혼거실에는 3인 이상의 자를 수용한다. 다만,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에서는 소장은 혼거실·교실·교회당·작업장 기타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용자의 자리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거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시행령 제35조). 행형법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소장은 거실 또는 작업장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게 할 수 있으며, 거실·작업장에 비치하는 기구의 품목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물품급여는 누진계급에 상응하도록 한다. 다만, 식량·음료 기타 건강을 유지함에 필요한 물품은 계급에 의하여 구별하지 아니한다(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2조). 수형자의 거실에는 책상·서화·화분·거울·시계·달력 및 텔레비전 등의 비품을 둘 수 있다(동규칙 제53조).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형자 자신의 필요에 의한 차입물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동규칙 제54조).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사용할 식기 기타 생활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동규칙 제55조).

(3) 실태조사상에서 나타난 여성수용자의 거실환경

① 거실 당 수용자수

교도소의 시설조사에서 44개의 거실 중에서 3명이 쓰는 방이 9개, 4명이 쓰

는 방이 8개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E소의 경우 20명이 있는 방이 있었으며,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이 기거하는 방으로 평수는 8.06평이었다. G소의 경우 독거실로 배정된 방에 2명의 수용자가 사용하였다.

② 조명, 창문 등 환기시설

수용자의 거실에 조명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문제는 취침 중에 조명을 그대로 켜놓고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서 잘 때도 불이 켜져 있어서 눈이 부시고 피곤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각 거실에는 복도측과 화장실이 접한 외벽 쪽에 모두 창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징벌방이나 작은 방의 경우 복도를 내다 볼 수 있는 작은 관찰구 창문 외에는 대개 화장실만 창문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상당수의 거실에서 창문상태가 비닐 등의 형태로 양호하지 못한 것이 지적되었다. 환기시설의 경우 조사대상 거실 중에서 없는 곳이 88.6%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기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되어 작동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③ 위생상태

거실과 화장실의 벽면 상태를 살펴보면 양호한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나 거실의 벽면이 곰팡이 등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조사대상 거실 중에서 27.3%로 나타났으며, 화장실의 경우 곰팡이 등으로 불량한 경우가 조사대상 중에서 36.4%로 나타났다.

④ 주거환경상의 불편한 점

여성수용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은 냉난방이 잘 안된다는 응답이 41.3%이고, 거실의 협소하다는 응답이 41.9%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1999년 조사에서도 여성수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은 겨울철의 추위(62.6%)와 여름철의 더위(50.1%) 등 날씨와 관련된 적응문

제가 가장 심각했으며, 주거공간의 협소함도 절반의 응답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유아를 데리고 수용생활을 하는 경우에 거실배정 등에 배려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0.0%로 나타났다. 그러나 50.0%는 배려해주지 않아서 일반 거실에서 생활했다고 응답하였다. 아이를 가진 수용자가 일반 거실에서 생활할 때 불편한 점으로 거실환경 때문에 아이가 자주 아팠다는 응답과 사람이 많아서 아이를 키우는데 불편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거실수용에 대한 개선점

실태조사에 의하면 거실에 수용하는 인원이 3-4명인 경우가 많았으며, 독거수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행형법 제11조에 의하면 원칙적인 형태가 독거수용이다. 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개개의 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14조에서도 피구금자는 통상 야간에 독거방에 기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동침실이 사용되는 시설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기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피구금자에게 공동침실을 사용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수용자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수용자가 혼거수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오히려 한 거실에 20명까지도 수용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행형법에 따른 혼거수용의 인원기준을 3인 이상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용거실의 크기가 1평에서 8평등으로 다양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수용자 1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최소공간 면적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배종대, 정승환, 2002, 143면). 예를 들어, 실태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점으로 거실이 협소하다는 지적(41.9%)과 함께 독거실에 2명을 수용하는 형태는 수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최소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용방식은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② 거실 및 시설환경

최저시설규칙 제10조 동일한 내용으로 유럽형사시설규칙에서도 “구금장소 및 특히 야간에 피구금자가 기거에 해당되는 장소는 기후 특히 공기의 용적, 최적면적, 난방 및 환기를 고려하고 보건위생상의 필요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19조에 피구금자가 상시 사용하는 모든 장소는 적절하게 유지되고 청결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규정에 비추어보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거실(조사대상의 27.3%)과 화장실(조사대상의 36.4%)의 곰팡이 등의 불결한 상태는 여성수용자의 보건위생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수용자에게는 생활환경의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일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수용자 개인의 건강과 동료수용자들의 건강을 위해 요구되는 의무이다. 이러한 수용자들의 협력의무와 더불어 교정당국은 청결한 생활환경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개인위생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5조). 피구금자가 그들의 자존심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발 및 수염을 조발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남자는 규칙적으로 면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제16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23조에 의하면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여자수형자와 3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여 형기가 2월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행형법시행령 제18조에서는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자인 신입자가 목욕하는 경우에 그의 계호를 위한 참여는 여자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수용중인 여자의 목욕에 이를 준용한다. 행형법시행령 제76조에서는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식기는 특히 정결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타인이 사용한 의류·침구·식기 기타 물품은 세탁 또는 소독한 후가 아니면 이를 다른 수용자에게 급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는 그가 수용된 거실의 청소 및 정돈에 필요한 용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동시행령 92조). 수형자의 두발은 1월에 1회 이상, 수염은 10일에 1회 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 그러나 소장이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두발은 기르게 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93조).

행형법시행령 제94조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에게 화장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수용자의 목욕횟수는 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소장이 정한다. 다만, 6월부터 9월까지는 5일에 1회 이상, 10월부터 5월까지는 7일에 1회 이상의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95조).

교도관 직무규칙 제41조에 의하면 정북교도관은 수용자의 이발·목욕·운동·기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관은 매일 1회 이상 병사의 청결·온도·환기·기타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교도소 등의 부지·건물·기타 모든 설비와 수용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급식 등에 관하여 주 1회 이상 전반적으로 그 위생에 관계된 사항을 시찰하여야 하고, 그 결과 특히 중요한 사항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 직무규칙 제106조).

(3) 실태조사상의 여성수용자의 개인위생 환경

목욕시설의 면적을 살펴보면, 목욕시설의 면적은 가장 작은 곳은 I소로서 가로세로의 길이가 135×260cm로 나타났고, 목욕시설이 가장 큰 곳은 J소로서 860×715cm이었다. 시설기관 중 욕조시설이 있는 곳도 있지만, 실제로 탕욕은 허용하지 않고, 샤워만 허용하고 있었다. 샤워기가 있어도 개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시설기관에서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물을 받아 놓고 수용자에게 일정량만을 배급하거나 또는 퍼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름철 목욕허용 회수는 하루에 한 번으로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겨울철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주 2회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주 1회는 목욕을 하고 1회는 머리를 감는 것만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할 때 목욕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조사대상기관 모두 목욕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자신이 원할 때 자유로이 목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수의 경우 작업이 끝나고 경우에 따라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상 원할 때 자유로운 목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수용자들이 불편하다고 지적한 것 중에서 응답자의 29.1%가 목욕을 자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욕시설 및 이용의 편의성 부분에서 여성수용자의 현황은 상당히 열악한 형편인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욕탕시설 및 샤워설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주 1회의 횟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욕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가능한 경우에 합리적인 회수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저기준규칙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중노동으

로 땀을 많이 흘린 경우, 불결한 작업 중이거나, 한여름에는 가급적 목욕횟수를 증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정해진 횟수의 범위 내에서 원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의류 및 침구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자기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류는 결코 저급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제17조 제1항). 모든 의류는 청결하여야 하며 적합한 상태로 간수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제2항).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구금자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너무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제3항).

피구금자에게 자기 의류를 입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수용할 때에 그 의류가 청결하고 사용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8조).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 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를 급여하여야 하며, 침구는 지급될 때 청결하고 항상 잘 정돈되어야 하고 또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제19조).

(2) 우리나라 행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정법 제22조에 의하면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가 법률이 정하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용하기 위하

여 의류 및 신발의 자비부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허가를 하여야 한다. 자비부담의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행형법시행령 제73조에서는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는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급여의류와 침구의 품목·색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류와 침구 외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식기 기타 물품을 급여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74조 제1항). 식기 등의 품목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제2항). 소장은 수형자에게 화장지·칫솔·치약·비누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하여야 한다(제3항). 행형법시행령 제75조에 의하면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 및 침구의 수는 1인에 대하여 1매로 한다. 다만, 공동사용품목은 예외로 하고 있다. 소장은 날씨·수용자의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류 또는 침구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식기와 생활용품의 수량은 당해 소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입한 의류(수형자의 겉옷을 제외한다)·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85조).

교도관 직무규칙 제39조에 의하면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지급받은 의류·침구 등의 급여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낭비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에게 지급된 급여품이 오염 또는 파손된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교환·수리·세탁 또는 소독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용자 의류 및 침구급여에 관한 규칙은 행형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와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자에게 급여하는 의류(모자 및 신발을 포함한다) 및 침구의 품목, 색채, 규격과 그 착용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입법되었다(동규칙 제1조).

(3) 실태조사상의 의류 및 침구환경

겨울철 관급으로 지급되는 침구의 수는 0-3장, 여름철 관급으로 지급되는 침구의 수는 0-2장으로 나타났다. 관급만으로 겨울철을 날 수 없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자비로 구입하는 것이 겨울철 0-3장, 여름철 0-2장으로 조사되었다. 내의의 경우 겨울철 관급으로 지급되는 내의의 수는 0-2벌로 나타났으며, 여름철 관급내의는 0-1벌로 나타났다. 자비로 구입하는 경우가 겨울, 여름철 내의가 0-3벌이었다.

그런데 침구와 관련된 문제점은 관급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아니라 오히려 세탁을 할 수 없는 데에서 오는 비위생적인 상태이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밖에서 건조할 수 있고, 일년에 두 번 정도 침구 세탁시기까지 세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침구에서 나는 냄새는 물론 진드기 등으로 인해 피부질환을 호소하는 수용자가 많았다.

세탁기가 설치된 곳은 조사기관 중에서 3곳 밖에 없었는데, 세탁기가 설치된 곳도 세탁기는 탈수기능 만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F소의 경우 모든 수용자의 빨래를 세탁기에 돌려 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수용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시설과 달리 일단 사동에서 나는 켜켜한 냄새가 거의 없고 또한 물의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수용자 및 관리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의류와 침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를 국가가 부담하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 침구, 기타 생활용품의 자비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 자비부담을 하는 경우에도 시

설내 판매소에서 공급하는 것에 한정된다. 그런데 문제 자비부담의 의류와 침구를 적당한 때에 교환, 수선 또는 세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세탁의 제한과 의류와 침구의 건조가 문제가 되어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행형법에서는 단순히 의류와 침구의 급여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반면에 최저기준규칙이나 유럽형사시설규칙에서는 의류와 침구에 대한 급여 및 위생관리규정도 아울러 명시하고 있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모든 의류는 청결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침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피구금자는 지방 또는 국가의 관습에 따라 개인용 침대 및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교환되는 개인용 침구가 제공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6) 급식

(1)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급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피구금자는 필요할 때 언제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제20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21조에 의하면 수용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고 규정하여 그 식량급여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행형법시행령 제78조에서는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음식물은 주식·부식·음료 기타 영양물로 하되 필요한 영양을 보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기준을 세우고 있다. 환자의 주식·부식 기타 영양물은 소장이 정하며(동시행령 제84조), 자비부담 음식물의 종류 및 분량은 당해 소장이 정하고 있다(동시행령 제88조).

교도관 직무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부당성을 깨우쳐 식사를 하게 하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소장은 수용자가 식사를 계속하지 아니하여 그의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영양주사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주·부식등 음식물의 검사에 참여하여 식중독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05조).

한편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와 보호감호소(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에 대한 주·부식의 급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주부식급여규칙에 따라 운용된다(수용자주부식급여규칙 제1조). 주·부식의 총열량은 1인당 1일 2,500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동규칙 제2조).

교도소·소년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외국인(이하 "외국인재소자"라 한다)에 대한 주·부식의 급여에 관하여는 외국인재소자주부식급여규칙에 따라 운영된다.(외국인재소자주부식급여규칙 제1조) 외국인재소자에게는 급여하는 주·부식의 총열량은 1인당 1일 3천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동규칙 제2조) 미곡을 주식으로 하는 외국인 재소자에 대하여는 백미 및 맥류를,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빵 기타 대체식품을 주식으로 급여하고 있다(동규칙 제3조).

(3) 실태조사상의 급식환경

급식의 경우 모든 수용시설에서는 반찬 가지수는 국을 포함하여 3가지를 내고 있었다. 급식의 양과 질에 대한 문항에서 급식의 양은 적당하다고 한 반면 급식의 질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조사수용시설 모두 죽식으로 환자용 식사가 있었는데, 대개 의사가 처방을 내리거나 의무과에 신청하면 먹을 수가 있다고 한다.

식수는 모두 끓인 물을 마신다고 하였으며, 식사 전 하루에 3번 식수통이 거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급여라 함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의,식,주에 관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생활필수품을 지급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급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교정행정 목적인 수용자의 구금 및 교정교화작용은 수용자에 대한 급여작용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급여작용은 교정행정의 핵심이 된다고 하겠다. 둘째,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급여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정갑섭, 최신교정학, 1995, 326면). 즉, 수용자에게 식량과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수용자에 대한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의류급여의 경우 결코 저급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음식물 급여의 경우 피구금자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급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유럽형사시설규칙에서는 피구금자의 연령, 건강, 작업의 성질 및 가능한 범위에서 종교상 혹은 문화상의 요구를 고려하고, 근대적인 영양학 및 위생학의 기준에 따른 질 및 양을 갖춘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거실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서 비위생적인 식수를 들고 있는

여성수용자의 수가 46명으로 전체 응답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간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요건 자체가 아직 미흡함을 말하는 것이다.

7) 운동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1조). 소년피구금자 및 적당한 연령 및 체격을 가진 그 밖의 피구금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제22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24조에 의하면 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의 규정에 따라 행형법시행령에서는 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작업의 종류에 따라 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운동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96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9조에 의하면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의 개최를 허가할 수 있으며,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횟수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3) 실태조사상의 여성수용자의 운동 환경

① 운동장 환경

운동장의 경우 빌딩식으로 된 수용시설에는 내부에 있었고, 그 밖의 수용시설에서는 건물 옆에 함께 붙어있었다. 내부에 운동장이 있는 경우 햇볕을 쬌지 못하고 흙을 밟을 수 없어서 그리고 운동량이 부족하여서 좋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운동자의 면적은 E소의 경우 10.89평이었고 D소의 경우 511평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운동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을 많이 하였다.

② 운동시간

여성수용자의 운동시간에 대한 문항에 운동시간이 30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0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6%이었다.

현재의 운동량에 대해서 여성수용자의 대다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6.1%는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조금 부족하다는 응답이 33.1%이며, 적당하다는 응답은 18.0%에 불과하였다.

여성수용자의 전용 운동공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운동공간의 크기가 비좁다고 응답한 경우 56.7%이었으며, 적당하다는 응답은 34.9%이었다. 운동기구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49.7%,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48.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운동시간도 부족하고, 전용 운동공간이 비좁으며,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형형법 시행령의 규정을 보면 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시행한다고 필요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독거 수용자에게는 운동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30분인 경우가 60.1%이며, 20분 이내인 경우도 13.6%로 대부분의 여성수용

자가 시행령에 규정된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운동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자유형의 집행은 자유박탈과 노역부과를 내용으로 하며 신체에 직접 고통을 가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격리된 시설 내에 수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수형자의 심신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도 쉽게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세심하게 배려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운동시설의 확충과 법률에 규정된 운동시간의 엄수는 수용자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성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수용자의 건강권의 보장은 생존의 배려로서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현대국가에서 수용자의 건강권을 비롯하여 의료권 등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가권력의 존재근거의 하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배종대, 정승환, 198면).

8) 의료

(1)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모든 시설에서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업무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 보건행정과의 긴밀한 관계 하에 조직되어야 한다. 의료업무에는 정신이상자의 진찰과 적절한 경우 그 치료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제22조 제1항).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동조 제3항).

여성시설에서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난 경우 이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자격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하여 모친이 보살필 수 없는 경우 유아를 보호하여야 한다(제23조).

의사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 후 필요에 따라 면접하고 진찰하여,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환의 의심이 있는 피구금자를 격리하고, 사회복귀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기록하고 작업에 대한 피구금자의 신체적 능력을 판정하여야 한다(제24조).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특히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계속된 구금으로 인하여 또는 구금에 수반된 상황 어느 것에 의해서든 손상되었거나 또는 손상되리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5조).

의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고 1)식량의 분량, 질, 조리 및 배식, 2)시설 및 피구금자의 위생과 청결, 3)시설의 위생관리, 난방, 조명, 및 통풍, 4)피구금자의 의류 및 침구의 적합 및 청결, 5)체육 및 경기를 담당하는 기술요원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규칙의 준수에 대하여 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이에 따라 소장은 의사가 행한 보고 및 조언을 참작하여야 하며, 의사의 권고에 찬동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실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안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장은 자기의 보고와 의사의 조언을 즉시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2) 우리나라 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26조에 의하면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또한 소장은 수용자에게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5조), 소장은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다른 수용자와 격리수용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행형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소장은 교도소등에 전염병에 걸린 자를 수용하고자할 때에는 격리병실 기타 전염병에 걸린 자를 수용할 적당한 시설에 격리수용하여야한다.

한편 행형법 제28조에 의하면 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등의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소를 포함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수용시설에서의 임신부와 노쇠자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동법 제30조). 행형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형법시행령 제103조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제1항). 소장은 여자수용자의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부를 둘 수 있다(제2항).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교도소 등의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행형법 시행령 제12조).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교도소 등 소속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진찰을 하게 하고 이송이 건강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송을 정지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50조). 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 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 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97조).

소장은 수용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104조). 소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외부의 병원에 이송하였을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병원에 이송된 자가 입원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소시키고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105조).

징벌집행중의 경우 특히 급치의 집행 중에 있는 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그 건강상태를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146조). 또한 소장은 급치를 받은 자가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으로 하여금 그의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148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96조에 의하면 의무관은 환자를 진료한 때에는 수용자진찰부 및 당해수용자의 병력부에 그 병명·증세·과거병력·처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용자진찰부는 매일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의무관은 작업 및 운동의 종류 또는 그 방법·급식 등에 수용자의 보건을 위하여 부적당한 것이 있는 때, 신입자 또는 수용자중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자,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 또는 폐질 및 위독한 상태에 빠진 자가 있는 때, 신입자 또는 수용자의 체질·병증·기타 건강상태로 인하여 구금·작업·급식 기타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질병으로 인하여 징벌의 집행 또는 석방에 지장이 있는 때 등에는 당해 사유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07조).

(3) 실태조사상의 여성수용자의 의료 환경

① 의료시설

현재 여성수용자 사동 내에 진료실이 있는 곳이 조사대상자 10곳 중에서 4곳이었고 6곳은 없었다. 여사동내 진료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날짜에 진

료예약을 해서 남사동 진료실에 가서 진찰을 받고 있으며, J소만이 초음파기기가 있어 임신한 수용자들의 부인과 진료가 가능하였다. 치과진료의 경우 여성수용자 사동 내에서 치과진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2곳에 불과하였다. 일반적으로 외부 치과의사가 방문했을 때 남사동의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의약품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느냐는 질문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36.7%에 불과하였고,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9.3%이었다.

의무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1.1%로 필요한 진료를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특별히 아픈 적이 없었다는 수용자도 32.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아파도 눈치가 보여 진료를 못 받았다는 대답이 7.6%를 나타냈으며, 더욱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진료를 해주지 않았다고 대답한 경우도 5.0%이었다.

의무실 이용의 편의성 질문에서 40.5%가 진료 신청 후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용시설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진료를 받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료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7.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11.6%가 진료신청을 해도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교도관의 눈치가 보여서 진료신청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6%를 차지하였다.

② 외부 진료

외부병원 이송과 관련해서는 조사기관 모두 외부병원 이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에 따라 외부병원 이송에 따르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신청하면 바로 가능한 조사기관이 있는 반면에 몇 달을 기다려야만 가능한 곳이 있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시설도 있었다. 여성수용자의 면담에서 불만을 호소하는 부분이 외부병원에 갈 때의 계구 사용이다. 외부 병원의 진료를 받을 만큼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수갑과 포승한 채로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서 외부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

하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하였다.

입소 후에 외부의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본 여성수용자는 22.6%이었으며, 대부분이 경우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미결수의 경우에도 기결수와 같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수용자의 불만이 높았다.

③ 건강진단, 정기검진

입소 후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2.1%이었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5.7%이었다. 정기검진을 받았느냐는 질문에서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5.4%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1.4%이었다. 여성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부인과질환에 대한 정기검진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9.6%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12.0%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용시설에 들어온 후 건강진단을 받거나 정기검진을 받는 수용자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④ 임신과 출산

구금기간 중에서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수용자는 5.0%이었으며, 또한 출산경험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3.2%가 출산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신 중에 정기적인 산전검사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58.3%에 불과하였다. 산전 검사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였다는 응답은 84.2%이었으며, 임신기간 중 병방에 수용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52.2%이었다. 출산장소로는 외부 산부인과 의원이 73.3%로 가장 많았으며, 집에서 출산한 경우가 20.0%이었으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출산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⑤ 병방 시설

I소는 병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시설에서 병방을 별도시설로 마련

한 것은 아니고, 일반 거실에 환자들을 모아 병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환자들을 고려하여 온돌을 깔아 난방이 가능하게 하거나 화장실 변기를 양변기로 바꾸는 등의 시설의 차이가 있을 뿐 문턱을 없애거나 비상호출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환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정기적인 건강진단의 시행 촉구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수용자는 독자적으로 의료혜택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수용자가 사회복귀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건강한 신체이다. 행형기간 동안 의료적 처우를 받지 못해서 질병에 걸린 상태 하에서 사회에 복귀한다면 이는 재사회화의 기본전제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건강은 재사회 복귀의 최소한의 요건이다. 응보적 관점에서 수용자에 대한 의료권보장을 소홀히 하는 것을 형벌해악의 내용으로 여긴다면 이는 수용자에게 일종의 신체적 고통을 부작위형태로 부과하는 것으로 자유형의 본질을 신체형으로 변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용자에 대한 의료권의 보장으로서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질병의 예방이다. 질병의 예방을 위한 의료적 처우의 출발점은 건강진단이다. 수용자는 그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행형법시행령에는 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 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 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입소 후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55.7%이었고, 정기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5.4%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수용자의 경우 부인과질환에 대한 정기검진은 79.6%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질병치

료보다는 예방이 비용면에서도 더욱 효과적이라는 면에서 건강진단의 시행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② 일반의료시설 및 편의성의 확충

일차적으로 시설내의 병실에서 수용하여 의무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질병
치료를 일반의료라고 한다. 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모든 시설에서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의료의 이용은 기본적으로 수용시설 내에 진료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하는데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조사대상 시설 10곳 중에서 6곳은 여성수용자 전용 진료실 자
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언제든지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거나
또한 교도관의 눈치가 보여서 진료신청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진
정한 의미의 의료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없다. 진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
함으로써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적절한 의료처우를 받지 못하고 심각한 장애
를 얻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이들이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하여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2.4.12.
선고, 대판 2000다57719).

③ 특별의료

특별의료는 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에는 의무관 외에 외부병원의 의사를 초빙하거나 시설 밖의 장소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최저기준규칙이나 유럽형사시설규칙에 의하면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의료의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

형법도 교도소장 등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등의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장의 재량적 허가사항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독일의 행형법은 수형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제56조)는 의무조항을 두며, 수형자의 질병이 교도소 또는 소내 의무실에서 치료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여 소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의료의 허가여부도 문제가 되지만, 비용 면에서의 접근성이 문제된다. 수용자에게 시설 내에서의 의료보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용자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혹은 기존의 납부하고 있었던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고가의 진료비를 자비부담하게 하는 것은 질병을 방지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특별의료에의 접근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현실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교도소 기타 준하는 시설 즉, 재소자로 통칭하여 미결과 기결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권 보장과도 어긋나며,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수용자의 보험료 미납을 우려한 조치라고 한다면 이는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인과진료설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여성수용시설의 현실에서 고가의 검사비 등 진료비를 과다하게 자비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있는 수용자의 경우 가족의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또는 가족이 없는 생활보호자 등은 사회와 똑같은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여성수용자를 위한 임신 출산 관련 처우

최저기준규칙이나 유럽형사시설규칙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두고 있다. 임신부인 여성수용자의 경우 일반환자와 다른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므로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행형법에는 임신부와 노쇠자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는 규정(제30조)만을 두고 있고, 행형법시행령에는 소장은 여자수용자의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제103조 제2항)하고 있을 뿐이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임신기간 중에 병방에 수용한다는 응답이 52.2%인 것으로 비추어보면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산후관리를 위해서 임신부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여성구금시설에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아니라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자격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의료예산으로 일상적인 상비약을 구비하고 지급하는 데도 미흡한 의료시설의 형편에서 무리하게 여성수용자에 대한 특별배려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의료권 보장은 생존권적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으로 수용자의 특성에 따른 진료의 내용 및 시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확보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9) 규율 및 징벌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수용시설내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제27조). 어떠한 피구금자라도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규칙은 특정한 사교, 교육 도는 스포츠 활동이나 책임을 직원의 감독 하에 처우목적을 위하여 그룹으로 분류된 피구금자들에게 맡기는 자치에 기초한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배제하지 않는다(제28조).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부과할 징벌의 종류 및 그 기간, 징벌권을 갖는

기관에 관한 사항은 항상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제29조). 어떠한 피구금자도 이와 같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되며 동일한 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받지 아니한다.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하여 주장되는 위반을 통고 받고 이에 대해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징벌받지 아니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사건의 철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수용자는 통역자를 통해 자신의 항변을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제30조).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 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제31조). 금치 또는 감식의 징벌은 의사가 그 피구금자를 진찰하고 서면으로 그가 그러한 징벌에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해서는 안 된다. 피구금자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을 침해하는 어떠한 징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징벌은 제31조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거나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사는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는 피구금자를 매일 방문하여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징벌의 정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에게 그 취지를 조언하여야 한다(제32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45조에 의하면 수용자는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1)형법·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2)자해행위, 3)정당한 이유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흉기·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소지·사용·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46조).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 달성을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동법 제48조).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동법 제47조). 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등의 부소장과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행형성적, 뉘우치는 빛 등 그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2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48조의2).

한편 소장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사실에 수용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143조). 징벌은 징벌의 선고가 있는 후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하는데,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145조 제2항). 특히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제3항).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4조의 2에 의하면 징벌을 양정함에 있어서는 1)징벌혐의자의 연령·성향·지능·환경 및 건강상태, 2)행위의 동기·수단 및 결과, 3)규율위반후의 정황, 4)행형성적 및 수용생활태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장은 금치 집행중인 자에 대하여 교정위원과의 교화 상 면담, 종교서적의 열람, 세면도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동규칙 제10조의 2).

(3) 실태조사상의 여성수용자의 징벌현황

① 징벌 경험

조사대상 여성수용자 중에서 입소 후 징벌을 받아본 적이 있는 수용자는 4.6%(21명)이었다. 징벌내용으로 경고가 7명, 금치가 7명, 작업정지가 1명이었다. 징벌경험자는 93.8%가 징벌협의를 대해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 측의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징벌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약 절반정도의 응답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조사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수용시설은 거의 없었으며, 상담실에서 또는 직원의 집무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② 징벌의 수단

징벌의 수준이 적절했다는 평가보다는 징벌의 수준이 잘못에 비해 과도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체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수용자가 15명이었으며, 암실에 갇혀 있었다고 응답한 여성수용자도 4명으로 나타났다. 금치를 받아본 여성 수용자 중에서 금치의 집행 전에 의사나 간호사의 진찰을 받았다는 응답보다는 받지 못했다는 여성 수용자의 응답이 더 많았으며, 금치집행 중에도 의사의 진단을 받지 못했다는 수용자가 더 많았다.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의무과 직원이 와서 형식적인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③ 징벌에 대한 이의 제기

징벌협의를나 징벌집행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여성수용자는 33.5%에 불과하고, 51.9%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④ 집필거부

집필신청을 한 여성수용자 중에서 집필신청이 거부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0%이었으며, 집필문서를 압수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8%로 나타났다. 허가받은 집필문서를 압수 당하였거나 징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0.8%로 나타났으며, 허가받지 않은 집필에 대한 징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이었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도소 등에서 다수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또한 행형 목적과 보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규율은 필요하다. 징벌은 일정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처분이기 때문에 징벌의 요건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및 제재 등에 관해서는 법률로써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행형법에서는 징벌사유에 관해서도 나열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적합하고 필요한 최소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징벌로써 의도한 목적과 침해되는 수용자의 권리사이에는 균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수용자의 경우에는 남성수용자보다는 징벌을 받는 예가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며, 징벌내용으로도 경고, 금치 1개월, 작업정지 등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의하면 암실수용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여성수용자가 4명이었고, 체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수용자가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저기준규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저기준규칙 제31조에 의하면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벌은 본질적으로 형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징벌은 어떠한 법률규정 없이 즉, 행형법에 명시된 종류이외의 징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원칙이 무시되는 행형 현실은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의 위배인 것이며,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수용자의 인권침해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징벌경험과 관련된 실태조사에서는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징벌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든지 또는 이의제기의 수단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며, 금치 전에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징벌의 내용으로서 금치의 경우 의무관으로 하여금 금치 처분을 받은 자의 건강을 진단하게 한 후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만 집행이 가능하고, 그 집행 중에도 의무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건강상태를 진단하게 하며,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의하면 금치를 집행과정에서 의사의 진단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금치의 집행 전후에 진단을 받지 못한 예가 많았다. 최근의 입법을 통해 과거에 지적된 징벌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의한 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본바와 같이 현재의 행형현실에서는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완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최저기준 규칙과 형사시설규칙에 의하면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하여 주장되는 위반을 통고 받고 이에 대해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징벌을 부과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의한 규칙 제7조 제1항 2.에서도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의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계구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수감, 연쇄, 차꼬 및 구속복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연쇄나 차꼬는 계구로써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 밖의 계구는 1)호송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다만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2)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사를 지시받는 경우, 3)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 (이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제33조). 또한 계구의 제식 및 그 사용방법은 중앙행정당국이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구는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제34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14조에 의하면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계구의 종류로는 포승, 수갑, 시슬, 안면보호구가 있다.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고 있다. 교도관은 수용자가 1)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자해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2)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3)도주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기타 교도관 및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동법 제14조의2 제1항). 그리고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수용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동법 제14조의2 제3항). 특히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5조).

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

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안면보호구는 6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다(행형법 시행령 제46조).

수용자에 대한 강제력은 소장의 명령 없이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행사한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그리고 소장은 교도관이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교도관 직무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정북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그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외에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소장은 정북교도관에게 무기·계구·교도봉 기타 보안장비의 사용법을 훈련시켜 긴급한 경우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3항). 정북교도관이 행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의 지시를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무기 사용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항).

(3) 실태조사상의 계구 사용현황

징벌시 계구가 사용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수용자는 3명이었는데, 그 중 2명은 ‘수갑, 포승, 사슬’이 사용되었다고 응답하였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저기준규칙에서는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결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행형법도 1999년 12월 28일 법개정을 통해 계구를 징벌

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의하면 계구가 사용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명으로 나타났다. 계구의 사용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고, 실제 계구사용의 남용으로 인권침해의 논란이 끊이지 않으므로 계구사용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계구의 제식과 사용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한 계구의 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혹은 소란이나 싸움으로 징벌조사를 받거나 징벌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구사용요건이 사라지면 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도 “징벌 집행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9일 동안이나 계구를 사용한 것은 계구사용의 필요성이 사라진 시점까지 계속 계구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18922판결).

11) 정보 및 불복신청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규칙,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수단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피구금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을 때에는 전향의 정보는 구술로 알려주어야 한다(제35조). 또한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평일에 소장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직원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한 조사중에 조사관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에게는 소장 또는 기타 직원의 참여 없이 담당조사관 또는 다른 조사관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모든 피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않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중앙교정당국, 사법관청 또는 기타 관청에 청원하거나 불복신청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요구 또는 불복은 그것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거나 근거 없는 것이 아닌 한 즉시 처리되고 지체없이 회답되어야 한다(제36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6조에 의하면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3항).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제4항). 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5항).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제6항).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규율, 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의 2).

또한 소장은 행형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을 하고자 하는 수용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형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구술청원을 받은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7조 제1항).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제2항).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9조).

교도관 직무규칙 제40조에 의하면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행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서의 제출 등의 방법으로 청원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용자가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실태조사상의 정보 및 불복신청 현황

① 청원절차에 대한 교육 현황

조사대상 중 82.9%의 여성 수용자들이 입소시에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부터 부당한 처우에 대한 수용자의 청원권리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구금시설 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가 27.6%이었고, 72.4%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② 청원 경험 여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청원경험이 있는 경우가 9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청원결과를 전달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응답이 4명,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명이었다.

구금시설 내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8명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③ 교도소장과의 면담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면담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여성수용자는 42.1%이었으며,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58.8%이었다. 면담신청을 해본 적이 있는 여성수용자는 30명으로 17.3%이었다. 면담신청을 한 경우 면담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72.4%이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7.6%로 나타났다.

④ 인권위원회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진정함은 모든 수용시설에 설치되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절차에 관한 안내문도 역시 모든 수용시설에 부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를 알고 있는 여성 수용자는 57.4%이었으며, 모른다는 응답도 42.6%로 나타났다. 진정할 권리를 알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책이나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응답이 38.2%이었으며, 다른 수용자가 알려주었다는 응답이 13.4%, 교도관이 알려준 경우가 32.3%,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교육에 의해서 알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6.1%로 나타났다.

국가위원회에 면전 진정을 해본 적이 있는 여성수용자는 10명(2.2%)로 나타났다. 면전신청을 한 경우 신청결과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위원이 방문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2명, 면전 진정서를 작성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2명, 기타 2명이 응답하였다.

⑤ 불이익 여부

고소,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신청 등을 했다는 이유로 교도관으로부터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수용자는 12명(3.2%)이었다. 고소, 청원, 진정 등의 경험이 있는 여성수용자 중에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21%이라고 응답하였다.

고소장이나 청원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 집필보고전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서 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가 9명이었고, 고소장이나 청원서를 작성했는데 발송이 안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가 9명으로 나타났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청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고지

행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비인도적인 처우는 주로 교도행정의 은밀성과 폐쇄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형자 자신의 고충이나 불

복의사를 외부에 알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권리구제수단으로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는 청원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82.9%로 구제권리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음을 모르는 경우도 72.4%를 차지하고 있었다. 1999년 행형법의 개정 이전에는 청원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청원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였지만, 수용자들에게 이러한 권리에 대한 고지와 홍보, 교육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권리구제 방법으로 청원권은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1999년에 개정된 행형법에 청원에 관한 사항을 소장이 신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82.9%가 교육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법규정과 현실과의 격차를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행형의 현실에서 위축되고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수용자가 적극적으로 청원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청원권을 행사하더라도 결국 행정조직상 내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인 통제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많다. 그 대안으로서 미국에서는 권리구제방법으로서 소송제기 외에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옴부즈맨을 두고 있으며, 현재 교정분야의 분쟁해결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형집행부를 별도로 두어 행형사안에 관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수용자의 권리침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법심사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청원에 대한 회답

실태조사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을 한 경우에 그 회답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9명 중 4명이 회답받지 못했다고 한다. 최저기준규칙이나 유럽형사시설규칙에 의하면 모든 요구나 불복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나 근거 없는 것이 아닌 한 즉시 처리되고 지체없이 회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의 청원사항을 접수한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수용자의 청원에 대해 상당기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더라도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행정법상으로 청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법무부장관이 상당한 기간 내에 재결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수용자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진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진정함과 진정안내문이 수용시설에 부착되어 있지만 진정권에 대한 인식도에서 모른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었고, 진정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 경로가 교육이나 교도관인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청원권과 마찬가지로 수용자가 처음 입소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의 의의와 방법에 대하여 고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규정만 있을 뿐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에 구금된 여성수용자에게 추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2) 외부와의 교통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제37조). 외국인인 피구금자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교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외교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피구금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게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이러한 자의 보호를 임

무로 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관과 교통할 수 있는, 전항과 동일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제38조).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열독하고 방송을 청취하며 강연을 듣거나 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제39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① 접견관련 규정

행형법 제18조에 의하면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으며,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행형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하고 있다.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동시행령 제55조).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동시행령 제56조). 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 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그러나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57조).

접견시의 기록과 관련해서 소장은 1)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행형성적이 우수한자, 2)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기타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58조).

수용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59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9조에 의하면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실의 적당한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실에 한하여 접견을 허가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급 및 제3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접견실의 적당한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접견시 교도관 불참여와 관련해서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의 접견에 있어서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참여 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동규칙 제50조).

② 서신관련 규정

서신의 경우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동법 제18조의2). 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시에는 통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통화요금의 부담 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제18조의3).

서신 등의 영치에 관한 규정으로 수용자에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람한 후 이를 영치하며, 다만,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수용시설내에서 수용자는 자비 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1항). 그러나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그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서신의 검열과 관련해서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법 제6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을 제외한다)을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은 이를 검열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62조 제1항).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합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제출하게 하며, 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등에서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제2항). 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1)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2)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3)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4)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제3항).

③ 전화사용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1조에 의하면 교도소장 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5회, 제2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3회의 범위안에서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교도소장 등은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전화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허용할 수 있다.

또한 교도소장등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화를 차단할 수 있다. 전화사용료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한다.

④ 신문열람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0조에 의하면 교도소장 등은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형자에게 매일 신문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문열람은 교도소장 등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고, 열람시간

은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에 한한다. 그러나 수형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는 신문의 종류와 수량은 교도소장 등이 정한다.

(3) 실태조사상에 나타난 여성수용자의 환경

① 접견

여성수용자들이 가족을 면회하는 회수를 물어본 결과, 가족이 매일 면회를 온다고 응답한 여성수용자는 8.2%에 불과하였고, 주 1회-3회 정도 면회를 온다고 응답한 경우가 33.2%이었다. 일년에 1회-2회 가족과 면회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11.8%이었다.

② 미성년의 자녀와의 면회

여성수용자 중 미성년의 자녀와 면회를 한 경험에 대해서 22.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미성년의 자녀를 면회한 환경은 72.8%가 칸막이가 있는 일반접견실이었으나, 칸막이가 없이 접견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13.1%이었다.

③ 접견실 환경

조사대상 시설 중에서 여성수용자 전용접견실이 없는 곳은 2곳이었다. 9곳의 접견실은 칸막이가 있었는데, 여성수용자와 접견하는 사람들이 말소리를 뚜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설치한 곳은 5곳에 불과하였다. 부부접견실이 있는 곳은 전혀 없었고, 가족접견실이 있는 곳은 F소 한 군데로 조사되었다. 칸막이가 없는 접견실은 전혀 한 군데도 없었다.

여성수용자의 77.2%는 정해진 접견실에서만 면회를 한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15.8%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회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성수용자의 88.8%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회를 하기를 원하였다. 12개월의 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여성수용자의 경우 남편이 데리고 있는 큰 아이와 칸막이가 없는 접견실에서 면회를 하기를 원하였지만 특별접견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아이와의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면회시 접견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④ 서신

여성수용자가 가족이나 친지에게 편지를 쓰는 빈도는 주1회의 응답이 36.9%이었으며, 그 다음이 한달에 2-3회라는 응답이 19.0%, 매일 쓴다는 응답이 13.2%이었다.

서신이 작성 후 폐기된 경험이 있다는 여성수용자는 43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폐기된 사실과 폐기된 이유를 통고받은 사람은 33명에 불과하였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여성범죄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존재가 여성의 재사회화의 성공여부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재사회화의 성공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 실패 41.2%, 성공 15.7%인데 비해, 자녀가 있는 경우 실패 13.9%, 성공 30.6%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김인숙, 1993, 41면). 자녀를 둔 여성수형자의 경우 그들의 원만한 수형생활과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접견 및 면접의 편의가 도모되어야 한다.

여성수용자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과의 유대관계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정 시설내 처우에 있어서는 현재 시행 중인 합동접견, 전화접견, 귀휴제도의 적용범위의 확대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한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현재 합동접견은 주로 모범수에 한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접견제도, 귀휴제도의 취지가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장기수형자 뿐 아니라 단기수형자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여성수용자는 도주의 우려도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보안상의 위험부담이 적은 단기수형자에 대하여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김차승, 2001, 86면). 가족구성원을 위한 방문접견의 확대로서 부모역할훈련이나 상담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도 제안할 수 있다(최응렬, 1998, 348면). 또한 임신부와 유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성프로그램으로서 교도소 내에서 어린 자녀로 하여금 구금된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특수한 독채를 마련하는 프로그램도 제안할 수 있다(배종대, 정승환, 2002, 361면).

13) 도서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제40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33조에 의하면 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그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실태조사상의 여성수용자의 환경

수용시설에 열람할 수 있는 도서가 비치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79.8%가 수용시설내에 열람도서가 비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비치도서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25.1%가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6.3%가 매우 만족한다

고 응답하였다. 그래서 여성수용자의 54.9%가 자비로 도서를 구입한다고 응답하였다.

한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수는 제한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7.6%이었고, 1권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15.2%, 3권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12.0%로 나타났다. 대출기간은 1주일인 2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제한이 없다고 12.6%로 나타났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도서, 신문열람, 라디오, 텔레비전 시청은 모든 수형자에게 허용되어 있다. 수용자들의 사회적응감각유지 및 지식, 정보습득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산상의 확충으로 교육과 정서함양의 도구로서 도서구입이 수용자의 요구도와 필요도에 수반하여 자비구입의 부담을 덜어내고 시설내 도서비치가 확대되었으면 한다. 유럽형사시설규칙에 의하면 모든 시설은 모든 종류의 피구금자를 위하여 오락적이고 교육적인 폭넓은 범위의 장서를 충분히 갖춘 도서관을 가져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구금시설 도서관이 외부의 지역도서관의 서비스망과 결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2조).

14) 종교

(1)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시설내에 동일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피구금자가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있는 대표자가 임명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원수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그 조치는 상근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임명되거나 승인된 유자격 대표자는 정규적 의식을 행하고 수시로

직접 그 종교 소속의 피구금자를 심방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교적 유자격 대표자에 대한 접근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피구금자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피구금자가 교역자의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그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제41조).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제42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31조에 의하면 수형자가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특별교회를 청원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휴업일에 한다. 다만, 당해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동법시행령 제107조). 병실 또는 독거실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한 교회는 그의 거실에서 한다(동시행령 제108조).

교도관 직무규칙 제75조에 의하면 교회직은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종교교회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하게 하여야 한다. 교회직은 환자·독거수용자 및 징벌자에 대하여는 매월 2회 이상 개인교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그 시기 및 회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동규칙 제76조 제1항). 교회직은 신입수형자등(다른 교도소에서 이송되어 온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입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석방예정자에 대하여는 석방 3일 전에 개인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제2항).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6조에 의하면 교도소장 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수형자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에서 실시하는 교도소 등의 밖에서의 종교행사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외부의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3) 실태조사상의 여성수용자의 종교 환경

수용시설 내에서 종교집회나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45.5%가 정기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한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참석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응답도 20.2%가 되었다. 종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39.9%가 보통이라는 응답을 하였고,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13.4%, 약간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15.8%로 나타나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행형법 제31조에 의하면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회는 수용자의 도덕심을 회복하고 사회성을 배양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영적 감화를 통하여 심성을 순화하고 범죄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종교교회와 일반교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저기준규칙과 유럽형사시설규칙에서는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내에서 거행되고 있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참석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여성수용자의 응답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수형자의 기본권 중에서 그 성격상 법률로써도 절대적으로 제한 금지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들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는 어떠한 근거에서도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은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15)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시설의 규칙에 의하여 피구금자가 소지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금전, 유가물, 의류 및 기타의 물건은 입소할 당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물에 관하여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구금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관물을 양호한 상태에 두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모든 보관금품은 피구금자를 석방할 때 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석방 전에 피구금자가 금전을 사용하거나 보관물품을 시설 밖으로 송부하는 것이 허가된 경우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의류를 폐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구금자는 반환 받은 금품에 관하여 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에 수용되거나 다른 시설로 이송될 때 이를 자기 가족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제43조)

(2) 우리나라 행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정법 제41조에 의하면 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등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영치물품의 조치에 관해서는 소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의 휴대품을 영치하는 때에는 그 품목·수량·규격 및 평가가격을 영치품 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행정법시행령 제126조). 소장은 영치물중 금·은·보석·유가증권·인장 기타 귀중품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127조). 소장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영치물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영치금은 그 금액을 영치금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128조). 소장은 수용자가 비밀히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영치하여야 하며 영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거 또는 폐

기할 수 있다. 수거한 물품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피석방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135조).

(3) 실태조사상의 명세서 작성 현황

조사대상자인 여성수용자 모두 수용시설에 들어와서 자기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명세서에 수용자가 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피구금자의 이송

(1)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환기나 조명이 불충분한 교통수단에 의하거나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피구금자를 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이송은 행정청의 비용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제45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12조에 의하면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

수용자의 호송과 관련해서 교도관 직무규칙에서는 정복교도관이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미리 호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제1항).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호송 중 도주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용자의 동태파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제2항).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행할 수 없다. 다만, 기차·기선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동규칙 제7조).

(3) 실태조사상의 이송 현황

① 이송시의 성적 수치심

여성 수용자 중에서 이송할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18.9%이었으며,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68.9%이었다. 여성 수용자 중에서 외부 병원의 진료를 받을 만큼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수갑과 포승한 채로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서 외부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하였다.

② 이송시설

법원을 나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송시설은 대부분 수용시설에서 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원이 적을 때에는 관용승합차를 타고 간다. 예외적으로 E소의 경우 지하통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고 한다. 이송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J소를 제외하고는 남성수용자와 혼용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기관 10개소 중에서 계호 직원은 J소의 경우에만 전적으로 여성교도관이 하고 있으며, 남성교도관과 여성교도관이 함께 한다는 곳이 6곳이고, 남성교도관만 할 때도 있다고 한 곳이 3곳이었다.

③ 이송시의 성적 수치심

구금생활 중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3.8%로 나타났다. 특히 검신(신체검사)을 할 때 성적 수치심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목욕할 때와 이송할 때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여성수용자가 각각 22.5%, 18.9%로 나타났다. 여성교도관의 말이나 태도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여성수용자의 비율이 15.8%이었으며, 남성 교도관의 말이나 태도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여성수용자의 비율은 1.4%에 불과하였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송은 교정처우의 편의상, 사건의 심리상의 필요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법령에 의하거나 직권있는 자의 명령에 의해 행해진다. 수용자를 이송할 때에는 여자수용자는 남자수용자와, 20세미만의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J소를 제외하고는 남성수용자와 혼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송 중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인지 혹은 남성수용자의 언어폭력에 의한 성희롱 때문인지는 설문조사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남녀수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이송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수갑이나 포승의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이송하는 것이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

17) 시설직원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시설의 적절한 운영관리는 직원의 성실성, 인간성, 업무능력 및 직무에 대한 개인적인 적합성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교정당국은 모든 계급의 직원을 선임할 때 신중히 배려하여야 한다. 교정당국은 이 임무가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인식을 직원 및 일반공중 모두에게 끊임없이 일깨우고 유지시키기 위한 적당한 모든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위 목적을 위하여 직원은 전문 교정공무원으로서 상근제를 기초로 임용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직원의 봉

급은 적합한 남녀를 채용하여 계속 머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고용상의 복리 및 근무조건은 직무의 고된 성격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제46조).

직원은 충분한 수준의 교육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직원은 직무를 부여받기 전에 일반적 임무 및 특수 임무에 관하여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론과 실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직원은 임무를 부여받은 이후 재직중 적당한 기간마다 행하여지는 직무교육과정에 참가함으로써 자기의 지식 및 직무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제47조).

모든 직원은 항상 모범을 보여 피구금자를 감화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48조).

가능한 한 직원 중에는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제49조).

소장은 성격, 행정능력, 적절한 훈련과 경험에 의하여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녀야 한다. 소장은 자기의 전시간을 그 공적 임무에 바쳐야 하며 비상근적으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소장은 시설의 구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2개소 이상의 시설이 한 사람 소장 소관하에 있는 경우 소장은 각 시설을 자주 순시하여야 한다. 각 시설마다 한 사람의 거주직원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제50조).

소장, 그 대리자 및 기타의 직원 대다수는 최다수의 피구금자의 언어 또는 최다수의 피구금자가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통역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제51조).

1명 이상의 상근 의무관의 근무를 요할 만큼 규모가 큰 시설에서는 적어도 상근 의무관 1명은 시설의 구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기타의 시설에서는 의무관이 매일 시설을 방문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지체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인접한 곳에 거주하여야 한다(제52조).

남녀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여자구역은 그 구역의 모든 열쇠를 보관하는 담당 여자 직원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 남자직원은 여자 직원의 동반 없이는 여자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여자 피구금자는 여자 직원에 의하여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 직원, 특히 의사 및 교사가 여자시설 또는 여자구역에서 전문적인 직무를 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제53조).

시설의 직원은 정당방위의 경우 또는 피구금자의 도주기도나 법령에 의한 명령에 대한 적극적·소극적·신체적 저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구금자의 관계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직원이 물리력에 의지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즉시 소장에게 사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교정직원은 공격적인 피구금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육체훈련을 받아야 한다. 직무상 피구금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더구나 무기의 사용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된다(제54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17조에 의하면 여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여자인 신입자가 목욕하는 경우에 그의 계호를 위한 참여는 여자교도관이 하여야한다. 수용중인 여자의 목욕에도 이를 준용한다(동법시행령 제18조).

여자수용자의 시찰에 관해서는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교도관은 야간에 거실 안에 있는 여자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한다(동시행령 제28조).

교도관 직무규칙 제4조에 의하면 교도관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교도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2. 교도관은 주어진 임무

를 완수하기 위하여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상관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를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 3. 교도관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과학적 교정기법을 개발하고 교정행정의 능률을 향상한다. 4. 교도관은 청렴결백하고 근면성실한 복무자세를 지니고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교도관은 풍부한 식견과 고매한 인격이 교정행정발전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인격도야에 부단한 노력을 다한다.

교도관의 직무상의 우선 순위에서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자살 등 구금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조치는 다른 모든 근무에 우선한다(동규칙 제6조). 정복교도관의 담당직무에 관해서는 남자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의 지도·처우 및 계호, 교도소 등의 경계, 경비교도대의 운영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여자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여자수용자의 지도·처우 및 계호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동규칙 제33조).

교도관 직무규칙 제29조에서는 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행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집행방법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 소속하에 교도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질병치료 등 의료에 관한 사무와 교도소등의 위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동규칙 제95조). 의무관은 의무과 및 병사 등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에 대하여 전염병의 예방·소독 기타 의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관은 간병수용자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간호요령·구급요법 등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동규칙 제103조).

(3) 실태조사상의 여성수용자의 환경

대부분의 응답자는 주간이나 야간에 남성교도관이 여성교도관을 동반하지 않고 여사동을 순찰하는 일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주간에 여성교도관의 동반 없이 순찰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야간에 여성교

도관의 동반 없이 순찰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3.0%로 나타났다.

18) 감독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행형시설과 업무는 권한 있는 관청에 의하여 임명되고 자격과 경험을 갖춘 감독관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임무는 특히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령에 준거하여 형벌집행 및 행형과 교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관리운영 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제55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교도관 직무규칙 제29조 (교도관회의의 설치) 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행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집행방법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 소속하에 교도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19) 수형자 분류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분류의 목적은 1)범죄경력이나 나쁜 성격으로 인하여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로부터 격리하는 것과 2)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처우를 용이하게 하고자 수형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어야 한다(제67조). 가능한 한 상이한 그룹의 수형자의 처우에는 별개의 시설 또는 시설내의 별개의 구역이 사용되어야 한다(제68조). 적당한 형기에 놓인 수형자에 대하여는 수용 및 인성검사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형자의 개인적 필요와 성격에

관하여 얻어진 정보를 참작하여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69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혼거 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사,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행형법시행령 제44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은 행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심사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수형자의 반성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스스로 개선하고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교도소장 등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에 대하여 분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도소장 등은 분류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여 수형자의 가정 환경 및 보호관계 등을 조사하거나 검찰청·경찰서 기타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교도소장 등은 효과적인 분류조사를 위하여 교육학·교정학·범죄학·사회학·심리학 및 정신의학 등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고충상담·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동규칙 제11조). 분류조사시에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1)성장과정, 2)학력 및 직업경력, 3)생활환경, 4)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5)보호관계, 6)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6의2)상담관찰사항, 7)자력개선의지 및 석방후의 생활계획, 8)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동규칙 제12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교도소장 등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심리검사·지능검사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정심리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지능검사 및 적성검사는 집행할 형기가 1년 이상이고, 연령이 35세 미만인 수

형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교도소장 등은 분류검사 결과를 분류처우심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설별 분류수용과 관련해서 수형자는 수용급·개선급·관리급 및 처우급등 각 분류급별로 엄중경비시설·중간경비시설·완화경비시설 또는 개방시설에 분류수용하고, 시설별로 단계처우를 실시한다(동규칙 제19조). 분류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급별·범수·죄명·연령·형기 및 죄질 등을 참작하여 거실지정·작업지정·교육생선발 또는 훈련생선발등을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0조).

(3) 실태조사상의 수형자 분류 현황

입소할 때 분류심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32.6%가 심사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67.4%가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심사의 내용으로 적성검사가 29.1%, 인성검사가 28.4%, 검사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가 23.8%, 지능검사를 받았다는 경우가 18.8%로 나타났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형자의 분류는 수형자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교도소에 수용하고 당해 교도소 내에서도 다시 몇 개의 집단을 세분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뜻하는 것으로 수형자를 분류하지 않고 혼거 수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수형자 상호간의 범죄성 전염과 범죄성향의 상승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각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처우계획을 통해 교화개선된 능률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도소장 등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분류조사와 분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분류조사는 수형자의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수형자의 성장과정, 학력 및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과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의지 및 석방후의 생활계획,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분류검사는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성검사, 지능검사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수용자의 경우 이러한 분류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수형자 분류는 수형자 개개인의 개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선가능성의 측정도 수형자의 변화가능성보다는 범죄유형, 죄질, 범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현재의 분류기준이 수형자 개개인의 필요보다는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집단별 분류에 중점이 있고 처우과정을 통한 개인의 인격변화와 재사회화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정처우의 근간인 개별처우의 기본이념에 비추어보면 소수라 해서 처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여성수용자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처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동등성은 남성과 똑같은 처우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특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적합한 처우프로그램의 제공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적합한 처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특성, 수용생활에 대한 적응태도, 처우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고려한 여성수용자의 분류심사와 분류기준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20) 수형자에 대한 특전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수형자의 그룹과 처우방법에 따라 각각 적합한 특전제도를 두어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형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제70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44조에 의하면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중 1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휴 기간은 형집행 기간에 산입한다. 수형자에게 1)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는 귀휴 허가요건 및 귀휴기간에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가석방심사의 경우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가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행형성적, 가석방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동법 제51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법 제72조제1항의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1)행형성적심사결과 누진계급이 최상급에 속하는 자, 2)제1호외의 수형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심사하여 가석방의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은 수형자를 단계별로 분류심사하여 각 단계마다 처우를 달리함과 동시에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제1조). 전체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애로 및 희망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급 수형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동규칙 제46조).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자치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자치활동의 범위는 인원점검·취미활동 및 거실안의 생활 등으로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자치활동 대상 수형자들은 교회당등 적당한 장소에서 매주 1회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치활동을 허가받은 수형자가 신체·의류·거실 등에 대한 검사·청소 및 정리정돈 등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도소장 등은 동일 거실 안의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자치활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47조).

(3) 실태조사상의 수형자에 대한 특전

① 누진계급

여성수용자의 누진계급을 묻는 질문에서 자신의 누진계급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5.1%로 나타났다. 누진계급의 산정결과에 대한 합당성의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6.1%가 합당하다고 응답하였고, 33.9%가 부당하다고 대답하였다. 부당한 이유로는 교도관의 편파적인 행위와 차별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누진계급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59.9%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알고 있는 경우 동료수용자가 알려줘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1.6%, 교도관이 알려주었다는 응답이 12.2%, 교육받은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4%이었다.

② 책임점수

여성수용자에게 본인의 책임점수를 묻은 결과 책임점수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63.8%이었으며,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6.2%이었다. 책임점수를 알고 있는 경우(102명) 그 알게된 과정에 대해서 분류과 직원이 말해서 안다는 응답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도관이 말해서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11명이었다. 책임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78.1%로 안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소득점수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 276명 중 185명으로 67.0%를 차지하였다.

③ 진급정지, 강급

진급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1명으로 41%이었으며, 강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7명으로 26%이었다. 진급정지처분을 당한 이유는 부정서신으로 인한 징벌,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성수용자 2명은 그 이유를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강급을 당한 이유로는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으며,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2명이었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누진처우는 수형자의 자발적 노력을 전제로 하여 수형자에게 시설 내 자유 제한의 정도를 완화시켜주는 일종의 교육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장기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작업가능여부에 따라 대상범위를 분류하고 있다. 누진처우제도는 수형자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선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수용시설내의 적응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점수산정 기준 등이 획일화, 형식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책임점수는 수형자의 죄질과 개선가능성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개인적 특성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점수 역시 행상이나 작업성과 등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우 기술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저기준규칙에서와 같이 수형자의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형자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특전제도를 두기 위해서는 분류급의 탄력적 운용과 인격적 분류처우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기구나 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형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누진계급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며, 본인의 소득점수, 책임점수에 대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누진계급, 책임점수 등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당수 많았는데, 수형자의 승급의욕을 고취시키고 동기의식을 유발시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형자 자신의 분류급과 누진급에 대한

고지 및 정보제공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21) 수형자 교도작업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교도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모든 수형자는 작업의 의무를 지되, 의무관이 판정한 신체적, 정신적 적성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통상의 작업일에 수형자로 하여금 활동적으로 작업하게 하기 위하여 유용하고 충분한 작업량이 주어져야 한다. 가능한 한 작업은 석방 후 정직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수형자의 능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실용적인 직종의 직업훈련은 그 직종으로 소득을 얻을 능력이 있는 수형자와 특히 소년수를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수형자는 적당한 직업선택에 부합하고 시설관리와 규율의 필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제71조).

교도작업이 조직 및 방법은 가능한 한 시설 밖의 동종 작업과 유사하게 하여 수형자를 정상적인 직업생활 환경에 준비시켜야 한다. 그러나 수형자 및 이들의 직업훈련의 이익은 시설내 사업에서 오는 재정적 이익의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제72조).

시설의 공장 및 농장은 되도록 당국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어야 하고 개인 계약자에 의하여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수형자는 당국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항상 시설직원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작업이 정부의 다른 부서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작업에 대한 통상의 충분한 임금이 작업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정당국에 지급되어야 하며, 수형자들의 생산고가 참작되어야 한다(제73조).

자유로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

는 안 된다.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제74조).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과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복지 원조의 일부로서 요구되는 교육과 그 밖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어야 한다(제75조).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 제도 하에서 수형자는 적어도 수입의 일부를 자신의 용도를 위하여 허가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일부를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아울러 시설이 수입의 일부를 떼어 저축기금을 마련하여 석방 때 수형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제76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35조에 의하면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수형자의 사회복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작업 하게 할 수 있다.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 청소, 간호, 경리 기타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동법 제36조). 수형자 중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동법 제37조).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제38조). 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형성적 기타 사

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39조).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특히 교양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행형법시행령 제115조). 작업의 종류와 직업훈련의 경우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소장은 수형자에게 장래의 생계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116조).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 작업과정을 정하여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117조).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노쇠자·병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119조). 신청에 의하여 취업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한다(동시행령 제120조).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122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서는 교도소장 등은 수형자에게 작업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류처우심사표를 참조하여 작업지정을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68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의하면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작업시간 외의 시간에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인작업 시간은 1일 2시간이 내로 한다(동규칙 제72조).

(3) 실태조사상의 여성수용자의 작업 환경

① 작업의 유형

여성수용자의 35.1%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5.7%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직원 식당일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기계자수, 마대자루 관련 작업, 청소, 봉제, 은박지 돛자리, 컴퓨터 교육 등의 순서이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65.6%이었으며, 힘들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27.9%이었다. 현재 작업이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 그 힘든 이유로는 작업환경이 낙후되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일 자체가 힘들다는 응답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라는 응답의 순서였다.

여성수용자와의 면담결과 작업을 하고 싶어도 출역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작업의 기회가 없다는 여성수용자가 많았다.

② 상여금

작업에 대하여 상여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7.5%이었으며, 상여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7.1%를 차지하고 있다. 상여금을 받고 있지만 얼마인지 모른다는 응답이 8.6%이었다.

③ 작업에 대한 의견

출소 후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수용자는 71.6%로 나타났다. 출소 후 수용시설내의 작업이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5.1%이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42.1%로 나타났다.

앞으로 작업을 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2.2%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작업의 내용으로는 어떤 일이든 교도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공장, 사소, 식당 등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에 의하면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으며,

작업을 원하더라도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수의 여성수용자가 작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출소 후에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수용자도 71.6%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도작업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도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성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수형자의 처우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되었으며, 지금까지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들의 처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교도작업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수용자의 대부분은 직원 식당, 시설청소, 세탁 등 단순한 시설관리업무를 행하게 되고, 여성수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역시 미용, 양장, 한복, 조리 등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 왔던 역할로 제한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을 뿐, 출소 후 여성 스스로가 자립하여 사회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한 전문기술 훈련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성수용자의 형기, 연령, 학력, 취미 등을 고려하여 정보처리반, 제과 제빵, 광고디자인, 유아관리, 공예품 제작, 첨단 영농 등의 현대적 유망직종을 개설하여 여자수용자가 출소 후 자립할 수 있는 전문직업훈련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지역사회 내에 있는 직업훈련소와 중소기업체를 이용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출소 후 직장알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는 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까지 남성전유물로 인식되었던 분야에까지 진출하고 있는 선진제국의 형태를 모델로 선정하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사회여건에 부합되는 새로운 훈련직종의 개발로 교정시설 내의 직업훈련의 종목을 생계유방종목으로 확대하여 나가고, 사회내 일반기업체의 지원을 받는 방법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성인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형자에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는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교육이 포함된다. 문맹자 및 소년수형자의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하고 당국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능한 한 수형자 교육은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하여 수형자가 석방 후 어려움 없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7조).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은 수형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제78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32조에 의하면 무교육자 또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심신미약자 또는 노쇠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다.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촉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통근하게 할 수 있다. 교육의 과목·시간과 신문·도서의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동법 제34조). 한편 소장은 교육을 받는 수형자에게는 거실에서 교육에 필요한 문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행형법시행령 제112조). 수형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형자등"이라 한다)의 학과교육에 관하여 수형자등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소장은 수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행형법 제33조의2). 행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동

화·연극 또는 영화관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9조에 의하면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의 개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횟수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교도소장 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 자신의 경비부담으로 교도소등의 밖에서의 영화 등의 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동규칙 제67조제1항). 영화 등을 관람하는 때에는 자비부담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제2항).

(3) 실태조사상에 나타난 여성수용자의 교육, 여가환경

① 교육

여성수용자 중에서 정신교육을 받아보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3.4%이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6.6%이었다. 정신교육의 내용으로는 강사초빙 교육이 대부분이었으며, 교양교육, 규칙교육, 종교교육, 시청각교육이 주 내용을 이루었다.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6%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직업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여성수용자는 46.7%를 차지하였다.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들의 직업교육의 내용으로는 컴퓨터, 미용, 기계자수, 미싱, 양재 등으로 나타났다.

외부통근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1.6%에 불과하고, 77.6%는 외부통근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이 적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용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직업교육을 희망하지만 받지 못하는 수용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여가활동

대부분의 여성수용자들은 특별한 여가활동이 없었는데, 영화관람을 해본 수용자가 21.1%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회를 경험하였다는 경우가 19.6%이며, 합동생일잔치가 13.6%로 나타났다.

③ TV 및 라디오 청취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도구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이다. 실태조상으로 TV 시청을 정기적으로 한다는 응답이 87.0%이었고, 라디오 청취를 매일 정기적으로 한다는 응답이 62.7%이었다. TV를 시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1.4%에 불과하고, 라디오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9.0%로 조사되었다. TV 채널의 수가 1개라는 경우가 77.8%이었으며, 라디오의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92.4%가 선택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럽형사시설규칙에 의하면 모든 피구금자의 최소한의 개인적 필요성과 희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교육프로그램이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피구금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도덕심 및 자존심의 증진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제78조). 또한 실행가능한 피구금자에 대한 교육은 a. 피구금자가 석방 후 어려움이 없이 그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교육제도와 통일성을 유지해야하고, 외부의 교육기관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1조).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에 대한 학과교육은 수형자 등 교육규칙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동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학과교육의 종류에는 일반학과 교육,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과정으로 구분하고 일반학과 과정은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를 두고 있다. 이외에 검정고시 응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1995년 1월부터는 일반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학사 제도

를 수용자에게 개방하여 수용자에게 학업기회의 길을 넓혀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수용자들이 일반학과, 방송통신교육, 검정고시반, 독학사반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자수용자들은 전국교정시설에 20-30명 미만으로 흩어져 있고 나이가 많거나 아프거나 하여 실제로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대상자가 있어도 인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학과 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J소의 경우에만 일부 운영되고 있다.

여성수용자의 학력분포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이 가장 많지만 초등졸 이하나 무학자에게 기초학력 배양을 위한 학과교육은 재사회화나 생계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졸이상의 경우에도 구금으로 인하여 전문지식의 습득이 중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평생교육의 차원에서도 여자수용자들의 방송통신대학과정, 검정고시반, 독학사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3) 수형자의 사회관계 및 갇생보호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쌍방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제79조). 수형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미리 석방 이후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원조하여 수형자 가족의 최상의 이익과 수형자 자신의 사회복귀를 촉진해야 한다(제80조). 석방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의 또는 그 밖의 부서와 기관은 가능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석방자가 적절한 문서 및 신분증명서를 지급 받고, 돌아갈 적절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며, 기후와 계절을 고려하여 적당하고 충분한 의복을 입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석방 직후의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기관의 승인된 대표자는 시

설 및 수형자와 필요한 모든 접촉을 가져야 하며 또 수형자의 장래에 대하여 형기 시초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 기관들의 활동은 그 노력을 최대한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중앙에 집중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81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44조에 의하면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도주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인 수용설비 또는 조치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소장은 수용자가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등의 시설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송설비에 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디오의 청취와 텔레비전의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행형법시행령 제114조). 소장은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방 전 3일 동안 석방예정자 거실에 수용하고 그의 장래에 대하여 상담·지도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159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4조에 의하면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사회견학을 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봉사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동규칙 제65조).

24)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교도소에 구금해 두어서는 안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기타의 정신 장애 또는 정신이상의 수형자는 의료 관리를 받는 전문 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이들 수형자가 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는 동안은 의무관의 특별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행형시설의 의무 부서 또는 정신의무 부서는 정신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제82조). 필요한 경우 석방 후 정신치료를 계속하고 사회 정신학적 사후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83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등의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소를 포함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3) 실태조사상의 여성수용자의 환경

① 심리적 문제발생

정신적인 문제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8.1%가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9.2%를 차지하였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하였다. 일반의사 또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1.2%를 차지하였으며, 전문상담자인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0.6%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용자의 경우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수용자들은 전문적인 상담가나 의사, 교도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동료수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정신과 시설조사

수용시설의 사동 내에 상담시설이 있는 곳이 4곳, 없는 곳이 6곳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담실이 있는 경우라도 컴퓨터실, 직원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문가에 의한 상담은 10곳 모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용자 상담은 담당 보안과 직원 내지는 보안 계장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신과 진료

정신과 진료는 내부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3곳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의무과에서 외부 정신과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경우이며, 7곳에서는 외부진료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결과 정신장애자를 정신과병원으로 이송하는 곳이 2곳이며, 치료감호소로 이송하는 경우가 4곳, 진주교도소로 이송하는 곳이 3곳으로 나타났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과상으로 문제가 있었으나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9.2%가 있었고, 시설 내에서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경우도 10곳 중에서 3곳에 불과하였다. 최저기준규칙과 유럽형사시설규칙에 의하면 정신병자로 판명된 피구금자는 행형시설에 구금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시설로 이송되어야 하고, 기타 중대한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에 걸린 피구금자에 대한 관찰과 처우를 위하여 의학적 관리하에 있는 특별시설이나 기구가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형시설의 의료업무 및 정신과 업무는 그러한 치료가 필요한 모든 피구금자에게 정신의학적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소에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행형법 제29조) 외에는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치료의 필요성과 접근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신질환자의 처우와 관련해서 미국 의사협회의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지침은 우리나라의 입법방향을 설정하는데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교정직원은 감정혼란, 성장지체, 화학약물 의존성 등의 증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신입수용자는 자격 있는 심리학자에 의해서 면담되고,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임상병리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임상병리적 문제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한다. 넷째, 정신질환 수형자의 거실배정, 작업배정, 징벌, 그리고 이송 등이 임상전문가의 자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섯째, 당해 시설에서 치료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수형자는 즉시 가능한 시설로 이송한다.

25) 미결수용자

(1)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내용

범죄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유치중인 채 아직 사실심리와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에서 이하 ‘미결수용자’라고 한다.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무죄인 자로서 처우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미결수용자에 관하여 준수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결구금자는 이하의 규칙에서 핵심사항에 관하여서만 기술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아야 한다(제84조).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분리수용되어야 한다. 소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원칙적으로 별개의 시설에 구금되어야 한다(제85조). 미결수용자는 기후에 따라 상이한 지역적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침실에서 혼자 자야 한다(제86조).

시설의 질서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미결수용자는 희망하는 경우 자기의 비용으로 교정당국, 가족 또는 친구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얻어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교정당국이 이들의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제87조). 미결수용자에게는 청결하고 적당한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미결수용자가 죄수복을 입는 경우 그 죄수복은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제88조). 미결수용자에게는 항상 작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작업의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결수용자가 작업하기로 선택한 경우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제89조). 미결수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비용으로 재판 및 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해하지 않는 서적, 신문, 필기용구 및 기타 소일거리를 구입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제90조). 미결수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제91조). 미결피구금자는 구금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가족 및 친구와 통신하고 이들의 방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가 전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한과 감시는 오직 재판과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제92조). 미결구금자는 방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변호인의 방문을 받으며 비밀의 지시문서를 준비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결구금자의 희망이 있으면 필요한 필기용구가 주어져야 한다. 미결구금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경찰관 또는 사설직원은 감시 하에 둘 수는 있지만, 담화의 청취가 가능해서는 안 된다(제93조).

(2) 우리나라 행형법령상의 규정내용

행형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미결수용자가 법률이 정하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의류 및 신발의 자비부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미결수용자와 사형이 확정된 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동법 제63조).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고 상호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동법 제64조). 미결수용자의 두발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동법 제65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동법 제66조).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다(동법 제67조).

행형법시행령 제171조에 의하면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에게는 공범 부호를 붙여야 하고, 미결수용자를 다른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송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 상호관련된 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결수용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수형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소장은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교도소 등의 밖에서 하는 작업에 취업시킬 수 없다(동시행령 제174조).

V.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1. 주요 항목별 여성수용자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1) 피구금자의 분리 및 여성수용시설

현재 선진국의 행형에서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성별에 따른 분리수용의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여자교도소를 아예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동일 교정시설 내에서 별도로 구획된 구금위주의 여성수용시설을 가지고는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이라든지 교도작업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중점 교육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피구금자는 다른 시설 또는 관리체제를 분리하여 수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 재판상 법률상의 지위, 처우상의 특별한 필요성의 의학적 상태,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되며(제1항), 남자와 여자는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구금되지 않으면 안된다. 단, 확립된 처우의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조직된 활동에는 같이 참가할 수 있다(제2항).

미국의 경우 여성수용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의 통계에 의하면 남자는 118명당 1명이 여자는 1,818명당 1명이 구금형으로 연방 또는 주립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수용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수용자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여성수용시설인 여자교도소를 두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에서는 교육, 작업, 여가 기타 교제 등에서 성인 여성과 소녀들이 함께 있는 것이 상호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아이를 대동하는 시설의 설치가 문제되고 있는데, 법원에서 여성에게 형벌을 선고할 때에 여성이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즉, 여성수용자의 권리 내용 중에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두 개의 관련 사건에서 아이의 양육권을 쉽게 침해받는 권리가 아닌 기본적인 권리(fundamental right)로 인정하였다. 종전에는 교정시설에서 아이의 수유문제로 9개월 미만의 유아만을 대동하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현재에는 많이 완화되어 공간이 허락한다면 아이들을 더 오랜 기간 대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별도의 유아대동시설을 교도소 내에 계획하고 있다.

독일의 바이에른 주의 경우 여성수용자는 대개 여성전용교도소(351명 수용 규모)에 수용된다. 그 외 일반교도소에 여자를 위한 특별한 구역을 시설한 교도소들이 있다. 바이에른주에서는 여성수용자는 11개의 교도소에 분산 수용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여성수용자의 약 90%는 여성교도소인 Aichach교도소에 수용된다. 원래 순수한 여성교도소인 Aichach교도소는 351명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Munchen교도소의 여성수용자 수용능력은 80명, Nurnberg교도소의 경우 60명 수용이 가능하다. 여성구역이 시설되어 있는 나머지 8개 교도소의 경우에는 5명에서 23명까지의 여성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다. 1995년의 통계에 의하면 바이에른주의 여자교도소(Aichach 교도소)의 독거수용비율은 거의 75%에 달하고 있다. 독일 행형법 제142조에 따른 시설로서 모자사동(Mutter-Kinder-Heim)을 두고 있다. 이 시설은 여성수용자가 자유형이나 소년형을 선고받거나 미결구금이 행해진 경우에 이용된다. 수용된 모든 어린이는 어머니의 작업시간 동안에 개방시설의 어린이 그룹에서 유아교사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 아이를 수용하기 전에 어머니와 아이의 공동수용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다. 아이의 수용은 수용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소년국의 사항이다.

일본의 경우 전국에 여자교도소가 6개소나 있어 여성에게 적합한 교정교육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마련, 중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1년 통계에 의하면 수용자의 총수는 152만명이며, 그중 여성수용자는 약 6만2천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 697개소의

교도소가 있으며, 그 중 여성교도소는 28개소이다. 여성수용자가 극히 적은 서북내륙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省 단위의 여성교도소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교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남성교도소 내에 별도의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감옥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감옥에서는 성년 남성수용자, 여성수용자 및 미성년수용자를 분류하여 수용하여 관리한다. 미성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는 그들의 생리, 심리 특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여성수용자는 여성감옥 또는 남성감옥 내의 여성수감구역에 분류하여 수감한다. 여성감옥은 대부분 지방에서 省 소재지로 이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여성감옥 인민경찰이 직접 담당하며, 대부분 여성감옥의 소장도 여성감옥 인민경찰이 맡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214조 제1항에서는 임신 혹은 유아를 보육하는 여성수용자는 감옥 외에서의 형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옥법 제19조에서는 여성수용자는 자녀와 함께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여성수용자의 유아는 통상 그의 직계친족이거나 정부의 공익 양육시설에서 양육된다.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을 감안할 때 아이가 부모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 건전한 성장이 보장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2) 거주설비

유럽형사시설규칙 제28조 제2항은 어머니인 피구금자와 함께 유아가 시설 내에서 생활하도록 허락된 경우에는 자격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육아실을 설치해야 하고, 유아가 어머니에게 맡겨지지 않는 동안은 위의 육아실에 맡겨져야 한다.

독일의 경우 행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통상적인 교정시설은 개방시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형법 제10조). 하지만 보안의 관점에서 폐쇄시설로서 시설 내외의 보안체계를 유지하는 보안1급 시설과 보다 유연한 건축 및 기술

적 보안체계를 유지하는 보안2급으로 분류하는 실무관행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한 수용자의 다양한 성향에 맞는 처우가 행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방실에의 구금이 배려되어야 한다(제141조). 보안등급에 따른 처우는 각각 분리된 시설에서 집행된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교정계획에 따른 처우를 위해서는 시설 안에서 수형자는 각각의 보안등급상의 요청 또는 처우필요에 따라 소규모에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처우그룹이나 생활그룹으로 세분 수용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행형법 제83조에 따라 누진계급과 관계없이 집행기관이 지급하거나 집행기관이 동의를 한 물품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시설의 동의가 없더라도 다른 수용자로부터 값나지 않는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의 교환거래를 승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의 행형법은 거실의 장식(제19조), 물품 등의 구입(제22조), 소포수령(제33조), 종교서적이거나 물품의 소지(제53조 제2항, 제3항), 신문 잡지의 구독(제68조), 개인 라디오나 TV의 소지(제69조 제2항),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한 도서나 물건의 소지(제70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설의 안전과 질서 내지 집행의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교도소의 경우 관구 중심 경영(Unit Management)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on the floor'라고 표현되는 직접 계호를 말하는데 1개의 관구는 보통 40-50명의 재소자를 수용하는데 직원은 20명 정도이다. 표준적인 Unit Management는 건물이 사각형으로 되어있어 수용자에게 보다 많은 공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독서실, 의무실, 식당, 도서실, 독서실, 교실, 체력단련실, 샤워실이 있어 관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뉴질랜드 교도소의 평균 거실크기는 넓이 8feet(약 2.4m), 길이 10feet(약 3m)이며, 침대 1개, 의자, 책, TV, 라디오, 컴퓨터(공부할 시), 옷장, 변기, 세면기, 히터, 전등(거실 내에서 조정 가능함), 게시판, 담배 등이 있다. 여성수용자의 경우 뜨개질 재료, 화장품, 빗 등 여성에게 필요한 용품을 둘 수 있다.

3) 수형자 분류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유럽형사시설규칙 제13조는 “가능한 한 구분된 시설, 구분된 구역이 다른 처우체계의 관리 내지 특수 부류의 피구금자의 분리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41조 제1항은 “피구금자에게는 입소 시에 자기가 소속하는 부류의 피구금자의 처우를 규율하는 규칙, 시설의 규율에 관한 규칙, 정보를 구하거나 불복신청을 하기 위해 허용되어 있는 방법 및 기타 자기의 권리,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에 의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행형법에 의하면 모든 교정시설은 신입자 전담부가 설치되어야 한다. 양질의 입소절차, 처우를 위한 충분한 조사 그리고 이에 기초한 교정계획(행형법 제5조 내지 제7조)은 효과적인 처우 행형을 위하여 필요조건이다. 9개월 미만의 자유형 수형자, 특히 미결구금시설에는 위기개입, 자살위험 감소, 즉각적인 사회적 원조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신입자 전담부를 두고 있다. 독일 행형법 제85조에 따르면 도망의 위험이 고도로 높거나 그의 행동이나 상태가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에 수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수용하는데 적합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인 계기로 인해 단기간에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보안조치를 명해야 하고, 이러한 이송제도를 활용해서는 안되며, 개별수용자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가를 판단함이 없이 특정유형의 수용자에게 획일적으로 중구금시설로의 이송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경우 수형자의 분류급을 수용분류급과 처우분류급으로 나누어 그 중에서도 분류수용은 수용해야할 시설 및 시설내의 구획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 확실한 수용분류의 바탕 위에 처우분류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용분류는 각자가 갖는 객관적 조건을 기준으로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처우분류는 개별특성에 따라 7개의 처우군으로 분류하여 상응한 교육치료 등 처우를 행한다.

4) 의료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유럽형사시설규칙 제28조에 의하면 “가능한 경우는 언제라도 행형시설 외의 병원에서 아이의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신중의 여자를 위해 행형시설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고 출산 전후의 치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32조는 시설의 의료서비스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 및 석방후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며, 일반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내과적, 외과적 정신의학상의 모든 서비스는 피구금자에 대해서도 제공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교정시설 내에 1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항시 상주하여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담당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의무과의 의사, 치과 의사, 약사 등의 수준이나 의료시설들이 일반병원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다.

독일의 헛센주의 경우 수용자의 건강보호영역에서는 환경, 에너지, 소년, 가정, 그리고 건강을 담당하는 부와 주정부의 의료분과위원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 수용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와 전문적인 간호를 위해서는 특별 전문적 공무원인 간호직(Krankenpflegedient)에 속하는 시험을 거친 간호사가 이를 담당한다. 수용자의 의료적 처우와 보호는 상근직의 의사가 이를 담당한다.

영국의 교정시설의 의료기관은 모든 재소자의 정신 및 육체적 건강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들의 생활과 작업환경 그리고 급식을 포함한 모든 처우에 대해 충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교도소 병원의 의료직원의 증원과 정신과 설비를 보강하여 종합병원화를 구상하고 있으며, 전 재소자의 15-20%나 되는 정신질환자를 위해 의료직원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모든 의료비는 정부에서 지불하며 의사들은 일주일에 한번 씩 내진하고, 간호사는 상주하고 있다.

중국의 교정처우에서 여성수용자의 경우 여성의 생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

요한 의료시설과 의무인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병립하고 있다. 병이 위독한 여성수용자는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미국의 미시시피주에서는 부부 접견시에는 입회를 생략하고 그 접견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부부 접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행형 성적이 양호한 기혼자들이 특별접견실에서 장시간 접견을 허용하는 것으로 많은 교정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여성교도소는 어린이 발달과 위탁기법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부모교육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어린이 보호, 부모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어린이 면회자를 위해 장난감과 책, 그리고 게임기를 마련해 놓은 특별면회 구역에서는 위탁과 관계 있는 지원수단을 제공한다. 어린이 위주의 면회시설은 정규면회실의 일부로서 모든 어린이와 부모에게 개방된다. 나머지 시설은 특별센터로서 부모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만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센터에서는 아주 드물지만 전문 사회복지사가 일을 맡고 있는데, 이들은 부모와 어린이에게 나이에 맞는 장난감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고, 부모와 자식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부모에게 시범을 보이기도 하며,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위탁 전략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지 부모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 1995년 통계에 의하면 여성수용자의 약 34%는 기혼이고, 30%는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수용자의 이에 상응하는 수치는 24% 및 18%이다. 따라서 독일의 교도소는 여성수용자의 적극적인 사회 접촉을 특별히 촉진하고 가능하면 그들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혼인 및 가족상담,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조직과 후원자와의 연결, 가족적인 방문주선, 휴가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모범 여성수용자는 자녀들과 설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며, 교도소 내부에 ‘부부의 집’도 마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보내도록 하고 있다.

6) 수형자 교도작업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유럽형사시설규칙에 의하면 유죄를 선고받은 피구금자는 의사가 결정한 신체적, 정신적 적합성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제71조 제2항). 그리고 피구금자는 합리적인 직업선택 및 시설의 관리상 법률상 요구가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종류의 작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제71조 제6항).

미국의 경우 수용자의 직업훈련으로 1973년부터 도입되어 발달된 제도가 “남녀공학 교정제도”(co-educational correction)이다. 현재 남녀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4개의 교도소(Fortworth, Lexington, Morgantown, Pleasanton) 중 3개 교도소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남녀를 수용 사동은 구획되지 만 같은 교도소에서 수용하고, 남녀가 함께 직업훈련, 교육, 작업, 레크리에이션, 식사, 예배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남녀 수용자간 신체적 접촉으로 서로 손을 잡는 것과 팔을 끼고 다니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이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되어 남녀공학 교정제도에서의 배제, 타소 이송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1988년의 평가에서 그 성과에 대하여 공감을 얻고 있고,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정예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점이 있다.

독일 행형법은 수형자는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적합한 작업을 해야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1조). 교정 직원은 수형자에게 경제적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작업에 배당하고 이 때 그의 능력, 숙련도, 소질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제37조). 독일의 경우 연방 노동청에서 각 교정시설에 직업훈련소를 설치하고 입소 시까지 어떠한 기술도 습득하지 못하였거나 습득한 기

술이 사양 직종으로 향후 직업으로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데 이에 대한 훈련비와 훈련교사를 파견하는 일은 연방 노동청의 책임이다. 다만 훈련 시설의 설치나 소모품 등 일상적인 훈련 보 조비는 당해 교정시설 측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여성수용자의 주된 교육 및 교도작업은 여성전용시설인 Aichach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매우 단기간의 자유형이 집행되는 다른 시설에서는 교도소 자체의 작업 이외에 여성수용자는 쉽게 배울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작업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전자부품 조립, 재료건본 목록제조, 바느질, 뜨개질, 손쉬운 조립 등이다. 또한 독일의 경 우 교정직 공무원 중에 심리처우직(psychologischer Dienst)을 두어 수용자의 처우조사와 교정계획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심리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처우 결정시에 조언하는 역할을 행하고 있 다. 만약 수용자가 심리적 정신의학적인 사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교도작업을 하 지 못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노동치료적(arbeitstherapeutisch) 또는 노동교육적인 작업장을 단계적 계속적으로 설치하 고 있다.

중국의 경우 여성수용자의 노동은 실내작업을 위주로 진행된다. 여성수용자 의 생리적 특징과 사회복귀 후의 취직을 염두에 두고 복장, 자수, 미용, 조리 등 직업기술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7)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유럽형사시설규칙 제77조에 의하면 모든 피구금자의 최소한의 개인적 필요 성과 희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교육프로그램이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이들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피구금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 와 도덕심 및 자존심의 증진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 히 행형 당국은 젊은 피구금자, 외국인 피구금자 또는 특별한 문화적, 민족적 필요성을 갖는 피구금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제79조). 또한 문맹

이거나 수 계산을 할 수 없는 피구금자와 같은 특별한 문제를 갖는 피구금자에게는 특별한 교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0조).

미국의 연방법원 판결에서는 여성수용자의 성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주장에 대해 평등 보호 규정의 모순된 적용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평등 보호 규정을 교육적 프로그램에서 적용하여 남녀수용자의 교육영역에서 차별적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교육적 영역 이외에 남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구획된 장소에서 분리되어 수용되어야 하며 이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연방법원은 판단하였다.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를 단지 성구별에 근거해서 분리 수용한 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재 분리된 구금되어 있는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교정서비스들을 동등하게 적용 받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 교정사업 중에서 교육은 여성수용자를 교정 교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성수용자를 상대로 체계적인 법제, 시사, 도덕, 정책 등 교육을 실시하여 법제관념과 준법의식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특히 “自尊, 自重, 自立, 自強”교육에 치중하여 그들의 혼인, 가족, 자녀문제에 대한 우려도 아울러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맹퇴치와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지식 보급에 주력한다. 중국의 경우 봉건적인 전통에 따라 여성수용자의 경우 문맹 비율이 높고, 문화수준이 낮다. 따라서 각 교정기관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사회 의무교육에 버금가는 수준과 내용으로 여러 가지 풍부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바이에른 주의 경우 여성수용자를 포함한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과교육을 지역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대규모의 교도소에서는 초등상급학교 졸업을 위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실업교육강좌도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부와 합의하여 1980년부터 관할구역내의 직업학교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실업교육강좌가 실시되고 있다. 독일의 헛센주의 경우 교정체육은 매우 체계화되어 있다. 교정시설의 새로운 체육설비는 매년 운영되고 있고, 체육지도를 위한 일반교정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체육과 교

정”(Sport und Justizvollzug)이란 이름의 협의회에서 헷센주 체육연맹, 헷센 소년체육, 헷센 교정체육 등의 단체가 상호협력하고 있다.

8) 규율 및 징벌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유럽형사시설규칙 제38조에 의하면 징벌방 및 피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기타의 징벌처분은 의사가 피구금자를 진료한 후에 서면에 의해 당사자가 징벌을 감당할 수 있다는 증명이 없으면 과할 수 없다. 질서와 규율은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그리고 처우목적을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제33조). 그에 따른 수단으로 집단적 징벌, 체벌, 암실구금 및 모든 잔혹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제재는 징벌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제37조).

독일의 바이에른 주의 경우 교정은 바이에른 주 법무부가 관장한다, 여기에는 사법집행부(Abteilung Justizvollzug)가 설치되어 있다. 사법집행부의 직무는 교정의 조직, 교육 및 재교육을 포함한 인사문제, 전체 교정시설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시설건축, 교정에 관한 입법에의 관여, 재소자에 대한 학과교육 및 직업훈련 그리고 청원이나 고충의 처리 등이 있다. 법무부와 일선 교정시설 간에는 중간적인 관청 특히 교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감독관청으로 법무부는 매년 적어도 2회 이상 시찰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밀한 접촉은 신속한 정책결정으로 이어지고 교정실무에 대한 법무부의 밀착된 감독을 가능하게 한다. 독일의 행형법 제82조는 시설 내에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행동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일과의 준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의 침해금지, 교도관의 지시에 대한 복종 의무, 정돈 의무, 위험에 대한 보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독일 행형법 제82조 제1항에는 수용자는 시설의 직원, 공동수용자 기타 타인(예건대 교화위원, 외부강사, 순회점점 공무원 등)에 대한 태도로 시설 내에 질서있는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행형법 제102조 제1항은 행형법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행

형법을 근거로 부과된 의무를 고의나 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징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 행형법 제103조 제1항은 징벌의 종류를 9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1)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징벌로서 견책(Verweise)과 3개월 이내의 생활비 처분과 개인 구매의 제한과 박탈, 2) 징계를 통한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가능한 한 위반행위와 징벌 조치간의 관련이 있는 경우에 과해지는 특별한 징벌로서, 2주 이내의 독서 및 라디오·TV 시청의 제한 또는 박탈, 3개월 이내의 여가시간 활동을 위한 물건의 사용이나 공동체 행사에의 참여의 제한 또는 박탈, 4주 이내의 지정된 작업이나 활동의 박탈, 3개월 이내의 시설 외에 있는 사람과의 교통을 긴급한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 3) 중대하거나 수차례 반복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가중적 징벌로서 4주 이내의 금치가 있다.

일본의 행형시설의 규율은 엄격하다. 형무소의 규율에는 법정규율과 재량규율이 있다고 보고 재량규율은 재소자 준수사항으로 「수형자의 심득」, 「생활의 안내」 책자에 적어놓았으며, 이 준수사항에도 직무규율과 처우규율로 나누어지고, 직무규율이란 문서에 의한 규율, 구두에 의한 규율을 말한다. 처우규율은 집단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규율과 교정훈련을 위한 규율 등으로 나누어서 이의 하나라도 위반하면 질서유지를 위해 징벌이 과해지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재소자 징벌 사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교도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2) 작업을 태만히 하거나 작업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3) 불손하고 모욕적이고 상스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서신에 사용해서도 안된다. 4) 공격적, 위협적, 모욕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5) 허가 없이 교도소 내에서 외래인과 대화하여서는 안된다. 6) 허가 없이 거실을 이탈하거나 작업장소 및 지정된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7) 교도관의 허가 없이 함부로 물건을 거실 내로 가져와서는 안된다. 8) 근거 없는 불평을 하여서는 안된다. 9) 타 재소자를 공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10) 교도소 내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남의 소유물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11)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2) 기타 교도소 내 질서에 위반되는 행

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뉴질랜드 행형법상의 징벌의 종류는 최대 3개월간의 사면구신일(Remission date) 연기, 3개월 이내의 작업 상여금 박탈, 최장 15일간의 독거실 수용 등이다. 한편 뉴질랜드의 교정처우에서 수용자는 처우상의 불만이나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을 시 언제든지 교도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수석조사관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옴브즈만 또는 방문판사에게 처우상의 불만을 서면 또는 구두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재소자의 고충처리와 원만한 교정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수석조사관들(senior inspectors)이 해당 지역의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수용자들과 상담함으로써 수용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교정 사고의 발생시 이를 조사하여 법무부 차관에게 조사 보고함으로써 교정행정을 바르게 집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VI. 여성 교도관 조사

여성 교도관 조사는 전국 10개 구금시설에서 근무중인 115명의 여성 교도관에 대한 설문조사와 여성 교도관 35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남녀간의 비교를 위해서 106명의 남성 교도관에게도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구금시설별 설문조사 교도관 수와 개별면담 교도관 수는 <표6-1>과 <표6-2>와 같다.

<표 6-1> 교도관 설문 응답자 수

| | | 여성 | 남성 | 계 |
|-----|---|-----|-----|-----|
| 기 관 | A | 18 | | 18 |
| | B | 3 | | 3 |
| | C | 5 | 20 | 25 |
| | D | 21 | | 21 |
| | E | 10 | | 10 |
| | F | 3 | 11 | 14 |
| | G | 5 | 19 | 24 |
| | H | 7 | 31 | 38 |
| | I | 6 | 12 | 18 |
| | J | 37 | 13 | 50 |
| | 계 | 115 | 106 | 221 |

<표 6-2> 개별면담 여성교도관 소속별 분포

| | 9급 | 8급 | 7급 | 6급 | 5급 | 간호직 | 분류직 | 교무직 |
|--------|-----|----|----|----|----|-------|-------|-------|
| A | 1 | 1 | 1 | | | | | |
| B | 2 | | | | | | | |
| C | 2 | 2 | | | | | | |
| D | 1 | 1 | 1 | 1 | | | | |
| E | | 1 | | | | 1(7급) | 1(6급) | |
| F | 1 | 1 | 1 | | | 1(8급) | | |
| G | 1 | | | | | 1(7급) | 1(5급) | |
| H | | 1 | 1 | | | 1(7급) | | 1(6급) |
| I | | 1 | 1 | | | | | |
| J | 2 | 1 | 1 | | 1 | 1(7급) | | |
| 총(35명) | 10명 | 9명 | 6명 | 1명 | 1명 | 5명 | 2명 | 1명 |

1. 조사기관의 여성 수용자 관리 직원 현황

1) 여성 교도관 현황

<표 6-3> 기관별 여성 교도관 직급별 현황 (단위: 명)

| 기관명 | 9급 | 8급 | 7급 | 6급 | 5급 | 계 |
|-----|----|----|----|----|----|-----|
| A | 2 | 13 | 9 | 2 | | 26 |
| B | 4 | 3 | 2 | | | 9 |
| C | 4 | 3 | 2 | | 1 | 10 |
| D | 9 | 21 | 21 | 2 | | 53 |
| E | 11 | 6 | 11 | 4 | | 32 |
| F | 1 | 4 | 1 | | | 6 |
| G | 4 | 4 | 6 | 2 | 1 | 17 |
| H | 4 | 7 | 4 | 1 | | 16 |
| I | 1 | 5 | 4 | 1 | | 11 |
| J | 55 | 26 | 10 | 8 | 1 | 100 |
| 계 | 95 | 92 | 70 | 20 | 3 | 280 |

2) 의사, 간호사, 영양사 현황

<표 6-4> 기관별 의사, 간호사, 영양사 현황

| 기관명 | 의 사 | | 간 호 사 | | 간호조무사 유자격 교도관수 | 상임 영양사 |
|-----|-------------|-------------|-------------|-------------|----------------------|-----------|
| | 남녀수용자 공동 | 여성수용자 전담 | 남녀수용자 공동 | 여성수용자 전담 | | |
| A | 2 | | 1 | 1 | 3 | 유 |
| B | 2 | | 1 | | 3 | 유 |
| C | | | 2 | | 1 | 무 |
| D | 3 | | 1 | 1 | 9 | 유 |
| E | 3 | | 2 | 1 | 9 | 유 |
| F | 1 | | 1 | | 3 | 유 |
| G | 2 | | 1 | | 5 | 유 |
| H | 2 | | 2 | | 5 | 무 |
| I | 2 | | 1 | | 3 | 무 |
| J | 1 | 1 | | 1 | 3 | 무 |
| 계 | 18 | 1 | 12 | 4 | 44 | |

3) 기타 직원 현황

<표 6-5> 각 기관별 기타 직원 현황

| 유형 기관 | 상 임 | | 시간제/요일제 | 교화위원 | 자원봉사자 | 기 타 |
|----------|-------------|---------------------------------|--------------------------------|-----------------------------------|--|--------------|
| | 남녀수용자 공동 | 여성수용자 전담 | | | | |
| A | | | | 사회사업가 2명 교사 11명 | | |
| B | | | 치과의사 2명 치과간호사 2명 카운셀러 4명 | 카운셀러 2명 | 카운셀러 1명 교사 1명 | |
| C | | | 내과의사 1명 | | | |
| D | | | | | 정신과의사 1명 | |
| E | | | | 정신과 의사 1명 | | |
| F | | | 정신과의사 1명 | 카운슬러 2명 | | |
| G | 교사 2명 | | 직업훈련강사 4명 | | | 정신과의사 1명 |
| H | | 직업훈련강 사 2명 | 직업훈련강사 2명 | | | |
| I | | | | 심리학자 1명 카운슬러 2명 | | 정신과의사 1명 |
| J | | 정보화교육 교사 1명 직업훈련 교사 1명 | 정보화교육교사 1명 직업훈련 강사 5명 | 사회사업가46명 교사 7명 직업훈련강사 1명 | 상담활동 39단체 사회사업가 27회 420명 교사 1회 29명 미용상사 26회 | 특별활동지도 4명 |

4) 여성 교도관 교육 현황

최근 5년간 여성교도관의 각종 교육이수 실적을 살펴보았다. 최근 5년간 여성교도관의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여성교도관 1인당 연평균 교육이수 횟수는 0.3회부터 0.71회까지로 나타났다.

<표 6-6> 최근 5년간 여성 교도관 교육이수 실적

| 기관명 | 교육이수 횟수 | 여성교도관 수 | 직원 1인당 연평균 교육 이수 횟수 |
|-----|---------|---------|------------------------|
| A | 66 | 26 | 0.51 |
| B | 32 | 9 | 0.71 |
| C | 24 | 10 | 0.48 |
| D | 115 | 53 | 0.43 |
| E | 60 | 32 | 0.38 |
| F | 14 | 6 | 0.47 |
| G | 28 | 17 | 0.33 |
| H | 43 | 16 | 0.54 |
| I | 17 | 11 | 0.30 |
| J | 221 | 100 | 0.44 |
| 계 | 620 | 280 | 0.44 |

2. 여성교도관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지 구성

설문내용은 기본 인적사항을 묻는 6개 문항과 직무특성과 직무만족도를 측정하는 32개의 문항, 직무탈진감을 측정하는 2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척도(안근석, 1987)³⁾는 1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직무탈진감 척도(Maslach, 1982)⁴⁾는 '정서적 소진', '성취감', '비인격화'로 구성 되어있다.

3) 안근석 (1987). 직무특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성.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4) Maslach, C. (1982). Understanding burnout : Definitional issues in analyzing a complex phenomenon. In U.S. paine(ed.), *Job stress and burnout* (pp. 29-41), Beverly Hills, CA : Sage.

<표 6-7> 여성 교도관 설문조사에 사용된 척도

| 척도 | 요인명 | 측정내용 | 문항번호 |
|---------------------|--------------|------------------------------------|-----------------------------------|
| 직무탈진감 척도 | 정서소진 | 직무에 따른 신체적·정서적 피로감 | 1, 2, 3, 4, 5 |
| | 성취감 | 자신의 업무에 대해 보람을 느끼는가? | 7, 8, 9, 10, 11, 12, 13, 14, 15 |
| | 비인격화 | 수용자들을 사무적·비인격적으로 대하는가? | 6, 16, 17, 18, 19, 20, 21, 22, 23 |
|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척도 | 기술다양성 | 업무를 수행할 때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며, 기술습득이 용이한가 | 22, 31 |
| | 과업정체성 | 직무를 수행하는데 의존도, 진척사항의 검토 | 28, 29 |
| | 직무중요성 | 교정업무에서 자신의 직무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25, 26 |
| | 자율성 | 직무 수행에 능동적인 수행이 가능한가? | 23, 27, 30, 32 |
| | 피드백 | 업무수행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있는가? | 24, |
| | 직무자체 | 직무와 관련된 종합적인 평가 | 2, 7, 13, 19 |
| | 급료 | 일에 대하여 받는 임금 | 1, 5, 11, 17 |
| | 승진 | 현 직업에서의 승진 기회 | 6, 12, 18 |
| | 동료 | 동료간의 관계 | 3, 8, 14, 20 |
| | 직장상사 | 직장상사의 자질, 업무능력 평가 | 4, 9, 15, 21 |
| | 직무만족 |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는가? | 10 |
| | 직업 재 선택기회 | 만약 직업에 대해 재 선택기회가 주어진다면? | 16 |

2)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설문조사 응답자 221명의 근무 배명 년도는 1972년부터 2003년까지 다양했으며, 근무지 이동 횟수는 한 군데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전체 55.7%로 가장 높았고, 2군데 26.7%, 3군데 10.0%이었고, 4군데 이상 이동한 교도관들은 7.7%를 차지했다. 이러한 비율은 응답자들 대부분이 6급 이하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동근무를 실시해야 하는 6급 이상의 고급간부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이동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

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동근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으며, 대체적으로 한 곳에 머물기를 희망하는 편이었으나, C소의 경우는 면담조사 결과, 이동근무를 찬성하는 면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직급은 9급부터 6급까지 다양했고, 8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43.4%).

<표 6-8> 설문조사 교도관 직급별 분포 및 연령 분포

| | | 현재직급 | | | | 계 |
|------|---|-------|-------|-------|-------|-------|
| | | 9급 | 8급 | 7급 | 6급 | |
| 성별 | 남 | 21 | 52 | 27 | 6 | 106 |
| | 여 | 33 | 44 | 34 | 4 | 115 |
| | 계 | 54 | 96 | 61 | 10 | 221 |
| 평균연령 | 남 | 30.95 | 37.63 | 43.85 | 45.33 | 39.44 |
| | 여 | 27.91 | 33.36 | 41.47 | 47.25 | 37.49 |

<표 6-9> 설문조사 교도관 근무 부서 및 최종학력별 분포

| | | 현재 근무 부서 | | | | | | | 계 | |
|--------|---|----------|-----------|-----------|-------------|-------------|-----------|------|---|-----|
| | | 보안과 | 서무과 | 작업과 | 용도과 | 분류 심사과 | 교무과 | 의무과 | | 출정과 |
| 성 별 | 남 | 86 | 6 | 1 | 1 | 4 | 3 | 3 | 2 | 106 |
| | 여 | 104 | 8 | | 1 | | 1 | 1 | | 115 |
| 계 | | 190 | 14 | 1 | 2 | 4 | 4 | 4 | 2 | 221 |
| | | 최종학력 | | | | | | | 계 | |
| | | 고 졸 | 전문대 중퇴 | 전문대 졸업 | 4년제 대학중퇴 | 4년제 대학졸업 | 대학원 이상 | 검정고시 | | |
| 성 별 | 남 | 33 | 3 | 13 | 10 | 44 | 2 | 1 | | 106 |
| | 여 | 26 | | 6 | 5 | 76 | 2 | | | 115 |
| 계 | | 59 | 3 | 19 | 15 | 120 | 4 | 1 | | 221 |

설문조사에 응한 221명의 대상자 중 전체의 86.0%인 190명이 보안과에서 근무

무를 하고 있고, 여성 교도관의 경우 115명 중 104명(90.4%)의 인원이 보안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들의 학력은 전체의 221명 중 120명(54.3%)이 4년제 대학 졸업자였으며, 여성교도관은 전체 115명 중 76명(66.1%)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교도관과 수용자 간 비율은 4.40:1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 교도관과 수용자 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B소로 나타났다(9.22:1).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기관 내 근무하는 여성 교도관을 총 망라했기 때문에 실제 계호를 담당하는 여성교도관과 수용자간의 비율은 더 높을 것이다.

<표 6-10> 기관별 여성교도관 vs. 여성수용자 비율현황

| 기관명 | 여성 직원수 | 수용자수 | 비율 |
|-----|--------|------|----------|
| A | 26 | 126 | 4.85 : 1 |
| B | 9 | 83 | 9.22 : 1 |
| C | 10 | 39 | 3.90 : 1 |
| D | 115 | 335 | 2.91 : 1 |
| E | 34 | 197 | 5.79 : 1 |
| F | 6 | 32 | 5.33 : 1 |
| G | 17 | 101 | 5.94 : 1 |
| H | 16 | 82 | 5.12 : 1 |
| I | 11 | 71 | 6.45 : 1 |
| J | 100 | 448 | 4.48 : 1 |
| 계 | 344 | 1514 | 4.40 : 1 |

3) 기관별 여성교도관 응답 비교

(1) 직무탈진감

① 정서소진

교정직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체적·정서적 피로에 대한 물음에 대해 5점 척도에서 평균 3.50(표준편차 .74)을 나타냈고, A소와 F소가 3.73으로 가장 높았으며, H소(3.54), B소(3.53)의 순으로 나타났다.

② 성취감

성취감이 높게 나타나게 되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얼마나 보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이 항목의 평균은 3.18(표준편차 .59)로 나타났다. G소 여성교도관들이 업무에서 성취감을 다른 구금시설 여성교도관에 비해 높게 나타냈다(3.73). 그러나 가장 낮은 성취감을 나타낸 C소의 경우 G소와 비교에서 무려 1.29점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C소에서 근무하는 여건이 비교적 다른 구금시설에 비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면과 시설과 직무가 기타 지역에 비해 노후하고,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곳에 갇혀있다는 허무감을 가짐으로써 낮아진 것으로 면담결과에서 나타났다.

③ 비인격화

‘비인격화’ 항목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용자들을 사무적 혹은 비인격적으로 관리하는가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평균 2.64(표준편차 .66)로 나타났다. 설문문을 실시한 10개소의 여성교도관들은 모두 3점 이하의 점수를 보이고 있고, 이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난 곳은 B소와 G소였다(2.33). 반면, 비교적 높은 곳은 I소(2.97)와 C소(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 근무기관별 여성교도관의 직무탈진감, 직무 특성 및 직무 만족도

| 척 도 | A (18명) | B (3명) | C (5명) | D (21명) | E (10명) | F (3명) | G (5명) | H (7명) | I (6명) | J (37명) | 계 (115명) |
|---------------|----------------|----------------|----------------|----------------|----------------|----------------|----------------|----------------|----------------|----------------|----------------|
| 정서 소진 | 3.73 (.64) | 3.53 (.80) | 3.24 (1.30) | 3.45 (.69) | 3.48 (1.01) | 3.73 (.11) | 3.0 (.86) | 3.54 (.52) | 3.43 (.63) | 3.50 (.74) | 3.50 (.74) |
| 성취 감 | 3.56 (.61) | 3.11 (.48) | 2.46 (.72) | 3.04 (.50) | 3.24 (.75) | 3.03 (.44) | 3.73 (.48) | 3.06 (.52) | 3.09 (.77) | 3.13 (.45) | 3.18 (.59) |
| 비인 격화 | 2.35 (.58) | 2.33 (.33) | 2.86 (1.09) | 2.53 (.58) | 2.71 (.75) | 2.59 (.46) | 2.33 (.70) | 2.53 (.50) | 2.97 (.85) | 2.84 (.63) | 2.64 (.66) |
| 기술 다양 성 | 2.22 (1.36) | 2.66 (.28) | 2.40 (1.08) | 2.11 (1.07) | 1.80 (.78) | 1.83 (1.04) | 2.00 (.93) | 1.64 (.55) | 1.16 (.25) | 2.28 (1.18) | 2.09 (1.08) |
| 과업 정체 성 | 5.47 (1.21) | 5.16 (1.25) | 5.00 (1.06) | 4.83 (1.04) | 4.60 (1.30) | 4.66 (.76) | 5.90 (1.14) | 5.14 (.89) | 4.8 (1.08) | 4.89 (.91) | 5.00 (1.06) |
| 직무 중요 성 | 5.47 (1.70) | 5.66 (1.52) | 4.30 (.97) | 5.04 (1.24) | 4.55 (1.58) | 5.83 (.76) | 5.30 (1.30) | 5.28 (1.25) | 5.08 (1.28) | 4.82 (1.04) | 5.03 (1.29) |
| 자율 성 | 3.22 (1.53) | 4.83 (1.52) | 3.90 (1.14) | 3.54 (1.02) | 2.75 (1.20) | 3.66 (.44) | 3.30 (.57) | 3.50 (1.22) | 3.33 (.60) | 3.45 (1.20) | 3.42 (1.20) |
| 피드 백 | 3.72 (2.19) | 5.66 (1.52) | 3.80 (1.92) | 4.47 (1.03) | 3.90 (1.72) | 3.00 (1.73) | 5.20 (2.04) | 4.71 (.95) | 2.50 (1.97) | 3.89 (1.67) | 4.02 (1.72) |
| 직무 자체 | 2.95 (.88) | 3.83 (.57) | 2.85 (.82) | 3.11 (.88) | 2.75 (1.20) | 3.00 (.66) | 3.60 (.89) | 3.07 (1.01) | 2.37 (.51) | 3.08 (1.00) | 3.03 (.94) |
| 급료 | 4.12 (.81) | 4.00 (.25) | 4.10 (.48) | 4.05 (.71) | 4.25 (.89) | 3.66 (.80) | 4.55 (.85) | 4.50 (.92) | 3.50 (.54) | 4.27 (.89) | 4.16 (.81) |
| 승진 | 3.07 (.77) | 3.00 (.33) | 2.86 (.76) | 3.04 (1.32) | 3.40 (.69) | 2.66 (1.15) | 3.53 (1.44) | 3.19 (1.11) | 2.06 (.80) | 3.66 (.98) | 3.24 (1.06) |
| 동료 | 5.06 (1.12) | 5.50 (.66) | 4.00 (.93) | 5.28 (.67) | 5.00 (1.16) | 5.25 (1.00) | 5.25 (1.18) | 5.07 (.79) | 6.04 (.65) | 4.70 (.98) | 5.01 (.99) |
| 직장 상사 | 4.48 (1.32) | 4.50 (.25) | 3.93 (1.02) | 4.72 (1.28) | 4.62 (1.72) | 3.83 (1.75) | 3.45 (.77) | 5.60 (.71) | 3.70 (1.04) | 4.00 (.96) | 4.33 (1.23) |
| 직무 만족 | 3.00 (1.02) | 2.66 (.57) | 2.20 (1.09) | 2.57 (.81) | 2.40 (.96) | 2.66 (.57) | 2.80 (.83) | 2.42 (.97) | 2.33 (.81) | 2.51 (.90) | 2.58 (.89) |
| 선택 기회 | 1.66 (.76) | 1.66 (.57) | 1.00 (.00) | 1.61 (.66) | 1.70 (.82) | 1.66 (.57) | 1.20 (.44) | 1.57 (.78) | 1.66 (.51) | 1.54 (.64) | 1.56 (.66) |

주: 숫자는 평균(표준편차)이다.

(2)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도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을 나타내는 12가지 항목은 7점 척도로 답하도록 한 32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① 기술다양성

업무를 수행할 때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며, 기술습득이 용이한가 등을 묻는 '기술다양성' 항목은 평균 2.09(표준편차 1.08)로, 여성교도관들은 비교적 자신의 업무가 다양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소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곳은 C소로 2.66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곳은 I소로 1.16을 나타냈다.

② 과업정체성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존도, 진척사항의 검토에 대한 항목으로 평균 5.00(표준편차 1.06)으로 나타났고, G소가 5.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E소가 4.60으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③ 직무중요성

자신의 직무가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들로서 이 항목의 평균은 5.03(표준편차 1.29)이며, F소가 5.83으로 가장 높고, C소가 4.30으로 가장 낮았다.

④ 자율성

'자율성'에서는 평균 3.42(표준편차 1.20)로 B소가 가장 높은 4.83으로 나타났고, E소가 2.7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소의 경우 여성교도관 면담 시, 자신의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며, 근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⑤ 피드백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항목으로서 평균 4.02(표준편차 1.72)였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곳은 B소(5.66), 낮은 피드백은 I소(2.50)로 나타났다. 면담 조사에서 여성교도관들은 피드백 및 정보교환이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했으며, 정보교환은 대개 교도관 전용 인터넷 게시판에서 얻고 있고, 특히 남성 교도관들에 비해 여성 교도관들은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같은 이유는 여성 교도관들 거의 대부분 보안과 업무를 하고 있고, 서무직 업무의 경우 남성 교도관들이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⑥ 직무자체

직무에 필요한 지식, 일에 대한 피로도, 근무시간 등 직무와 관련된 종합적인 항목으로서 평균 3.03(표준편차 .94)으로 나타났고, B소가 3.83으로 가장 높았으며, I소가 2.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⑦ 급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받는 봉급에 대한 만족도 항목으로 평균 4.16(표준편차 .81)으로 나타났고, G소가 4.55로 다른 곳보다 자신이 받는 봉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I소는 3.50으로 자신의 업무에 비해 봉급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⑧ 승진

현재 교정직 공무원의 승진제도가 공정한가에 대한 항목으로 1점이 승진기회가 적다고 생각하며, 7점이 승진기회가 많은 것으로 측정했을 때, 평균 3.24(표준편차 1.06)로 나타나 여성 교도관들이 느끼는 승진기회는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급시설 중 I소 여성교도관들이 2.06으로 나타나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며, J소 여성교도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3.66으로 나타났다. J소

의 경우 다른 소와는 달리 여성교도관의 수가 남성 교도관들에 비해 많고, 교도소의 모든 환경이 여성을 위주로 운영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남녀의 차별감은 다른 곳에 비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을 면담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⑨ 동료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와의 친분, 동료간의 도움정도, 분위기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된 '동료'항목 평균은 5.01(표준편차 .99)로 나타나 여성교도관 사이의 관계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I소로 다른 곳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6.04), 그에 반해 C소의 경우 가장 낮은 4.00점을 나타냈다. 면담에서도 이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데, 여성교도관들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호간에 마찰이 생길 경우 업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로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 드물고, 매일 마주쳐야 하는 동료들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주고 있다고 대부분의 여성교도관들은 이야기했다. 또, 여성 교도관들 사이에 어느 정도 직급에 따라 서열화가 되어있지만 동료로서보다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여성교도관들의 특징이라고 다수의 여성교도관들이 지적했다.

⑩ 상사

상사의 자질, 업무능력 등을 묻는 이 항목의 평균은 4.33(표준편차 1.23)으로 나타났고, H소가 가장 높은 5.60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G소로 3.45로 나타났다. H소의 경우 면담에서도 상사에 대한 신뢰가 다른 곳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사동의 관리자인 계장(6급 교감)에 대해서는 상당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다.

①① 직무만족

'직무만족'에 관련된 항목은 4점 척도로 묻는 단일문항으로 '당신의 현재 직

업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성 교도관 평균 2.58(표준편차 .89)로 나타났고, C소가 직무만족도가 가장 떨어졌으며(2.20), 가장 직무만족도가 높은 곳은 A소(3.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교도관 면담과 남성교도관들과의 대화에서 이들의 사기를 높게 만드는 요인은 이구동성으로 ‘시설’이라고 지적되었다. 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할수록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사기는 떨어지며, 무엇보다 수용자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시설에 비해 노후된 시설에 수용자들은 많은 불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소의 경우는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C소 여성교도관 면담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수용자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시설 자체가 외진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상 시 다른 곳을 나갈 수도 없고, 모든 생활자체가 시설부근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문제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 사기는 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①② 직업 재선택 기회

“만일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기꺼이 현재의 직업을 선택할 용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3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3 ‘매우 그렇다’)를 이용해서 측정했는데, 여성 교도관들은 평균 1.56(표준편차 .66)을 나타내어 교정직 재선택에 대해서는 중간정도의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금시설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장에 그다지 만족하고 있지는 않음을 암시해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곳은 C소에서 근무하는 여성교도관들이었으며(1.00), G소가 그 다음으로 평균 1.20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곳은 E소의 여성교도관으로서 평균 1.70으로 나타났다.

4) 남성교도관과의 비교

남녀 교도관의 결과 비교분석에서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남성교도관의 경우는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 척도에 대하여 여성교도관들보다 높은 반면, 여성교도관들은 직무탈진감이 남성교도관보다 높은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서소진’, ‘비인격화’와 같이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정서가 부정적인 항목에 대하여 남성교도관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취감’, ‘직무만족도’, ‘직업 재선택 기회’와 같은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교도관이 남성 교도관에 비해 정서적인 불안정감과 자신의 직무 수행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남녀 교도관 통계치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소진’, ‘직무중요성’, ‘자율성’, ‘급료’, ‘승진’, ‘직장상사’ 항목에서는 남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나머지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정서적인 소모와 피로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서소진’의 정도는 여성교도관(3.50)이 남성교도관(3.27)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자신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가에 대한 ‘직무 중요성’은 남성교도관(5.37)이 여성교도관(5.03)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에 있어 자신의 수행 자율성을 묻는 ‘자율성’에서도 남성교도관(4.29)이 여성교도관(3.42)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일을 하면서 얻는 임금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는 ‘급료’는 여성교도관(4.16)이 남성교도관(3.4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의 승진제도와 승진기회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는 ‘승진’에서도 여성교도관(3.24)이 남성교도관(2.91)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신보다 높은 직급의 직장상사에 대하여 묻는 ‘직장상사’ 척도에서는 남성교도관(4.73)이 여성교도관(4.33)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남성 교도관들이 자신들의 직장상사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 남녀교도관 직무탈진감,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도

| | 남성(102명) | 여성(115명) | 계(217명) | t-검증 |
|-------|-------------|-------------|-------------|---------|
| 정서소진 | 3.27 (0.89) | 3.50 (0.74) | 3.39 (0.82) | -2.05* |
| 성취감 | 3.24 (0.61) | 3.18 (0.59) | 3.21 (0.60) | |
| 비인격화 | 2.61 (0.72) | 2.64 (0.66) | 2.63 (0.69) | |
| 기술다양성 | 2.27 (0.99) | 2.09 (1.08) | 2.17 (1.04) | |
| 과업정체성 | 5.00 (1.08) | 5.00 (1.06) | 5.00 (1.06) | |
| 직무중요성 | 5.37 (1.16) | 5.03 (1.29) | 5.18 (1.24) | 2.00* |
| 자율성 | 4.29 (1.14) | 3.42 (1.20) | 3.79 (1.25) | 5.19** |
| 피드백 | 4.03 (1.45) | 4.02 (1.72) | 4.02 (1.61) | |
| 직무자체 | 3.23 (1.05) | 3.03 (0.94) | 3.12 (0.99) | |
| 급료 | 3.41 (1.01) | 4.16 (0.81) | 3.84 (0.97) | -5.64** |
| 승진 | 2.91 (1.03) | 3.24 (1.06) | 3.10 (1.05) | -2.18* |
| 동료 | 4.98 (0.98) | 5.01 (0.99) | 5.00 (0.99) | |
| 직장상사 | 4.73 (1.30) | 4.33 (1.23) | 4.50 (1.27) | 2.19* |
| 직무만족도 | 2.50 (0.94) | 2.58 (0.89) | 2.54 (0.91) | |
| 선택기회 | 1.69 (0.74) | 1.56 (0.66) | 1.62 (0.70) | |

주. Independent sample t-test에서 유의미한 값만 나타냄. * $p<.05$, ** $p<.01$

5) 직급별 비교

교도관의 직급별 비교는 남녀 교도관 전체 직급 평균과 여성 교도관 직급별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남녀 교도관 전체 직급별 평균에서 ‘정서소진’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직급은 9급으로 평균 3.39에 비해 .20이 높은 3.59를 나타냈다. 여성 교도관 직급별 분석에서도 9급이 ‘정서소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64). 전체 교도관 비교에서 ‘성취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직급은 7급(3.37)이었다. 7급

직원들은 직무에서 비교적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위치로서 다른 직급보다 비교적 성취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교도관 중 9급 직원의 경우 성취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2.97), 이러한 결과는 여성교도관에서도 확인되었다. 여성교도관의 경우도 7급이 성취감이 가장 높았고(3.43), 9급이 성취감이 가장 낮았다(2.98).

<표 6-13> 교도관 직급별 직무탈진감 및 직무특성 비교 (전체 교도관)

| | 9급 | 8급 | 7급 | 6급 |
|-------|-------------|-------------|-------------|-------------|
| 정서소진 | 3.59 (0.74) | 3.35 (0.89) | 3.26 (0.80) | 3.42 (0.50) |
| 성취감 | 2.97 (0.42) | 3.23 (0.65) | 3.37 (0.60) | 3.28 (0.55) |
| 비인격화 | 2.85 (0.68) | 2.60 (0.70) | 2.45 (0.63) | 2.72 (0.59) |
| 기술다양성 | 2.18 (1.00) | 2.25 (1.14) | 2.02 (0.91) | 2.22 (1.06) |
| 과업정체성 | 4.69 (0.91) | 5.01 (1.11) | 5.24 (1.08) | 5.27 (1.06) |
| 직무중요성 | 4.71 (1.16) | 5.27 (1.30) | 5.35 (1.14) | 5.88 (1.05) |
| 자율성 | 3.33 (1.20) | 4.03 (1.27) | 3.65 (1.12) | 4.94 (0.88) |
| 피드백 | 3.92 (1.74) | 4.08 (1.70) | 3.98 (1.39) | 4.33 (1.22) |
| 직무자체 | 2.93 (1.14) | 3.08 (0.98) | 3.25 (0.88) | 3.66 (0.58) |
| 급료 | 3.95 (1.06) | 3.78 (1.00) | 3.80 (0.84) | 3.97 (0.97) |
| 승진 | 3.43 (1.09) | 2.95 (0.98) | 2.98 (1.08) | 3.40 (1.12) |
| 동료 | 4.64 (0.97) | 5.13 (1.03) | 5.12 (0.91) | 4.88 (0.71) |
| 직장상사 | 3.98 (1.15) | 4.63 (1.28) | 4.61 (1.27) | 5.65 (0.73) |
| 직무만족도 | 2.40 (0.85) | 2.50 (1.04) | 2.69 (0.76) | 3.00 (0.50) |
| 선택기회 | 1.66 (0.71) | 1.63 (0.72) | 1.57 (0.68) | 1.55 (0.52) |

주: 숫자는 평균(표준편차)이다.

‘비인격화’ 점수에서도 9급 교도관들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전체 : 2.85, 여성 : 2.93). 이러한 직무탈진감과 관련된 세 가지 척도에서 9급 교도관

들이 가장 심각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6-14> 여성교도관 직급별 직무탈진감 및 직무특성 비교

| | 9급 (33명) | 8급 (44명) | 7급 (34명) | 6급 (4명) |
|-------|-------------|-------------|-------------|-------------|
| 정서소진 | 3.64 (0.72) | 3.40 (0.82) | 3.49 (0.68) | 3.50 (0.52) |
| 성취감 | 2.98 (0.45) | 3.15 (0.62) | 3.43 (0.60) | 3.02 (0.65) |
| 비인격화 | 2.93 (0.65) | 2.59 (0.63) | 2.42 (0.62) | 2.63 (0.65) |
| 기술다양성 | 2.07 (1.03) | 2.26 (1.21) | 1.89 (0.91) | 2.12 (1.31) |
| 과업정체성 | 4.71 (0.89) | 4.90 (1.12) | 5.33 (1.03) | 5.75 (1.19) |
| 직무중요성 | 4.69 (1.28) | 4.80 (1.17) | 5.52 (1.28) | 6.00 (1.41) |
| 자율성 | 3.03 (1.24) | 3.57 (1.18) | 3.44 (1.10) | 4.87 (0.47) |
| 피드백 | 3.81 (1.77) | 4.22 (1.87) | 4.02 (1.54) | 3.50 (1.29) |
| 직무자체 | 2.93 (1.02) | 2.96 (0.90) | 3.16 (0.93) | 3.56 (0.62) |
| 급료 | 4.32 (0.85) | 4.11 (0.73) | 4.01 (0.83) | 4.62 (0.94) |
| 승진 | 3.50 (1.11) | 3.15 (0.92) | 3.05 (1.14) | 3.50 (1.10) |
| 동료 | 4.52 (1.02) | 5.11 (0.95) | 5.38 (0.87) | 4.81 (0.82) |
| 직장상사 | 3.79 (1.12) | 4.36 (1.12) | 4.68 (1.31) | 5.56 (0.82) |
| 직무만족도 | 2.39 (0.86) | 2.52 (0.95) | 2.76 (0.85) | 3.25 (0.50) |
| 선택기회 | 1.54 (0.61) | 1.54 (0.69) | 1.61 (0.69) | 1.50 (0.57) |

주: 숫자는 평균(표준편차)이다.

직무특성 및 직무 만족도에서도 여전히 9급 교도관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교도관 자료에서 9급 교도관의 경우 ‘과업정체성(4.69)’, ‘직무중요성(4.71)’, ‘자율성(3.33)’, ‘피드백(3.92)’, ‘직무자체(2.93)’, ‘동료(4.64)’, ‘직장상사(3.98)’, ‘직무만족도(2.40)’, ‘직업 재선택기회(1.66)’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9급 여성교도관만 구분했을 경우에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9급 여성교도관은 ‘과업정체성(4.71)’, ‘직무중요성(4.69)’, ‘자율성(3.03)’, ‘직무자체

(2.93)', '동료(4.52)', '직장상사(3.79)', '직무만족도(2.39)'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피드백', '직업 재선택기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정보교환의 경우 여성 교도관들 중 6급 직원들이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3.50), 직업의 재선택 기회에서도 6급 직원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1.50).

급료와 승진기회에 대해서 8급과 7급의 직원들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9급 교도의 경우 두 직급보다 좀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⁵⁾. 8급과 7급의 경우는 면담결과, 승진기회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불만의 가장 이유로 승진제도의 불투명성을 지적하였다. 7급까지 근속승진과 시험승진이 있지만, 근속승진의 경우 너무 근속 연수의 기간이 길고, 시험승진의 경우 기회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임금의 경우 8급, 7급 직원의 경우는 결혼하고 취학아동의 학부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 양육비,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6) 여성교도관 학력별 비교

각 척도에 대한 학력별 비교에서는 15개 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하여 고졸 여성교도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업정체성'(5.46), '직무중요성'(5.75), '자율성'(3.86), '피드백'(4.57), '직무자체'(3.29), '동료간의 관계'(5.62), '직장상사'(5.00), '직무만족도'(2.96)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서소진'과 '비인격화'에서는 대학원 이상 학력 소유자가 각각 평균보다 높은 4.50, 3.50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직무 수행에 따른 '성취감'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대학원 이상 학력 소지자들이 전체 여성교도관 평

5) 9급 교도의 경우 긴 근속년수로 인해 승진 기대가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7급, 8급 교도관들의 경우 부양할 가족이 있는 기혼자인 경우가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미혼인 경우가 많은 9급의 경우 임금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7급과 8급 직원들 보다 적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균 3.18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지자의 경우, 응답자의 수가 워낙 적은 이유로 점수가 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대체로 떨어진다는 결과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 6-15> 여성교도관 학력별 직무탈진감 및 직무특성 비교

| | 고졸 | 전문대졸 | 4년제중퇴 | 4년제졸업 | 대학원이상 |
|-------|-------------|-------------|-------------|-------------|-------------|
| 정서소진 | 3.39 (0.83) | 3.20 (0.43) | 4.00 (0.58) | 3.50 (0.72) | 4.50 (0.14) |
| 성취감 | 3.40 (0.64) | 3.48 (0.43) | 3.20 (0.45) | 3.08 (0.57) | 3.05 (0.55) |
| 비인격화 | 2.38 (0.59) | 2.35 (0.59) | 3.15 (0.24) | 2.70 (0.66) | 3.50 (0.23) |
| 기술다양성 | 1.90 (0.98) | 1.91 (0.80) | 3.10 (1.24) | 2.10 (1.10) | 2.25 (1.76) |
| 과업정체성 | 5.46 (1.15) | 4.91 (1.11) | 5.40 (1.14) | 4.84 (0.99) | 4.50 (0.70) |
| 직무다양성 | 5.75 (1.13) | 5.41 (1.11) | 5.30 (0.83) | 4.73 (1.29) | 5.00 (1.41) |
| 자율성 | 3.86 (1.06) | 2.66 (1.40) | 3.40 (1.85) | 3.35 (1.17) | 2.75 (1.06) |
| 피드백 | 4.57 (1.50) | 2.83 (1.16) | 3.40 (2.07) | 3.96 (1.79) | 4.50 (0.70) |
| 직무자체 | 3.29 (0.97) | 3.04 (1.01) | 2.90 (0.99) | 2.97 (0.91) | 2.12 (1.23) |
| 급료 | 4.23 (0.94) | 4.41 (0.95) | 4.20 (0.69) | 4.11 (0.77) | 4.37 (0.53) |
| 승진 | 3.46 (1.09) | 2.94 (0.80) | 3.53 (1.30) | 3.16 (1.04) | 3.33 (1.88) |
| 동료 | 5.62 (0.80) | 4.66 (1.08) | 4.95 (1.05) | 4.86 (0.96) | 4.00 (1.76) |
| 직장상사 | 5.00 (1.22) | 4.12 (1.11) | 3.35 (0.45) | 4.20 (1.20) | 3.75 (0.00) |
| 직무만족도 | 2.96 (0.91) | 2.83 (0.75) | 1.60 (0.54) | 2.52 (0.85) | 1.50 (0.70) |
| 선택기회 | 1.73 (0.66) | 1.83 (0.75) | 1.00 (0.00) | 1.52 (0.66) | 1.50 (0.70) |

주: 단위는 평균(표준편차)이다.

7) 직무탈진감과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⁶⁾

- 6)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상관계수의 크기가 클수록 두 변인간의 관계는 강한 것이며, 긍정적 상관관계는 한 변인이 증가할수록 다른 변인도 증가하며, 부정적 상관관계는 한 변인이 증가하면 다른 변인은 감소하게 된다.

교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특히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항목인 ‘현재 직급’, ‘정서소진’, ‘성취감’, ‘비인격화’, ‘직무만족도’, ‘직업 재선택 기회’에 대하여 상호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1) 현재직급과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현재 직급과 성취감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직급이 높을수록 이들이 느끼는 성취감도 높았다. 또한 현재 직급은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도 유의미했다. 직급이 높을수록 ‘비인격화’의 경향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r=-.26$).

(2) ‘정서소진’과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정서소진’과 ‘비인격화’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5$). 즉 정서적인 탈진을 많이 느끼는 여성교도관일수록 여성수용자에 대한 비인격화 경향도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탈진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떨어지고($r=-.51$), 직업을 다시 선택하지 않겠다는 경향이 나타났다($r=-.22$). 이러한 경향은 조사하는 기간동안 만난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 같은 일의 반복, 수용자들을 관리하면서 겪게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수용자들에게 느끼는 배신감과 같은 부정정서를 여러 번 경험한 여성교도관들은 교정직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으며, ‘만약 주위 사람 중에 이 직업에 지원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말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만류하겠다’, ‘말리지는 않겠지만, 권하고 싶은 직업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이 종종 있었다.

(3) 성취감과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성취감은 직급($r=.24$), ‘비인격화’($r=-.43$), ‘직무만족도’($r=.46$), ‘직업 재선택 기

회'(r=.26)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직급이 높을수록 성취감이 높았고, 성취감이 높을수록 수용자들을 비인격적이거나 사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며,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고, 현 직업 재선택 하겠다는 정도가 높았다.

(4) 비인격화와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수용자에 대한 비인격화 경향성은 '직무만족도', '직업 재선택 기회'와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비인격화'성향이 높은 여성교도관일수록 '직무만족도'는 떨어지며, 현 직업을 다시 선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5) 직무만족도와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직무만족도'는 '현 직업 재선택 기회'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54)를 나타내어서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정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같은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태도도 높았다.

<표 6-16> 여성교도관 설문 문항간 상관관계 분석

| | 현재 직급 | 정서 소진 | 성취감 | 비인격화 | 직무 만족도 | 직업 재 선택기회 |
|--------------|----------|----------|--------|--------|-----------|--------------|
| 현재직급 | 1.0 | -.06 | .24** | -.26** | .20* | .03 |
| 정서소진 | -.06 | 1.00 | -.02 | .45** | -.51** | -.22* |
| 성취감 | .24** | -.02 | 1.00 | -.43** | .46** | .26** |
| 비인격화 | -.26** | .45** | -.43** | 1.00 | -.63** | -.29** |
| 직무만족 | .20* | -.51** | .46** | -.63** | 1.00 | .54** |
| 직업 재 선택기회 | .03 | -.22* | .26** | -.29** | .54** | 1.00 |

주. 2-tailed test, * p<.05, ** p<.01

3. 여성 교도관 면담조사 결과

1) 면담실시 과정

면담조사는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10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총 35명의 여성교도관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내용은 교정직 공무원으로써의 애로사항, 여성 직원으로서 애로사항 등으로 구성되었고, 면담 시간은 개인 당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면담자로 선정된 직원은 당일 근무 중에 무작위 선발하였기 때문에 근무 중 시간을 내어 면담에 임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당일 근무하는 여성교도관의 인원이 많지 않아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며, 면담으로 인한 공백은 다른 직원이 대신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와 피면담자 모두 시간적 불편감을 느꼈다.

이번에 실시한 면담에서 35명의 직원 모두가 대체로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공통적으로 교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애로사항과 여성 직원으로서의 애로사항 등 두 가지 문제점을 주로 호소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 덧붙여진 면담내용 이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2) 여성 교도관 면담 결과

(1) 교정직 공무원 선택동기

면담자로 선발된 35명의 직원들은 9급 교사부터 현재 여성 교도관으로 가장 높은 5급 교정감까지 있었고, 근무 부서는 교무과, 분류심사과, 의무과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대부분 교정직 공무원 선택동기는 사전에 교도관, 혹은 교정직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지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심지어 많은 직

원들이 “교정직이라고 해서 인쇄물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인줄 알았다”거나 단순히 공무원이라고 해서 지원했다고 답했다. 소수의 직원만이 사전에 교정직 공무원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많은 여성 직원들이 현 직장을 선택한 동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직장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며, 월급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고, 여성으로서 느끼는 성차별을 덜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2) 직무 특성관련

직무 특성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크게 야근 문제, 인원부족문제, 자녀 교육문제 등이었다.

① 야근문제

직무와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의 면담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야근문제는 교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직무특성이다. 그러나 고유한 직무특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느끼는 야근으로 인한 문제는 대단히 크다는 것을 면담결과 알 수 있었다. 각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삼일에 한번 꼴로 야근을 하게 되고, 이러한 근무는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명절이나 공휴일에도 근무가 돌아오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 교도관들의 경우 식구들로부터 많은 눈치를 보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한 직원은 “만약 야근문제가 없어진다면, 교도관이라는 직업은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문제는 야근 때문에 생긴다’고 했다. 즉, 자녀 양육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삼일에 한번씩 집을 비우기 때문에 보육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여성교도관은 “교도관이라고 해서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야근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밤에 잤아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움직여야 하고, 신체적 리듬이 완전히 깨지기 때문에 낮 근무하고는 비교될 바 없을 만

کم 지친다”라고 이야기했다. 신규교육을 마친 직원의 경우 대부분 야근문제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여성 교도관들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야근을 완전히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원을 확충해서 야근 횟수가 좀 줄어드는 것을 원한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② 인원부족현상

앞서 기본 인적사항에서 교도관 인원과 수용자수의 비율을 살펴봤다. 그러나 그 비율은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보안과 직원들만을 고려한 인원수가 아닌, 기관 내에 모든 여성 직원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순수하게 계호를 담당하는 보안과 직원들의 인원과 수용자수의 비율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면담결과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모든 여성교도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이다. 현재 3교대를 실시하고 있지만, 각 소별로 여성 교도관들은 최소인원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한사람이라도 휴가를 내거나 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될 경우, 잔류 인원들은 그만큼 고생을 한다고 한다. 많은 여성교도관들은 현 인원에서 약간 명만 더 충원이 되어도 굉장히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원부족 현상은 단지 직원들만의 문제점은 아닌 듯싶다. 한 여성교도관은 “근무하는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해야 하는 수용자들의 수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예로서 인원이 부족해서 혼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다른 구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알 수 없고, 일이 발생했다고 지각될 때는 이미 ‘상황종결’이라는 예를 설명했다. 각 기관별로 인원현황은 차이가 있고, 어떤 기관은 약간의 여유가 있는 반면, 어떤 기관은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성교도관들은 ‘같은 값이면 남성 직원을 뽑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정시설이 청주여자교도소를 제외하면 남자수용자 위주의 건물이고, 수용인원도 많기

때문에 남성 직원들을 선호하게 된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③ 자녀 교육문제

결혼한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이든 간에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여성 교도관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간부급 직원들도 자녀문제로 인해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다.

면담자 중 기혼 여성교도관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부모님께 양육케 하거나, 종일반 유아원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지어 주변 이웃사람들이나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갖는 죄책감은 굉장히 컸으며, 한 여성 간부 직원의 경우 이동근무를 해야 하는 자신으로 인해 둘째 아이를 낳으신 부모님께 양육케 했다가 현재 미성숙 아이로 성장해서 이미 말을 해야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언어발달이 미흡하고, 같은 또래 아이보다 왜소하게 되어,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간부 직원은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 자녀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정도는 다르지만 기혼 여성 직원들은 대부분 자녀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가지고 있다. 한 직원의 경우 “아이들이 엄마를 찾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빠부터 찾는다”라고 말하면서 아쉬움을 내비쳤다. 현재 각 기관에서 직원들을 위해 탁아시설을 마련한 곳은 J소 이외에는 없다. 여성교도관들은 탁아시설이 없는 것에 대단한 불만감을 가지고 있으며, 신경 써 주지 않는 상부기관에 대해 상당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수용자들의 시설 채우는 신경 쓰면서 왜 우리에게 신경 써주지 않는가?”라는 말로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했다.

이동근무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이 문제점 때문에 많은 여성교도관들은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6급 이상의 간부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7급으로 머물다가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마

찬가지로 6급 이상의 간부들 역시 이동근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신의 이동으로 인해 자녀들 양육, 교육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심각하게 사직을 고려하기도 한다고 진술했다.

(3) 복리제도에 관한 문제점

여성 직원들의 복리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다양한 불만사항들은 대부분 두 가지 요인으로 축약할 수 있는데, 전용시설과 보건휴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

① 여성 직원 전용시설

여성 직원용 전용시설은 각 기관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대부분 여성 직원 전용시설은 해당 기관의 건물과 관련되어 있어서, 만약 시설자체가 노후되고 열악하다면 마찬가지로 전용시설은 거의 없지만, 청사가 새롭게 지어졌거나 최신 설비의 청사일 경우는 여성 직원 전용시설 역시 잘 갖추어져 있었다. 전용시설에 대한 불만사항은 이처럼 어느 곳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10개의 구급시설을 조사하고 난 후 여성교도관들 사이의 상호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교도관들은 대부분 이동근무 경력이 없거나 몇 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의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용시설에 대한 면담에서도 자신들의 시설을 다른 시설과 비교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못했다. 다만, 여성 직원용 휴식공간이 너무 적은 것과, 여사동 밖의 건물에 여성 직원 전용 공간이 없다는 것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체력단련 시설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② 보건휴가(생리휴가)

보건휴가 역시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인원이 확보되고, 보건휴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기관에서는 제대로 지켜지는 반면, 인원이 확보가 되지 않거나, 인식이 낮은 경우의 기관에서는 3개월에 한 번, 심지어 아예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인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여성 직원들은 보건의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가 없고, 몇 개월에 한번씩 나가는 정도에 그쳤다. 더 심각한 것은 심지어 ‘보건의휴가는 임시규정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나가지 말라고 하면 못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응답도 있었다. 한 여성교도관의 경우 자신들은 다른 곳의 직원들 역시 못 나가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보안과 소속 여직원들은 자신들이 적절하게 조정해서 보건의휴가를 나갈 수 있지만, 보안과 업무 이외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자신의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휴가를 나가기에 더 어렵다고 했다. 물론 사복 근무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일근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의휴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보건의휴가를 나가겠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눈치가 보이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으며, 보건의휴가 결재를 여성 간부가 하기 때문에 남성 직원들에게 결재를 맡을 때보다 눈치는 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③ 승진제도

많은 여성교도관들은 승진제도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면담결과는 앞서 살펴본 설문지 분석결과와 상이한 차이가 있다.

여성교도관들은 남성들과 비교해서 승진에 불리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많은 여성 직원들은 남성 동기들이 자신들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을 많이 본다고 이야기했다.

승진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근속승진으로 교정직 공무원은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의 년수가 7년,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 년수는 8년이다. 이러한 근속승진 년수에 대해서 여성교도관들은 이구동성으로 다른 일반 직렬 공무원들에 비해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한 여직원은 “거의 같

이 일반공무원으로 들어간 친구들은 이미 7급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9급이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승진제도의 두 번째 제도는 시험승진제도로, 일정기간 근무하고 나면 시험 볼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이 시험을 통해 승진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시험 승진 역시 구성요건이 구비된다고 해도 ‘5배수제’⁷⁾ 때문에 똑같은 직원이라도 기관별로 기회가 있거나 없을 수 있다. 면담결과, 직급이 낮을수록 ‘배수제’에 대해서 반대했고, 직급이 높을수록, 또는 연령이 높을수록 배수제에 대해 온건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9급 직원들의 경우, 배수제도는 실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어서 승진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수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반해, 간부 직원들의 경우, 배수제를 폐지할 경우 모든 기관은 아마도 도서관화가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승진제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승진심사에 필요한 인사고과점수이다. 많은 여성교도관들이 자신들의 인사고과점수는 남성직원들에 비해 덜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승진심사에서 누락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인사고과점수에서 교육점수 역시 여성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직원들이 교육기회도 많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육점수를 얻기 위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성직원은 근무인원이 부족해서 한 명이 교육을 가버리면 근무자체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교도관들은 “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직원들이 더 고생하는 줄 아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고과점수를 담당하는 간부들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승진제도에 대한 마지막 불만사항은 사복직원들의 문제점이다. 면담에서 사

7) 배수제는 승진 인원의 몇배수를 뽑아서 그 중에 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만약 5명을 뽑을 때 5배수제가 적용되면 25명안에 들어야만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승진 기회는 각 기관별로 주어지기 때문에 같은 조건을 가진 교도관이라도 기관의 인원수에 따라 승진기회를 얻을 수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승진을 위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한다.

북직원들은 정북직원과 사북직원은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이야기했다. “이곳의 모든 시스템은 정북직원을 위한 시스템일 뿐 사북직원들은 무시된다”라고 한 사북직원은 말했다. 실제로 사북직원들은 정북교도관들에 비해 승진기회가 적고, 간호사와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직급이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승진기회가 적다고 했다. 사북직원들의 경우 직무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직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하급직원들의 승진기회는 더욱 박탈되고 있다고 진술했다.

④ 성희롱

대부분의 여성교도관들은 현재 교정 시설에서는 ‘성희롱’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적 인식이 증가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남자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여성교도관들 중 오래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예전에 남성교도관들과 함께 근무했을 때는 성희롱도 많았고, 여자로서 모욕감도 많이 당했으며,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분리근무가 실시되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러한 경우가 줄어들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신장과 능동적인 사고로 인해 만약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한다고 말했다.

성희롱의 경험이 있다는 여성교도관의 경우,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남자직원에게 항의하여 여직원들의 힘을 모아 사과를 받아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면담한 모든 여성교도관들은 만약 성희롱을 당하게 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단지 제도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2차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5) 직무교육에 대한 문제점

승진제도의 문제점에서 살펴보았지만, 직무교육은 승진심사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인사고과점수는 상사의 점수와 교육점수를 합한 점수이다 보니, 그만

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여성직원들은 대체로 자신들보다 남성직원들이 직무교육 기회는 더 많고, 심지어 가는 사람이 또 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다. 여성직원들 역시 직무교육을 가고 싶지만, 기회가 별로 없고, 보안과 업무를 하다보면 정보를 공유할 만한 통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언제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교육이나 기타 교육의 기회는 서무과 남성직원에게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안과 남성직원들이 가게 되며, 그 다음으로 서무과 여성 직원들이 가게 되고, 보안과 여성 직원들은 갈 기회가 가장 적다고 나열했다.

개별면담을 한 여성교도관 대부분은 직무교육을 가고 싶어했는데, 이들은 ‘뭔가 배우고 싶어서’, ‘교육가면 야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쉬고 싶어서’와 같은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며칠씩 교육을 가는 것은 무리’라는 대답도 있었다.

또, 예전에는 교육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했었지만, 지금은 그나마 많이 투명해졌고, 순서에 따라 대체로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6) 사복직원들의 애로사항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크게 정복직원들과 사복직원들로 구분되어 있고, 정복직원들의 경우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사복직원들은 교무직, 분류심사직, 의무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복직원들은 한결같이 정복직원에게 비해 턱없이 후생제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복직원에게 비해 승진기회가 제한적이고, 근무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호를 실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호수당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직원도 있었다.

① 교무과 직원들의 애로사항

교무과 직원들의 경우 기관에 필요한 것들을 교무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가장 불만인 사항은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부족으로 자원봉사자나 몇몇의 도와주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용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해야 할 때 교무과 직원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한 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한 도움을 청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또한 이러한 도움을 받게 되면 그나마 도움을 주던 분들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② 분류심사과 직원들의 애로사항

분류심사과가 담당하는 업무는 수용자들의 누진점수를 산출해서 기록하고, 수용자들을 분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러나 한 면담자는 원래 분류심사과 업무는 누진점수를 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다양한 심리검사를 통해 수용자들 관리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는 업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류심사과는 단순히 누진점수를 산출하는 일에만 치우쳐 있다고 불만을 얘기했다.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리학 등 전문분야 출신자들이 들어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개인적으로 심리학과 출신들이 필요하지만, 권유하고 싶은 직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곳은 정복직원으로 들어와야 제대로 대우를 받지 사복직원으로 들어오면 같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대우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했다.

③ 의무직 간호사들의 애로사항

다른 사복직원들의 불만도 많지만, 간호사들의 불만사항은 특히 두드러졌다. 간호사들의 경우 여타 사복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불만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간호사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사들의 1차 진료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1차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불법 1차 진료를 막기

위해서 ‘농어촌 특별법’이나 ‘학교 보건법’과 마찬가지로 간호사들이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보다 직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것도 아니면서 면허수당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이야기했다.

(7)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라는 점

마지막 면담 질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라는 점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여성교도관들 대부분은 ‘우리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불만을 이야기했다. 거의 모든 여직원들은 ‘현재 인권위원회에서든 언론에서든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안다. 우리도 이들의 인권이 높아지는 것은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인권은 없는가? 우리는 공무원이고 관리자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는 모두 없어야 하나?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치러야 하는 희생은 너무도 크다. 일반인들은 여전히 예전의 교도관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고, 많은 TV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교도관들의 모습을 예전에 야만적인 교도관의 모습으로만 비취주고 있다. 현재 교도관들 거의 대부분은 수용자들을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너무 몰라주는 것이 속상하다. 수용자들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이라도 하면 우리로써는 아무런 방어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발 참인지 거짓인지 판가름해서 우리의 권리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성교도관 중 한 명은 일년 전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했었는데 물리적 폭행의 정도는 경미했지만, 당시의 정신적 충격으로 면담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VII. 논의 및 제언

1.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 처우상의 문제점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여성 수용자 실태조사 및 시설조사는 기존에 시행된 여성 수용자 실태 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결과가 유사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었고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수용자 심층면접과 시설조사를 시도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여성 수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여성의 생리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우리나라 행형법 및 유엔의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고려할 때 여성 수용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논의해 보았다.

1) 여성수용자의 차별적 취급에 관한 문제점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행형법에서도 인간의 존엄 존중과 평등한 취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2조에서도 공평하게 적용되지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면서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요인으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출생, 재산 또는 기타 지위를 들고 있다. 행형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요인은 국적,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만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여성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불평등성은 처우프로그램 자체가 남성 수용자에 비해 양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열세에 있으며, 여성 수용자의 특수한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여성 수용자가 남성 수용자에 비해 마약이나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여성 수용자는 여성들만의 건강이나 의료문제가 야기되는 데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자수용자에 비해 여성수용자가 생활환경, 대우 내지 처우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제법 많았다. 성별에 의한 차별이 있다고 여기는 원인에는 여성교도소의 시설이 청주여자교도소를 제외하고는 전용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시설의 열악함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대우 내지 처우 부분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은 전국의 교도소/구치소에 소수로 분계수용하고 있는 여성 수용자의 현황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전국의 시설에 분산되어 있는 소수의 여성수용자에게는 체계적인 교정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공평한 처우라는 것은 여성수용자의 처우를 남자수용자와 동등하게 처우해야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생리적 특성과 사회적 정신적 특성에 따른 적절한 교우처우의 환경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2) 여성수용자의 적극적 처우를 받을 권리

남자수용자에 비해 적은 수의 여성수용자를 위해서 독립된 교정시설을 설치하고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비용과 편익의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수용자에 대한 방치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성수용자의 수적 열세는 시설의 수를 제한하게 되고 시설의 수가 적다는 것은 시설의 다양성이 무시되고 획일화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양질의 전문적 처우를 제공하기 어렵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식당취사부에 작업을 지정하고자 전국 교정 시설에 분산하여 여성수용자를 처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수용자의 처우를 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수형자의 처우를 받을 권리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처우가 비자발적 강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규정되지도 않았으며, 특히 대다수의 처우가 재소자에 대한 일종의 보상 또는 특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권리라고 인식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만약 교정시설이 범죄자를 개선·교화시키지 못하고 획일화된 처우라는 것이 수용자를 더 오래 구금시키는 장치에 불과한 때에는 여성수용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을 권리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적극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와 아울러 비자발적인 원치 않는 처우를 거부할 권리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일반교도소의 분계 된 장소에 수용하여 식당의 취사부 등으로 작업지정을 하여 처우하는 것이 여성수용자 일부에서 비자발적인 강제적인 처우라고 인식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또 다른 적극적인 처우를 주장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여성 수용자의 생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우

월경, 임신, 출산, 폐경 등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생리작용과 신체적 특징을 감안할 때 여성 수용자들이 여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경과 관련해서는 생리대의 지급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대부분의 교도소/구치소에서 생리대는 자비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관에서 지급해주고 있었다. 이는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 생리대 구매로 인하여 매달 기본적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수용생활비의 기저선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남성 수용자와의 차별적 처우라고 간주할 수 있다. 생리대는 여성 수용자의 필수품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구금시설에서 생리대는 다른 생필품과 마찬가지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최저기준규칙이나 유럽형사시설규칙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두고 있다. 임신부인 여성수용자의 경우 일반 환자와 다른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므로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행형법에는 임신

부와 노쇠자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는 규정(제30조)만을 두고 있고, 행정법시행령에는 소장은 여자수용자의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제103조 제2항)하고 있을 뿐이다. 실태 조사에 의하면 임신기간 중에 병방에 수용한다는 응답이 52.2%인 것으로 비추어보면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산후관리를 위해서 임신부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여성구금시설에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아니라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신부가 시설 내에서 산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여성 전용 시설인 한 곳 뿐이었고 다른 모든 시설에서는 외부 진료 허가를 받아야만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외부 진료 절차가 그리 순조롭지 않은 시설도 있고 여성 의사가 있는 시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임신부에 대한 의료 처우는 개선될 부분이 많았다.

유아 전용실을 만들어 놓은 시설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의료예산으로 인해 일상적인 상비약을 구비하고 지급하는 데도 미흡한 의료시설의 형편에서 무리하게 여성수용자에 대한 특별배려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의료권 보장은 생존권적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으로 수용자의 특성에 따른 진료의 내용 및 시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확보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4) 분류심사상의 문제점

분류심사는 수형자를 범죄경력, 생활환경, 교육정도, 지능지수, 입소 전 직업, 소질, 적성, 가정사항, 교우관계, 특기, 건강 및 정신상태의 이상 유무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교도소에 수용하고 당해 교도소

내에서도 다시 몇 개의 집단을 세분하여 거실 및 작업의 지정 등 그에 상응한 처우를 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뜻하는 것으로 수형자를 분류하지 않고 혼거 수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수형자 상호간의 범죄성 전염과 범죄성향의 상승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각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처우계획을 통해 능률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형법에서는 성별, 연령 등의 전통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수용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도소장 등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분류조사와 분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분류조사는 수형자의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수형자의 성장과정, 학력 및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과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의지 및 석방후의 생활계획,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분류검사는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성검사, 지능검사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수용자의 경우 이러한 분류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수형자 분류는 수형자 개개인의 개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선가능성의 측정도 수형자의 변화 기능성보다는 범죄유형, 죄질, 범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현재의 분류기준이 수형자 개개인의 필요보다는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집단별 분류에 중점이 있고 처우과정을 통한 개인의 인격변화와 재사회화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정처우의 근간인 개별처우의 기본이념에 비추어보면 소수라 해서 처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여성 수용자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처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동등성은 남성과 똑같은 처우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특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적합한

처우프로그램의 제공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적합한 처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특성, 수용생활에 대한 적응태도, 처우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고려한 여성 수용자의 분류심사와 분류기준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여성 수용자의 형 및 형기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2001년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32.7%, 6월 이상 1년 미만이 15.9%,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3.6%,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0.8%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단기 수형자의 증가가 상당수 있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 수용자의 67.4%가 분류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실제로 분류심사를 받지 않은 수용자들과 분류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수용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듯하다. 여성 수용자의 경우 남성적 분류심사기준이 아닌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분류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며, 6월 이상 1년 미만의 수형자 뿐 아니라 5년 이상의 장기수가 혼재하여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분류조사가 필요하다.

수형자의 분류를 소극적인 악풍감염의 방지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형자의 개별처우를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류에 보다 그 의의를 두어야 한다. 아무리 과학적인 장비를 확보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분류에 만전을 기하더라도 그에 따라 수형자의 적성에 맞는 처우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또한 처우계획 및 분류에 상응한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분류는 분류를 위한 분류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처우계획에 따라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교정시설을 단계적 전문적 시설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서는 4 내지 6단계의 중구금시설, 중간구금시설, 경구금시설로 단계적으로 구분, 설치하여 극히 완화된 개방처우에서부터 엄중 폐쇄시설까지 차별화하고 있으며, 1개의 교정시설 내에서도 사동별로 시설구조, 설비 등을 다르게 하여 처우를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여성 수용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는 논리는 여성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 처우를 받을 권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여성 수용자에

대한 분류체계가 없음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여성 수용자들의 자료를 축적하여 여성 수용자들만의 위험성과 개선가능성 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여성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현재 각 교도소에서 분류심사시에 사용되고 있는 교정심리검사는 남성 수용자에 대한 기준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수용자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 수용자들의 존재가 얼마나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여성 수용자를 위한 분류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 여성 수용자들을 취사장 출역수로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분산 수용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여성 범죄자 전용 구금시설의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성 수용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 체계가 없는 한 여성 수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처우도 있을 수 없다.

2. 여성 수용자 실태조사 및 시설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거주설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거실수용의 문제점

실태조사에 의하면 거실에 수용하는 인원이 3-4명인 경우가 많았으며, 독거수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행형법 제11조에 의하면 원칙적인 형태가 독거수용이다. 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개개의 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14조에서도 피구금자는 통상 야간에 독거방에 기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동침실이 사용되는 시설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기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피구금자에게 공동침실을 사용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수용자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수용자가 혼거수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오히려 한 거실에 20명까지도 수용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행형법에 따른 혼거수용의 인원기준을 3인 이상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용거실의 크기가 1평에서 8평등으로 다양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수용자 1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최소 공간 면적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배종대, 정승환, 2002, 143면). 예를 들어, 실태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점으로 거실이 협소하다는 지적(41.9%)과 함께 독거실에 2명을 수용하는 형태는 수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1인당 최소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용방식은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2) 거실 위생

최저시설규칙 제10조 동일한 내용으로 유럽형사시설규칙에서도 “구금장소 및 특히 야간에 피구금자가 기거에 해당되는 장소는 기후 특히 공기의 용적, 최적면적, 난방 및 환기를 고려하고 보건위생상의 필요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19조에 피구금자가 상시 사용하는 모든 장소는 적절하게 유지되고 청결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규정에 비추어보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거실(조사대상의 27.3%)과 화장실(조사대상의 36.4%)의 곰팡이 등의 불결한 상태는 여성수용자의 보건위생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수용자에게는 생활환경의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일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수용자 개인의 건강과 동료수용자들의 건강을 위해 요구되는 의무이다. 이러한 수용자들의 협력의무와 더불어 교정당국은 청결한 생활환경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개인위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욕시설 및 이용의 편의성 부분에서 여성수용자의 현황은 상당히 열악한 형편인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욕탕시설 및 샤워설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주 1회의 횟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욕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가능한 경우에 합리적인 회수로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저기준규칙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중노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경우, 불결한 작업 후, 혹은 한여름에는 가급적 목욕횟수를 증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정해진 횟수의 범위 내에서 원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의류 및 침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의류와 침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를 국가가 부담하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 침구, 기타 생활용품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자비부담을 하는 경우에도 시설 내 판매소에서 공급하는 것에 한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자비부담의 의류와 침구를 적당한 때에 교환, 수선 또는 세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세탁이 제한되고 의류와 침구의 건조가 문제가 되어 수용자의 건강 유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행형법에서는 단순히 의류와 침구의 급여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반면에, 최저기준규칙이나 유럽형사시설규칙에서는 의류와 침구에 대한 급여 및 위생관리규정도 아울러 명시하고 있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모든 의류는 청결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침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피구금자는 지방 또는 국가의 관

습에 따라 개인용 침대 및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교환되는 개인용 침구가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용자의 의류와 침구에 대한 위생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수용자의 건강과 청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4) 급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급여라 함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의·식·주에 관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생활필수품을 지급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급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교정행정부목적인 수용자의 구금 및 교정교화작용은 수용자에 대한 급여작용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급여작용은 교정행정의 핵심이 된다고 하겠다. 둘째,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급여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정갑섭, 1995, 326면). 즉, 수용자에게 식량과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수용자에 대한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의류급여의 경우 결코 저급하거나 수치를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음식물 급여의 경우 피구금자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급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유럽형사시설규칙에서는 피구금자의 연령, 건강, 작업의 성질 및 가능한 범위에서 종교상 혹은 문화상의 요구를 고려하고, 근대적인 영양학 및 위생학의 기준에 따른 질 및 양을 갖춘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한 구금시설들은 시설에 따라서 식단의 구성과 식사의 질이 다소 달랐다. 어떤 시설에서는 여성 수용자들이 만족했고 어떤 시설에서는 식사의 질이 너무 형편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부식비는 기관별로 대동소이한데도 불구하고 시설마다 급식의 질에 차이가 나는 이유와 시설간 급식의 질이 좀더 균등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거실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는 질문에서 비위생적인 식수를 들고 있는 여성수용자의 수가 46명으로 전체 응답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간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요건 자체가 아직 미흡함을 말하는 것이다.

5) 운동 관련 문제점

우리나라의 행형법 시행령의 규정을 보면 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 운동을 시행한다고 필요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독거 수용자에게는 운동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30분인 경우가 60.1%이며, 20분 이내인 경우도 13.6%로 대부분의 여성수용자가 시행령에 규정된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운동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 수용자들에게는 나약하고 수동적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운동기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자유형의 집행은 자유박탈과 노역부과를 내용으로 하며 신체에 직접 고통을 가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격리된 시설 내에 수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수형자의 심신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도 쉽게 손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세심하게 배려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운동시설의 확충과 법률에 규정된 운동시간의 엄수는 수용자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성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수용자의 건강권의 보장은 생존의 배려로서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수용자의 건강권을 비롯하여 의료권 등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가권력의 존재 근거의 하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배종대, 정승환, 198면). 따라서 여성 수용자들의 운동시간을 가급적이면 규정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늘여주고, 운동 공간과 운동시설을 확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6) 의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기적인 건강진단의 시행 촉구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수용자는 독자적으로 의료혜택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수용자가 사회복귀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건강한 신체이다. 행형기간 동안 의료적 처우를 받지 못해서 질병에 걸린 상태 하에서 사회에 복귀한다면 이는 재사회화의 기본 전제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건강은 재사회 복귀의 최소한의 요건이다. 응보적 관점에서 수용자에 대한 의료권 보장을 소홀히 하는 것을 형벌해악의 내용으로 여긴다면 이는 수용자에게 일종의 신체적 고통을 부작위 형태로 부과하는 것으로 자유형의 본질을 신체형으로 변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용자에 대한 의료권의 보장으로서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질병의 예방이다. 질병의 예방을 위한 의료적 처우의 출발점은 건강진단이다. 수용자는 그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행형법시행령에는 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 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입소 후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55.7%이었고, 정기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5.4%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수용자의 경우 부인과 질환에 대한 정기검진은 79.6%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질병치료보다는 예방이 비용면에서도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건강진단의 시행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여성 수용자에 대한 건강 진단은 부인과 검진을 포함해야만 함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2) 일반의료시설 및 편의성의 확충

일차적으로 시설내의 병실에서 수용하여 의무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질병 치료를 일반의료라고 한다. 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모든 시설에서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유자격 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의료의 이용은 기본적으로 수용시설 내에 진료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하는데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조사대상 시설 10곳 중에서 6곳은 진료실 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여사동에 진료실이 없는 경우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서 진료를 받아야 되어 불편을 호소하거나 또한 교도관의 눈치가 보여서 진료신청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의료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없다. 진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적절한 의료처우를 받지 못하고 심각한 장애를 얻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이들이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2.4.12. 선고, 대판 2000다57719). 따라서 여사동에 진료실을 설치하고 항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 특별의료

특별의료는 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무관 외에 외부병원의 의사를 초빙하거나 시설 밖의 장소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최저기준규칙이나 유럽형사시설규칙에 의하면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의료의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

형법도 교도소장 등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등의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장의 재량적 허가사항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독일의 행형법은 수형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제 56조)는 의무조항을 두며, 수형자의 질병이 교도소 또는 소내 의무실에서 치료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여 소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의료의 허가 여부도 문제가 되지만, 비용 면에서의 접근성이 문제된다. 수용자에게 시설 내에서의 의료보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용자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혹은 기존의 납부하고 있었던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고가의 진료비를 자비부담하게 하는 것은 질병을 방지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특별의료에의 접근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현실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교도소 기타 준하는 시설 즉, 재소자로 통칭하여 미결과 기결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권 보장과도 어긋나며,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수용자의 보험료 미납을 우려한 조치라고 한다면 이는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인과 진료설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여성수용시설의 현실에서 고가의 검사비 등 진료비를 과다하게 자비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있는 수용자의 경우 가족의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또는 가족이 없는 생활보호자 등은 사회와 똑같은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 수용자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으나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9.2%가 있었고, 시설 내에서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경우도 10곳 중에서 3곳에 불과하였다. 최저기준규칙과 유럽형사시설규칙에 의하면 정신병자로 판명된 피구금자는 행형시설에 구금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시설로 이송되어야 하고, 기타 중대한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에 걸린 피구금자에 대한 관찰과 처우를 위하여 의학적 관리 하에 있는 특별시설이나 기구가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형시설의 의료업무 및 정신과 업무는 그러한 치료가 필요한 모든 피구금자에게 정신의학적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소에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행형법 제29조) 외에는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치료의 필요성과 접근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신질환자의 처우와 관련해서 미국 의사협회의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지침은 우리나라의 입법방향을 설정하는데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교정직원은 감정혼란, 성장지체, 화학약물의존성 등의 증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신입수용자는 자격 있는 심리학자에 의해서 면담되고,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임상심리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임상심리적 문제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한다. 넷째, 정신질환 수형자의 거실배정, 작업배정, 징벌, 그리고 이송 등이 임상전문가의 자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섯째, 당해 시설에서 치료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수형자는 즉시 가능한 시설로 이송한다.

7) 규율 및 징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도소 등에서 다수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또한 행형목적과 보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규율은 필요하다. 징벌은 일정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징벌의 요건과 처벌의 대상이 되

는 행위 및 제재 등에 관해서는 법률로써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행형법에서는 징벌사유에 관해서도 나열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적합하고 필요한 최소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징벌로써 의도한 목적과 침해되는 수용자의 권리 사이에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는 남성 수용자보다는 징벌을 받는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징벌 내용으로도 경고, 금치 15일 내지 1개월, 작업정지 등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의하면 암실수용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여성수용자가 4명이었고, 체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수용자가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저기준규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저기준규칙 제31조에 의하면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 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벌은 본질적으로 형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징벌은 어떠한 법률규정 없이 즉, 행형법에 명시된 종류 이외의 징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원칙이 무시되는 행형 현실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의 위배인 것이며,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수용자의 인권침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징벌 경험과 관련된 실태조사에서는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징벌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든지 또는 이의제기의 수단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며, 금치 전에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징벌의 내용으로서 금치의 경우 의무관으로 하여금 금치처분을 받은 자의 건강을 진단하게 한 후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만 집행이 가능하고, 그 집행 중에도 의무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건강상황을 진단하게 하며,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의하면 금치 집행과정에서 의사의 진단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금치의 집행 전후에 진단을 받지 못한 예가 많았다. 최근의 입법을 통해 과거에 지적된 징벌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의한

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행형 현실에서는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완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최저기준규칙과 형사시설규칙에 의하면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하여 주장되는 위반을 통고받고 이에 대해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징벌을 부과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의한 규칙 제7조 제1항 2에서도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의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계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저기준규칙에서는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결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행형법도 1999년 12월 28일 법개정을 통해 계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의하면 계구가 사용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명으로 나타났다. 계구의 사용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고, 실제 계구사용의 남용으로 인권침해의 논란이 끊이지 않으므로 계구사용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계구의 제식과 사용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한 계구의 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혹은 소란이나 싸움으로 징벌조사를 받거나 징벌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구사용요건이 사라지면 계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대법원도 “징벌 집행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9일 동안이나 계구를 사용한 것은 계구사용의 필요성이 사라진 시점까지 계속 계구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18922판결).

9) 정보 및 불복신청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청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고지

행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비인도적인 처우는 주로 교도행정의 은밀성과 폐쇄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형자 자신의 고충이나 불복의사를 외부에 알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권리구제수단으로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 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는 청원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82.9%로 구제권리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음을 모르는 경우도 72.4%를 차지하고 있었다. 1999년 행형법의 개정 이전에는 청원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청원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였지만, 수용자들에게 이러한 권리에 대한 고지와 홍보, 교육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권리구제방법으로 청원권은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1999년에 개정된 행형법에 청원에 관한 사항을 소장이 신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82.9%가 교육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법규정과 현실과의 격차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행형의 현실에서 위축되고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수용자가 적극적으로 청원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청원권을 행사하더라도 결국 행정조직상 내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인 통제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많다. 그 대안으로서 미국에서는 권리구제방법으로서 소송제기 외에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옴부즈맨을 두고 있으며, 현재 교정분야의 분쟁해결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형집행부를 별도로 두어 행형사안에 관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수형자의 권리침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법심사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청원에 대한 회답

실태조사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한 경우에 그 회답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9명 중 4명이 회답받지 못했다고 한다. 최저기준규칙이나 유럽 형사시설규칙에 의하면 모든 요구나 불복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나 근거 없는 것이 아닌 한 즉시 처리되고 지체 없이 회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의 청원사항을 접수한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수용자의 청원에 대해 상당기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더라도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행형법상으로 청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법무부 장관이 상당한 기간 내에 재결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수용자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진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진정함과 진정안내문이 수용시설에 부착되어 있지만 진정권에 대한 인식도에서 모른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었고, 진정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 경로가 교육이나 교도관인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청원권과 마찬가지로 수용자가 처음 입소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의 의의와 방법에 대하여 고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규정만 있을 뿐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에 구금된 여성수용자에 대해 추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 교도관들도 수용자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교육을 보다 철저히 받을 필요가 있겠다.

10) 외부와의 교통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여성 범죄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존재가 여성의 재사회화의 성공여부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재사회화

의 성공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 실패 41.2%, 성공 15.7%인데 비해, 자녀가 있는 경우 실패 13.9%, 성공 30.6%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김인숙, 1993, 41면). 자녀를 둔 여성수형자의 경우 그들의 원만한 수형생활과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접견 및 면접의 편의가 도모되어야 한다.

여성 수용자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과의 유대관계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정시설 내 처우에 있어서는 현재 시행 중인 합동접견, 전화접견, 귀휴제도의 적용범위의 확대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한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현재 합동접견은 주로 모범수에 한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접견제도, 귀휴제도의 취지가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장기수형자 뿐 아니라 단기수형자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여성수용자는 도주의 우려도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보안상의 위험부담이 적은 단기수형자에 대하여 확대 실시 하여야 할 것이다(김차승, 2001, 86면). 가족 구성원을 위한 방문접견의 확대로서 부모 역할 훈련이나 상담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도 제안할 수 있다(최응렬, 1998, 348면). 또한 임신부와 유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성 프로그램으로서 교도소 내에서 어린 자녀로 하여금 구금된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특수한 독채를 마련하는 프로그램도 제안할 수 있다(배종대, 정승환, 2002, 361면).

11) 도서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도서, 신문열람, 라디오, 텔레비전 시청은 모든 수형자에게 허용되어 있다. 수용자들의 사회 적응 감각유지 및 지식, 정보 습득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산상의 확충으로 교육과 정서함양의 도구로서 도서구입이 수용자의 요구도와 필요도에 수반하여 자비구입의 부담을 덜어내고 시설내 도서비치가 확대되었으면 한다. 유럽형사시설규칙에 의하면 모든 시설은

모든 종류의 피구금자를 위하여 오락적이고 교육적인 폭넓은 범위의 장서를 충분히 갖춘 도서관을 가져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구금시설 도서관이 외부의 지역도서관의 서비스망과 결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2조).

12) 종교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행형법 제31조에 의하면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회는 수용자의 도덕심을 회복하고 사회성을 배양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영적 감화를 통하여 심성을 순화하고 범죄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기준규칙과 유럽형사시설규칙에서는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내에서 거행되고 있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참석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여성수용자의 응답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형자의 기본권 중에서 그 성격상 법률로써도 절대적으로 제한 금지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들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는 어떠한 근거에서도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은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13) 피구금자의 이송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송은 교정처우의 편의상, 사건의 심리상의 필요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법령에 의하거나 직권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해 행해진다. 수용자를 이송할 때에는 여자수용자는 남자수용자와, 20세 미만의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여성 전용 교도소 한 곳을 제외하고는 남성 수용자와 혼용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송 중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인지 혹은 남성수용자의 언어적 폭력에 의한 성희롱 때문인지는 설문 조사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남녀 수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이송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수갑이나 포승의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이송하는 것이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

14) 수형자에 대한 특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누진처우는 수형자의 자발적 노력을 전제로 하여 수형자에게 시설 내 자유 제한의 정도를 완화시켜주는 일종의 교육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장기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작업가능여부에 따라 대상범위를 분류하고 있다. 누진처우제도는 수형자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선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수용시설내의 적응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점수산정 기준등이 획일화, 형식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책임점수는 수형자의 죄질과 개선가능성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개인적 특성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점수 역시 행상이나 작업성과 등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우 기술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저기준규칙에서와 같이 수형자의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형자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특전제도를 두기 위해서는 분류급의 탄력적 운용과 인격적 분류처우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프로그램과 전문기구나 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형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누진계급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며, 본인의 소득점수, 책임점수에 대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누진계급, 책임점수 등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당수 많았는데, 수형자의 승급의욕을 고취시키고 동기의식을 유발시켜 자발

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형자 자신의 분류급과 누진급에 대한 고지 및 정보제공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15) 수형자 교도작업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에 의하면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으며, 작업을 원하더라도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수의 여성수용자가 작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출소 후에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수용자도 3/4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도작업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도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성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수형자의 처우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되었으며, 지금까지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들의 처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교도작업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수용자의 대부분은 직원 식당, 시설청소, 세탁 등 단순한 시설관리업무를 행하게 되고, 여성수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역시 미용, 양장, 한복, 조리 등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 왔던 역할로 제한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을 뿐, 출소 후 여성 스스로가 자립하여 사회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한 전문기술 훈련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성수용자의 형기, 연령, 학력, 취미 등을 고려하여 정보처리반, 제과 제빵, 광고디자인, 유아관리, 공예품 제작, 첨단 영농 등의 현대적 유망직종을 개설하여 여성 수용자가 출소 후 자립할 수 있는 전문직업훈련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지역사회 내에 있는 직업훈련소와 중소기업체를 이용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출소 후 직장알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처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는 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까지 남성전유물로 인식되었던 분야에까지 진출하고 있는 선진제국의 형태를 모델로 선정하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사회여건에 부합되는 새로운 훈련 직종의 개발로 교정시설 내의 직업훈련의 종목을 생계유망종목으로 확대하여 나가고, 사회내 일반기업체의 지원을 받는 방법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6)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럽형사시설규칙에 의하면 모든 피구금자의 최소한의 개인적 필요성과 희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교육프로그램이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피구금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도덕심 및 자존심의 증진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제78조). 또한 실행 가능한 피구금자에 대한 교육은 a. 피구금자가 석방 후 어려움이 없이 그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교육제도와 통일성을 유지해야하고, 외부의 교육기관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1조).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에 대한 학과교육은 수형자등 교육규칙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동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학과교육의 종류에는 일반학과 교육,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과정으로 구분하고 일반학과 과정은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를 두고 있다. 이외에 검정고시 응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1995년 1월부터는 일반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학사제도를 수용자에게 개방하여 수용자에게 학업기회의 길을 넓혀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수용자들이 일반학과, 방송통신교육, 검정고시반, 독학사반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자수용자들은 전국교정시설에 20-30명 미만으로 흩어져 있고 나이가 많거나 아프거나 하여 실제로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대상자가 있어도 인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학과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에만 일부 운영되고 있다.

여성 수용자의 학력 분포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이 가장 많지만 초등졸 이하나 무학자에게 기초학력 배양을 위한 학과교육은 재사회화나 생계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졸 이상의 경우에도 구금으로 인하여 전문 지식의 습득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평생교육의 차원에서도 여성 수용자들의 방송통신대학과정, 검정고시반, 독학사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여성 교도관의 직무실태 및 직무만족도

여성 교도관의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여 여성 교도관의 근무여건과 직무 만족도가 여성 수용자의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성 교도관들은 남성 교도관에 비해서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도는 더 낮게 나타난 반면, 직무탈진감은 더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 교도관은 남성 교도관들보다 '정서적 소진', '비인격화' 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고, '성취감', '직무만족도', '직업 재 선택 기회'와 같은 항목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교도관이 남성 교도관에 비해 정서적인 불안정감이 높고 자신의 직무 수행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정서적인 탈진을 많이 느끼는 여성 교도관일수록 여성 수용자에 대한 비인격화 경향도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탈진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떨어지고, 교도관 직업을 다시 선택하지 않겠다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 교도관들은 같은 일의 반복, 수용자들을 관리하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수용자들에게 느끼는 배신감과 같은 부정정서를 여러 번 경험할수록 교정직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직급별로 비교했을 때 직급이 낮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직업에 대한 애착도 낮았다. 이는 신규 교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단순히 학과 성적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를 관리에 대한 적성

이 높은 사람을 선별해서 뽑아야 함을 시사해준다.

여성 교도관이 이처럼 직무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인원의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듯하다. 각 시설마다 여성 교도관의 숫자는 최소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한 명만 자리를 비워도 기본 업무에 차질이 올 정도였다. 여성 교도관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잦은 야근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가정 생활에 지장이 있었고, 보건의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은 남성 수용자 사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성 교도관들은 정보의 측면에서 다소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으며, 교육 혜택이나 인사고과점수에서 남성 교도관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여성 교도관의 근무환경은 남성 교도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는데 이것은 여성 수용자 사동의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여성 교도관이 더불어 겪게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여성 교도관의 직무 만족도, 정서적 탈진감, 비인격화 경향성은 여성 수용자들의 처우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여성 교도관들이 여성 수용자 전용 시설이 아닌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여성 수용자들과 일상을 함께하며 생활하고 있다. 여성 교도관을 단순 여성 수용자 전용 시설의 증설과 여성 교도관의 증원이 여성 교도관의 직무 만족도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4. 여성 수용자의 기본 인권보장을 위한 제안사항

1) 여성 수용자 전용 수용시설 및 설비 필요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8조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하며,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자용으로 할당된 설비의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저규칙 제23조에서는 여자시설에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형법에서는 제4조에 남자와 여자는 격리 수용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현재 행형실정으로도 여성만을 위한 처우시설은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에 불과하다. 단순히 이성간의 격리수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적합한 행형시설이 필요하다. 계속 증가하는 여성수용자의 수를 고려하면 여성수용자 전용의 시설이 필요하고 그 시설은 여성의 생리적 특성, 특히 산전·산후 간호와 부인과 진료를 위해 필요한 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전용시설이어야 한다. 현재 여성전용 수용시설이 청주여자교도소의 1개소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수용시설의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직업훈련의 선택 가능성 및 전문성 제고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71조에 의하면 교도작업은 가능한 한 석방 후 정직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수형자의 능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실용적인 직업훈련은 적당한 직업선택에 부합하고 시설관리와 규율에 필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형법 제35조에 의하면 ‘수용자의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에게 장래의 생계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행형법 시행령 제116조에 의해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 규칙이 수용자에게 원하는 종류의 작업의 선택권을 인정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행형법의 규정은 전적으로 소장이 정하는 규정상의 작업만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선택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실제 여성수용자의 작업현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내용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위한 양장, 자수, 미용, 요리 등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출소 후 많은 여성들에게는 가정주부로서 돌아갈 가정을 이미 상실했거나 경제적인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장으로서의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위해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할 형편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기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직업훈련은 출소 후에 여성수용자에게 독립된 생활의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더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여성수용자에게도 사회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하고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설관리와 규율이 적용되어야 하겠다.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도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고를 수 있는 적극적인 처우를 받아야 한다.

3) 가족 접견 등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7조에 의하면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하에 일정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행형법 제18조는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접견권은 기본권으로서 필요한 감독을 전제로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행형법은 필요할 때에는 소장의 재량에 의해서 제한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형법 시행령의 규정형식으로 30분 내로 접견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접견횟수를 매월 4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약칭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 1988년 12월 9일 채택)의 부속문서 원칙 제19조에 의하면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를 둔 여성수용자의 경우 그들의 원만한 수형생활과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처우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을 위한 방문접견의 확대실시로 부모역할 훈련이나 상담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미성년 자녀 접견시에 일반 접견실이 아닌 특별 접견실을 사용하게 해주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행은 현행 행형법의 규정에 따른 소장의 재량에 의해 시행처분이 아닌 여성수용자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 것이다.

참고문헌

- 강봉학, 「여자수용자의 처우실태와 개선방향」, 『교정연구』, 제7호, 1998.
-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 2002.
- 김성화, 「중국의 여성수형자 교정사업에 관한 신방법론 연구」, 『교정연구』, 제18호, 2003.
- 김인숙, 「여성출소자들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교정교화』, 제5호, 한국 교정교화사업연구소, 1993.
- 김병주, 「독일 헛센주의 교정제도(1)」, 『교정』, 제255호, 1997.
 , 「독일 헛센주의 교정제도(2)」, 『교정』, 제256호, 1997.
 , 「독일 바이에른주의 교정제도」, 『교정』, 제258호, 1997.
- W. Schädler, 김선복 역, 「독일연방공화국의 행형제도」,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2호, 1992.
- 김차승, 「한국 여성범죄의 원인과 처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남상철, 「교정조직의 발전적 개선방안」, 『경기행정논집』, 제14집, 2000.
- 박경선, 「여성의 특성과 여성범죄 실태분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6.
- 박봉진,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제24집, 2000.
- 박성근, 「영국의 교정처우(상)」, 『교정』, 제164호, 1989.
 , 「영국의 교정처우(하)」, 『교정』, 제165호, 1990.
- 박송주, 「일본교정제도 및 시설의 연수보고서」, 『교정』, 제185호, 1991.
- 배종대, 정승환, 『행형학』, 서울: 홍문사, 2002.
- 송태호, 「미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처우 상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정책연구』, 제2호, 2001.
- 송주석 외, 「일본교정시설관찰보고(3)」, 『교정』, 제173호, 1990.

- 신경우, 「뉴질랜드의 교정제도」, 『교정』, 1994.
- 신양균, 「독일 행형에 있어서 시설의 안전과 질서」, 『교정』, 제296호, 2000.
- 유병철, 「중국의 교정제도 소개」, 『교정』, 제257호, 1997.
- 유해정, 「교정시설 의료실태와 그 문제점」, 『시민과 변호사』, 제101호, 2002.
- 이보영, 「여성범죄의 추이 및 특징과 그 대책」, 『치안문제』, 제178호, 1996.
- 이윤희, 이수정, 공정식, 『분류처우론』, 서울: 동현출판사, 2000.
- 이영근, 「한국교정의료처우에 대한 제언」, 『시민과 변호사』, 제101호, 2002.
- 정갑섭, 『최신교정학』, 경기대학교 출판부, 1997.
- 정지만, 「교정시설에서의 교정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대구미래대학논문집』 제19집, 2001.
- 조준현, 「사회체계로서의 교정시설」, 『교정』, 제156호, 1989.
- 최응렬, 여성범죄자의 교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교정연구』, 제8호, 199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 199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수용자의 처우 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199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수용자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2000.
- 한경화, 「여성수용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재인식」, 『교정』, 제253호, 1997.
- 한인섭, 「재소자의 인권과 처우」, 『법과 사회』, 제3권 제1호, 1990.
- , 「미국의 교정시설과 그 운용상의 딜레마」, 『교정』 제286호, 2000.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 C., 1994.

Herbert, R., 「Women's Prisons; An Equal Protection Evaluation」, 『Yale Law Journal』 April, 1985.

Jurado, R., 「The essence of her womanhood: Defining the privacy rights of

- women prisoners and the employment rights of women guards」 ,
『*American University Journal of Gender, Social Policy and the Law*』 , 1999.
- Laddy, D. L., 「Can Woman Prisoners Be Carpenters? A proposed analysis
for equal protection claims of gender discrimination in educational and
vocational programming at women's prisons」 , 『*Temple Political and
Civil Rights Law Review*』 , Fall, 1995.
- Lee, J. A., 「Woman prisoners, penological interests, and gender stereotyping;
An application of Equal Protection norms to female inmate」 ,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 Fall, 2000.
- Metzler, D. K., 「Neglected by the System: Children of incarcerated mother
s」 , 『*Illinois Bar Journal*』 , August, 1994.
- Munsterman, J., 「Procreation from prison via the extension of the right to
imprisoned women」 , 『*UMKC Law Review*』 , Spring, 2002.
- Nesbitt, C., & Argento, A., 『*Female classification: An examination of the issue
s*』 , College Park, MD: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84.
- Weiser, J. R., 「The fourth amendment right of female inmates to be free
from cross-gender pat-frisks」 , 『*Seton Hall Law Review*』 , 2002.